YouTube 생중계

포용적 회복 연구단 포럼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 일 시 | 2022년 6월 15일 (수), 10:30 ~ 17:00

| 장 소 |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온라인 동시생중계
(Youtub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채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포용적회복연구단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개회사

|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KDI 원장 홍장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라는 주제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포용적 회복 연구단이 개최하는 오늘 포럼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포럼을 마련해주신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과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포럼에서 사회와 발표,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해주실 최재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코로나19 팬데믹은 '대전환기'에 비견될 만큼 우리 경제와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제질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극복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정부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하는 글로벌 공급망은 자국과 동맹국 간의 동맹 공급망으로 개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풍미했던 세계화의 물결이 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선진국에서 국가전략기술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정책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대면 소비와 재택근무가 확대되는 등, 우리의 생활방식까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K자형 양극화 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 및 사회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청년층은 취업 기회를 잃기도 했습니다. 또한 팬데믹은 디지털 저숙련자와 취약계층에 더욱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를 거치며 심화된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분열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어,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은 감염병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에 가져온 여러 거대한 변화들을 통해서도 분명 우리에게 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물가 불안, 금리 정상화에 따른 부채부담 증가라는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디지털경제와 그린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를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시켜 포용적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물론 이러한 연구과제는 개별 연구자나 개별 연구기관의 역량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며, 관련 연구기관들과 학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포용적 회복 연구단이 작년 5월 발족한 이후 준비해온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오늘 포럼은 아주 뜻깊은 자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포럼에서의 논의가 코로나19로부터의 완전한 회복, 나아가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이루어내는 지혜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홍 장 표**

환영사

|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해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라는 주제로 오늘 개최되는 포럼에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포럼을 주관해주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원장님과 한국개발연구원 홍장표 원장님 그리고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최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발표자 여러분들과 대담과 라운드테이블에 참여주시는 전문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직 방심할 때는 아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랜 기간 멈추었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의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고통을 감내해주신 국민들 덕분에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방역 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보건·의료 전문가 분들의 노고가 컸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민생, 산업, 일상의 여러 영역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멈추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회복 시 일상 회복을 어떻게 이룰지, 나아가 코로나19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던 양극화의 심화 등 우리사회의 약한 고리들에 대해 어떻게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에 대해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이루어졌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의 '포용적 회복 연구단'의 연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특히 연구단은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회복력(resilience)을 높여 팬데믹 이전보다 더 포용적이고 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각 영역의 정책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포럼은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되는 제안과 토론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 회복을 촉진하고 경제·사회적 양극화의 극복과 전 분야에 걸친 구조적 전환을 이루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이 '더 나은 대한민국(The Better Korea)'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표와 토론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오늘 포럼의 자리가 향후 경제·사회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향후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관심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포럼이 내실 있는 분석과 논의를 통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영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 해 구**

포용적 회복 연구단 포럼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PROGRAM

| 일 시 | 2022년 **6**월 **15**일 (수), 10:30 ~ 17:00

| 장 소 |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 온라인 동시생중계
(Youtub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채널)

| 프로그램 |

시간	세부 내용
10:30 ~ 10:50	**1부** 개회식 - **개회 및 내빈 소개:**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개회사:**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10:50 ~ 11:50	**2부** 기조 강연 및 대담 - **기조강연:** 최재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장 - **대담** · 좌장: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대담: 최재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2:00 ~ 13:30	점심식사
13:30 ~ 15:50	**3부** 민생과 경제, 일상 회복의 8대 제안 사 회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 발표1 **코로나19 정책대응 및 회복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2 **글로벌 공급망 개편과 정책과제** 김계환 산업연구원 발표3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정책과 재정여력 확보방안**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4 **자영업자 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발표5 **일자리 회복과 정책과제**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발표6 **양극화 극복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방안**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7 **지속가능한 방역인프라를 위한 공중보건체계 구축방안** 김동현 한림대학교 발표8 **지역공동체 회복 방안** 황 하 한국행정연구원
16:00 ~ 16:50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 좌장: 이창곤 한겨레신문 · 토론: 김주현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정주영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김수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6:50 ~ 17:00	폐회

포용적 회복 연구단 포럼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CONTENTS

기조강연 최재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장 ····· 1

발표 1 **코로나19 정책대응 및 회복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 ····· 19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 2 **글로벌 공급망 개편과 정책과제** ····· 35
김계환 산업연구원

발표 3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정책과 재정여력 확보방안** ····· 51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 4 **자영업자 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 65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발표 5 **일자리 회복과 정책과제** ····· 79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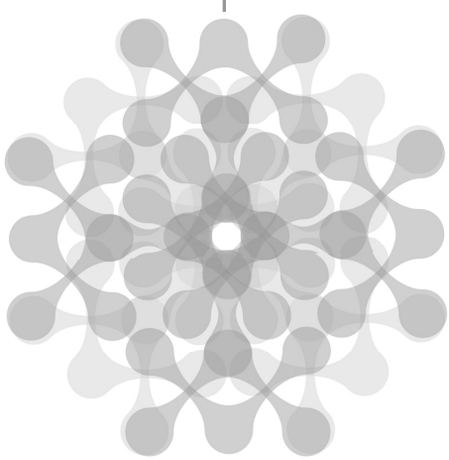
발표 6 **양극화 극복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방안** ····· 91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7 **지속가능한 방역인프라를 위한 공중보건체계 구축방안** ····· 113
김동현 한림대학교

발표 8 **지역공동체 회복 방안** ····· 147
황 하 한국행정연구원

기조강연

최재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장



생태적 전환과 ESG
Ecological Turn and ES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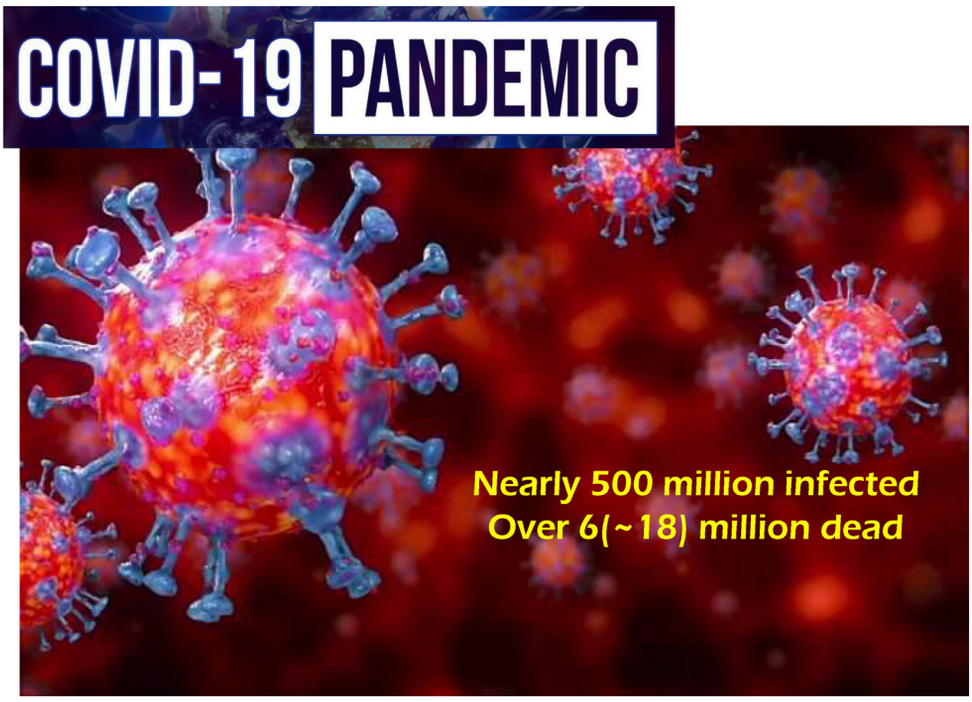


최재천
통섭아카데미
이대 에코과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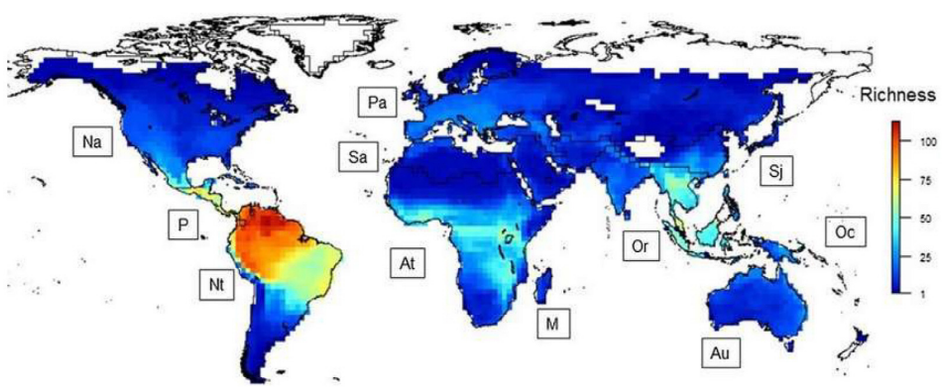
생명
다양성
재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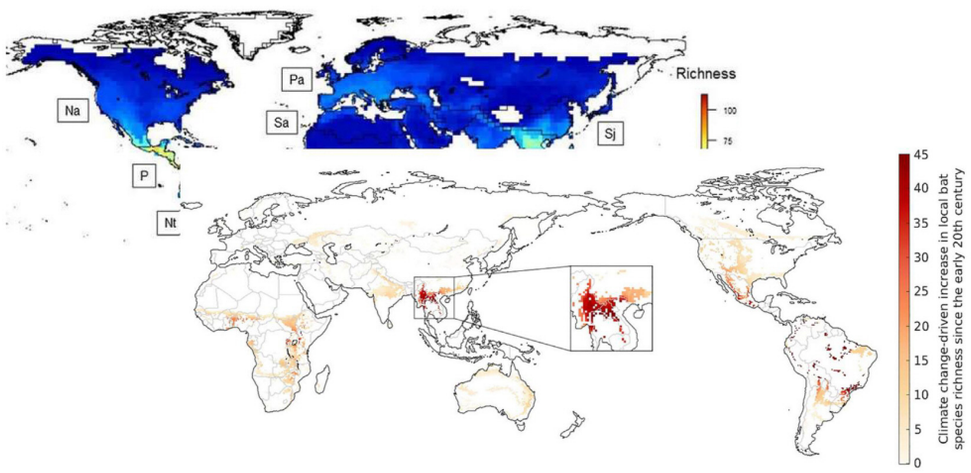


지구온난화와 박쥐의 분포 변화



지구온난화와 박쥐의 분포 변화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May 2021)







2021 Floods in Western Europe



Sustainability for future generations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사무총장
IPCC Secretary General 이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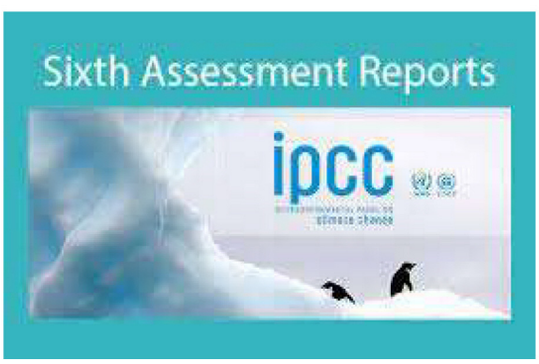


2℃ → 1.5℃
By 2030~2052

"10 years fa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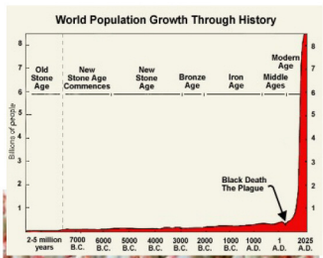
CBD President (2014~2016)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의장





생물다양성 불균형이 만들어낸 블루 오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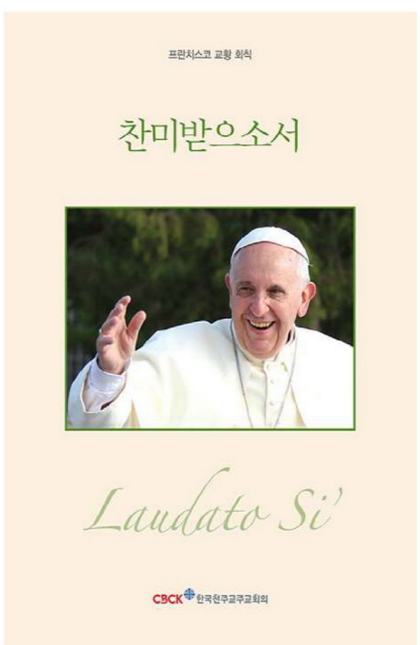








Ecological sin
생태적 죄





Evolution of vaccines

Triumph of life sc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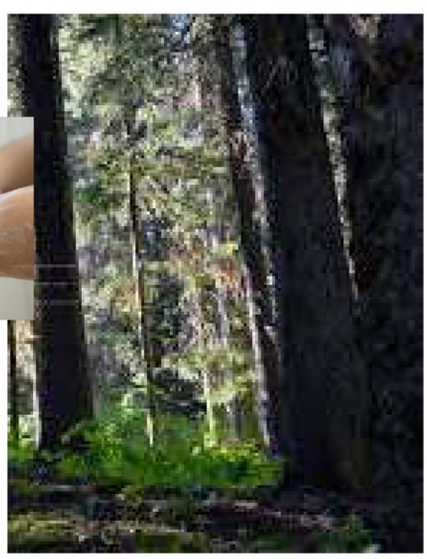


'화학' 백신

'Chemical' Vacc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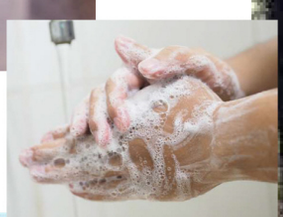
생태 백신

Eco-vaccine



행동 백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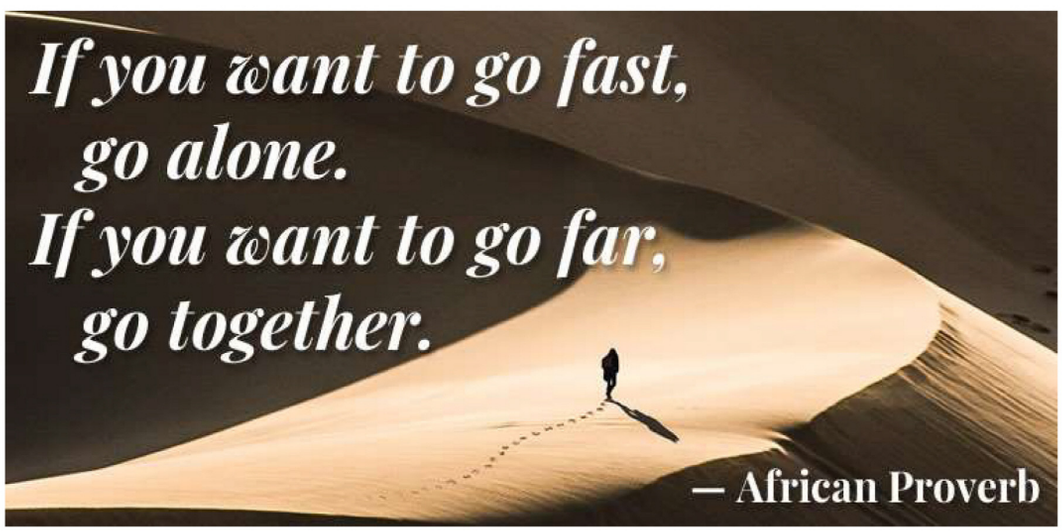
Behavior vaccine








자연 보호 → 생태 백신


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 African Proverb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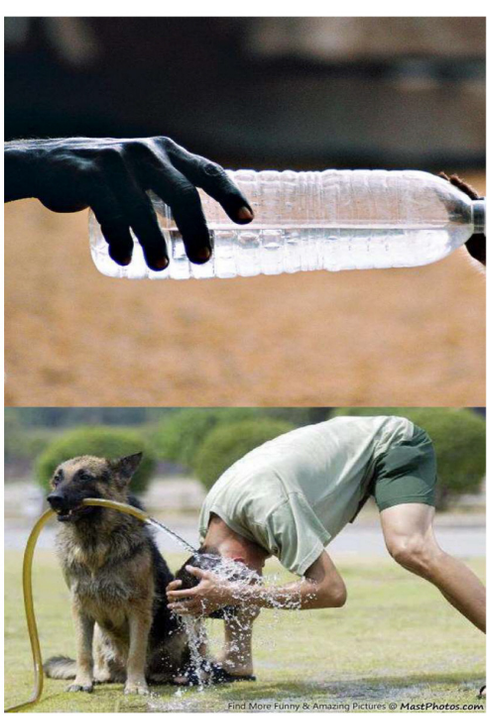
Selfish
이기적

Altruistic
이타적





Reciprocating
보응적(報應的)









"Ecological turn"
생태적 전환

국제사회--국가--기업--개인
ESG

From *Homo sapiens*
to *Homo symbious*



"Ecological turn"
생태적 전환

국제사회--국가--기업--개인

From *Homo sapiens*
to *Homo symbious*



"I am riding much bigger BMWs"

Bus-Metro-Walk



Plastic Planet



"I am always carrying this in my backp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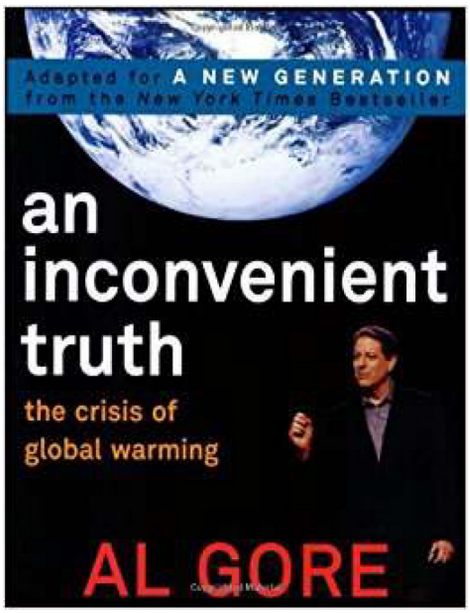


Foldable shopping bag


50 B.
80 B.
35 B.
35 B.


50 B.
80 B.
"벌레 먹은 과일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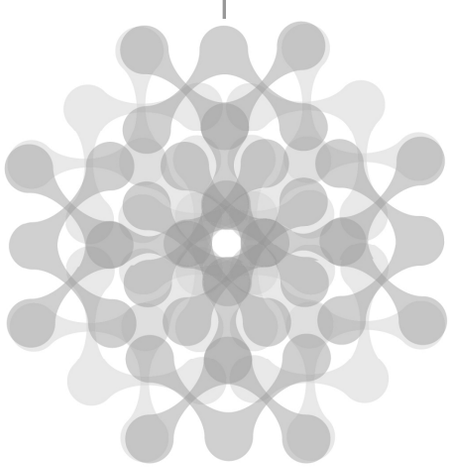
"아주 불편한 진실과 조금 불편한 삶"



발표 1

코로나19 정책대응 및 회복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포용적회복연구단 포럼: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2022.6.15)

코로나19 대응 경제정책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부연구위원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목 차

Ⅰ.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경제 현황
Ⅱ. 주요국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Ⅲ. 주요국 재정지출 규모 비교
Ⅳ. 최근 세계경제전망 및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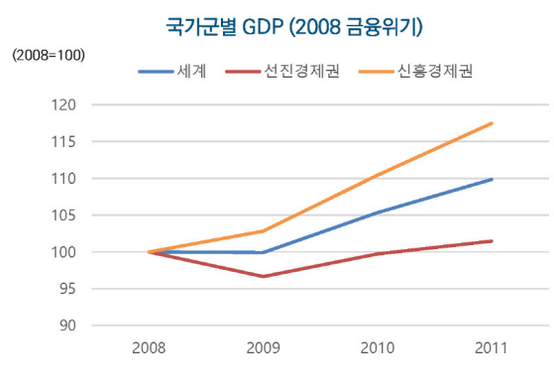
Ⅰ.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경제 현황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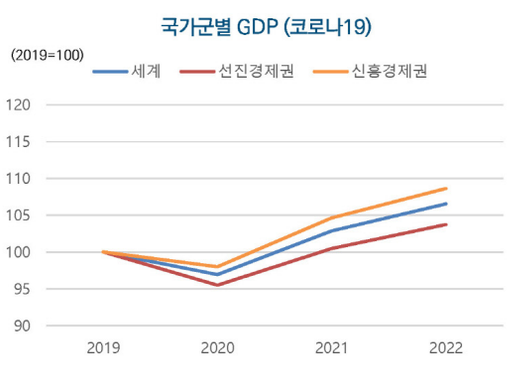
Ⅰ.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경제 현황

최악의 경기침체 경험 후 반등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
  - 코로나19 감염확산 및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 공급과 수요 동시 위축
  - 선진경제권과 신흥경제권이 모두 역성장 경험
- 확대재정, 백신 보급, 비용효율적 방역조치 개발 등을 통해 2021년 감염 확산 중에도 성장률 반등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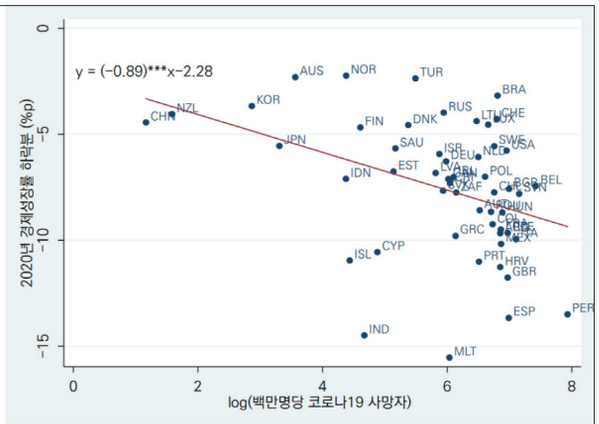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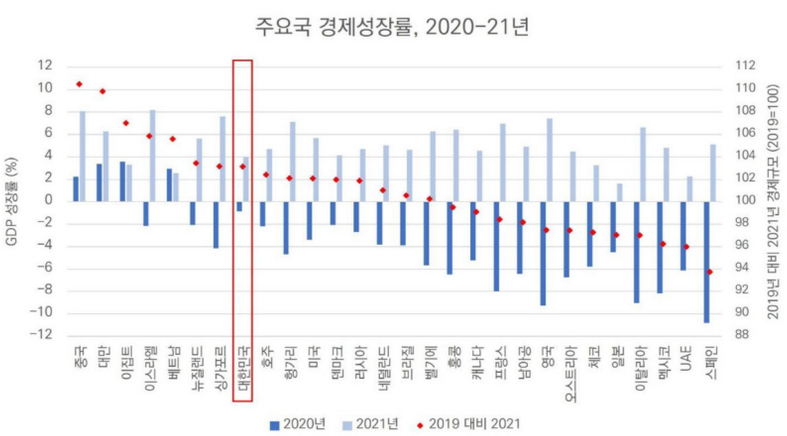
4

I.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경제 현황

국가별 경제피해 및 회복 추이

- 초기 방역대응 강도가 높을수록 경제피해가 컸으나, 중장기적으로 감염확산을 통제한 곳에서 경제피해도 적었음
- 2021년 경제회복은 백신 접종 포함, 비용효율적 방역 대응에 따라 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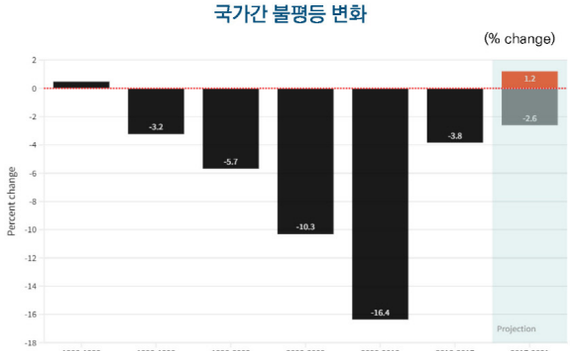


I.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경제 현황

글로벌 차원에서의 불평등, 악화로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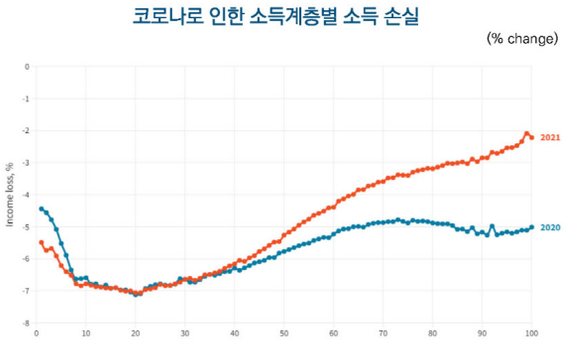
- 국가간 불평등 한 세대 만에 악화로 반전
  - 2017-21년 사이 국가간 불평등이 1.2% 더 악화하는 것으로 추정: 기존 예측치(2.6% 개선)에 비해 악화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타격은 저소득층에 더욱 가혹
  - 2020년과 2021년 하위 40% 계층은 6%대 중반의 소득 감소를 기록한 반면 상위 40% 계층은 5% 내외 감소

국가간 불평등 변화



자료: https://blogs.worldbank.org/opendata/covid-19-increasing-global-inequality

코로나로 인한 소득계층별 소득 손실



자료: https://blogs.worldbank.org/opendata/covid-19-increasing-global-ineq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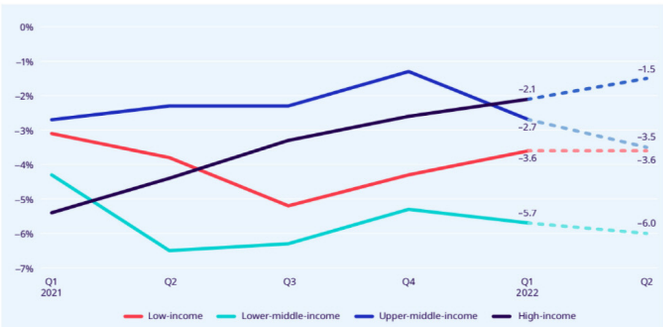
I.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경제 현황

고용 타격은 저소득국가, 중소기업에 더 가혹

- 근로시간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
  - 반면 중/저소득국가에서는 근로시간이 회복국면에 진입하지 못함
-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0% 이상 근로 손실 발생
  - 50명 초과의 중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시간은 8.7% 하락에 그침.

국가군별 근로시간 변화

(2019년 4분기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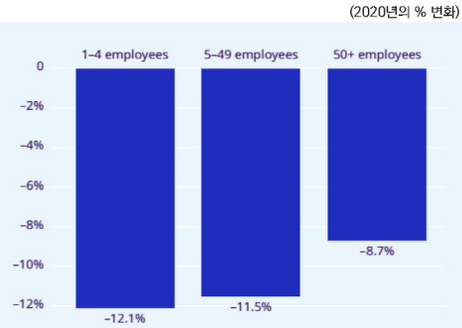


Note: Estimates up to 2022 Q1 are based on the ILO nowcasting model; estimates based on the projection model are depicted as a dashed line.

Source: ILOSTAT database, ILO modelled estimates.

사업장 규모별 근로시간 변화

(2020년의 % 변화)



Source: ILO estimates based on ILO Harmonized Microdata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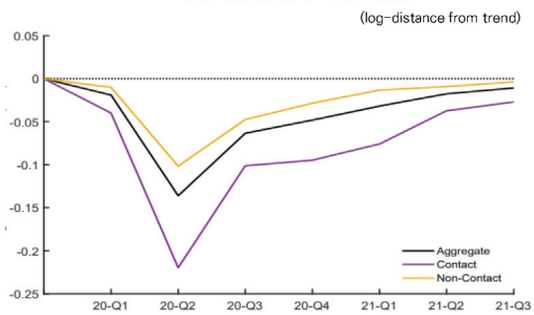
I.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경제 현황

산업간, 산업내 승자와 패자 또한 명확히 구분

- 코로나19 이후 각 산업의 성과(실질수입 기준)거 대면 부문 – 비대면 부문 사이 양극화
  - 건설, 제조, 도매 등 비대면 산업은 기존의 트렌드를 회복하였으나, 소매, 항공, 교육 등의 대면 산업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느림
- 대면 부문 내에서도 승자와 패자의 차이가 명확히 나타남
  - 대면 산업의 승자는 위기 동안 오히려 크게 성장, 반면 비대면 부문에서의 승자와 패자 차이는 그만큼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음.

미국 대면 산업과 비대면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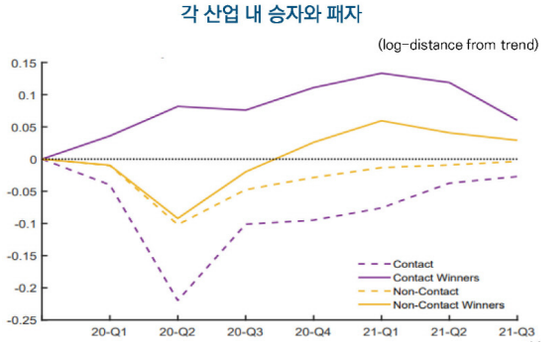
(log-distance from trend)



자료: Cirelli and Gertler(2022)

각 산업 내 승자와 패자

(log-distance from trend)



자료: Cirelli and Gertler(2022)

Ⅱ.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국제비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II.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국제비교

코로나19 대응 경제 정책

구분	내용
(1) 재난지원	코로나19 발발이 직간접적으로 촉발한 경제 위기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실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
(2) 손실보상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 등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3) 보건의료 지출	의료진 및 의료기관 보상, 격리 시설, 입원 병상 및 설비 확충, 마스크 및 개인보호장비 구매, 백신 및 치료제 개발/구매 등 보건의료 대응에 사용되는 지출
(4) 경기부양	현금 지급, 세금 면제, 금리인하, 양적 완화 등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유동성 공급 정책
(5) 경제구조 전환 지원	친환경, 디지털 경제 등 팬데믹 이후 경제구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 (예: 미국 BBB법, 유럽 NextGenerationEU Fund, 한국판 뉴딜)

10

II.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국제비교

유행 초기: 재난지원을 위한 재정 집행 (보편 & 신속 지출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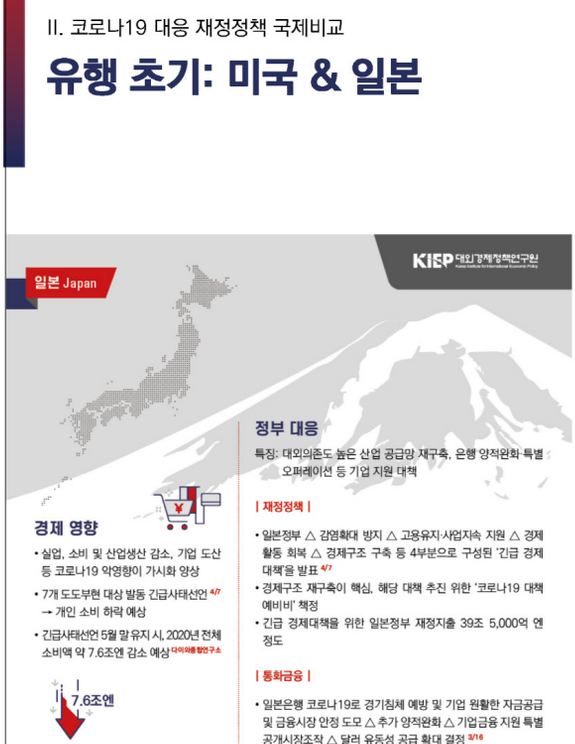


자료: KIEP (2020.4)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11

II.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국제비교

유행 초기: 미국 & 일본





자료: KIEP (2020.4)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12

II.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국제비교

유행 중기: 초기 지원 연장 (선별)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대규모 투자

-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인프라 투자 중심
- Keywo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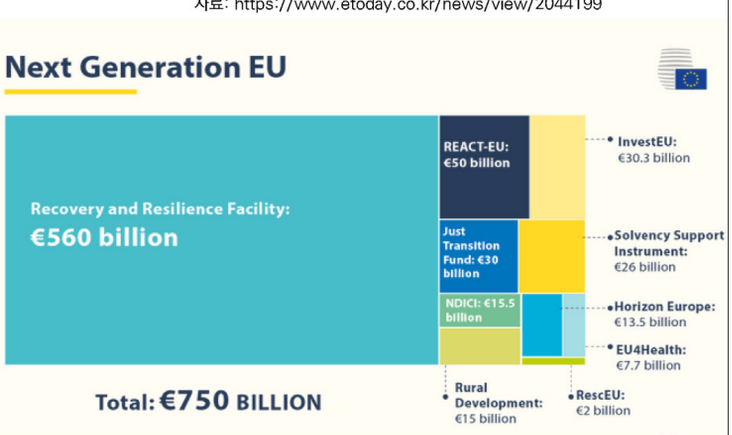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불평등 해소



자료: https://www.etoday.co.kr/news/view/2044199



자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69998



자료: EU Council

15

II.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국제비교

백신 접종과 '단계적 일상회복'

- 백신 접종 시작되면서 서서히 방역 완화
- '고강도 방역 + 손실보상' 조합 탈피
  - (미국) 2021.5 급여보호 프로그램 중단; 2021.12 경제재난대출 중단
  - (영국) 2021.12 중소기업회복대출지원 한도 축소
  - (북유럽) 2021.11~ 방역 조치 완화하며 재정지원 축소/중단
- 경제구조 전환 후속대책 발표
  - 친환경, 디지털 산업 활성화
  - '공정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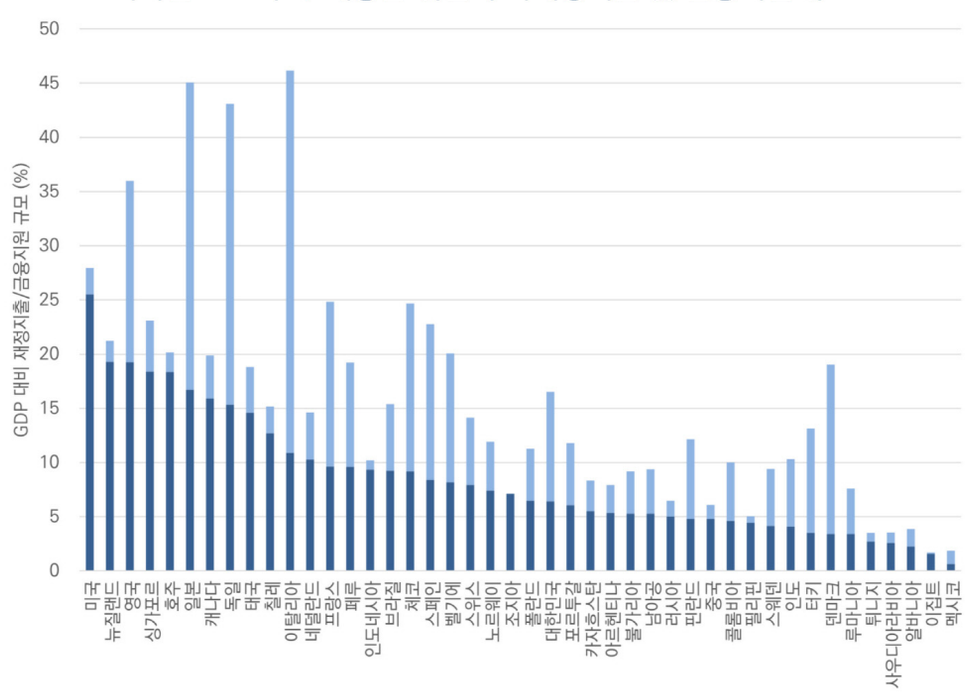
자료: https://tongsangnews.kr/webzine/2109/sub1_2.html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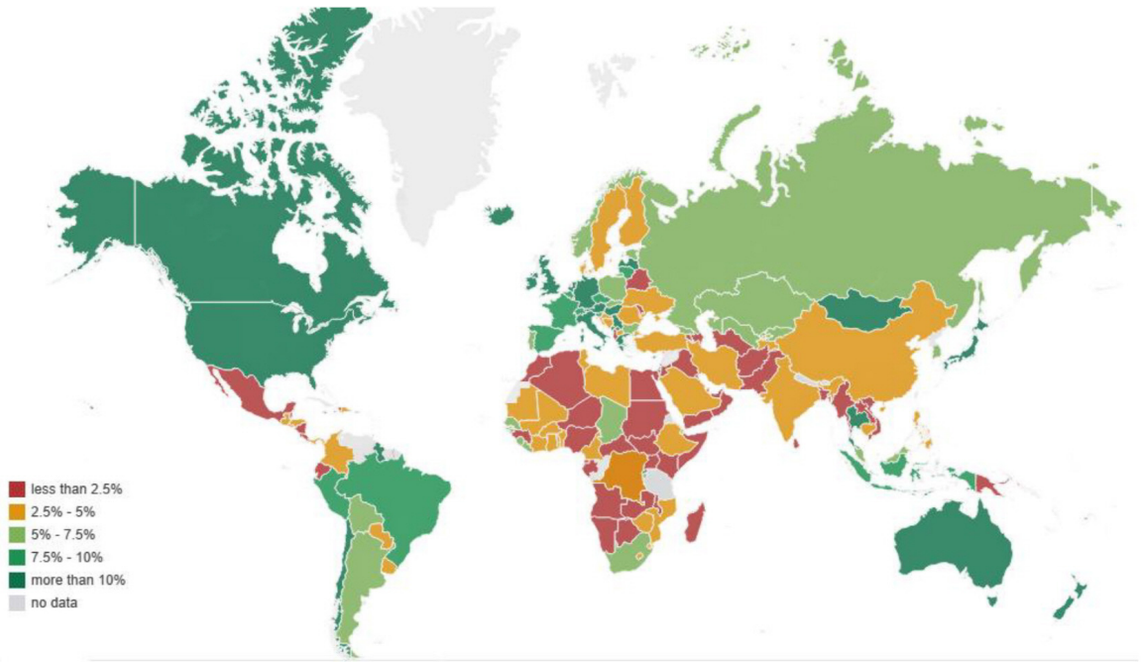
Ⅲ. 주요국 재정지출 규모 비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가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재정지출 및 금융지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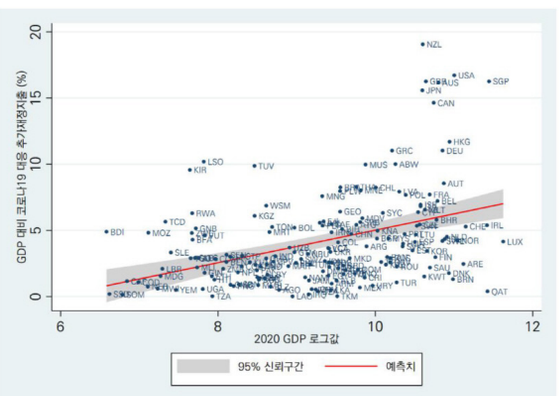
Additional Spending and Forgone Revenue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as of Sep. 2021. Percent of 2020 GDP)*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Fiscal-Policies-Database-in-Response-to-COVID-19

Ⅲ. 주요국 재정지출 규모 비교

재정지출 결정요인? GDP & 전년도 부채비율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Ⅲ. 주요국 재정지출 규모 비교

재정지출 결정요인? GDP & 전년도 부채비율

〈표 4-7〉 회귀분석 결과 (1):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과 설명변수 간의 상관관계

	종속변수: 2020년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추가재정지출 규모					
	(1)	(2)	(3)	(4)	(5)	(6)
유행규모	-0.25	-0.427**	-0.444**	-0.101	-0.149	-0.132
	(0.196)	(0.203)	(0.209)	(0.173)	(0.176)	(0.184)
정부대응 강도	-0.015	-0.008	-0.007	-0.018	-0.016	-0.015
	(0.016)	(0.018)	(0.018)	(0.019)	(0.020)	(0.020)
1인당 GDP	1.571***	1.157***	1.011*	1.171***	0.940***	0.907*
	(0.359)	(0.403)	(0.585)	(0.309)	(0.313)	(0.490)
전년도 국가부채	0.030***	0.022**	0.022**	0.028***	0.023***	0.021***
	(0.009)	(0.009)	(0.009)	(0.007)	(0.007)	(0.007)
기축통화 사용여부		3.283***	3.274***		2.488***	2.484***
		(1.025)	(1.062)		(0.899)	(0.908)
실업률 상승		0.358*	0.380*		0.173	0.18
		(0.215)	(0.214)		(0.218)	(0.219)
자영업 비중			-0.452			0.393
			(2.042)			(2.112)
병상 수			0.06			0.161
			(0.130)			(0.133)
상수	-10.379***	-6.709**	-5.31	-7.420***	-5.335**	-5.5
	(2.618)	(2.802)	(5.435)	(2.562)	(2.579)	(5.184)
지역 고정효과	X	X	X	O	O	O
R^2	0.262	0.33	0.259	0.321	0.392	0.419
관측치	149	147	147	147	149	147

주. 괄호 안은 강건표준오차, * p<0.10, ** p<0.05, *** p<0.010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Ⅳ. 최근 경제전망 및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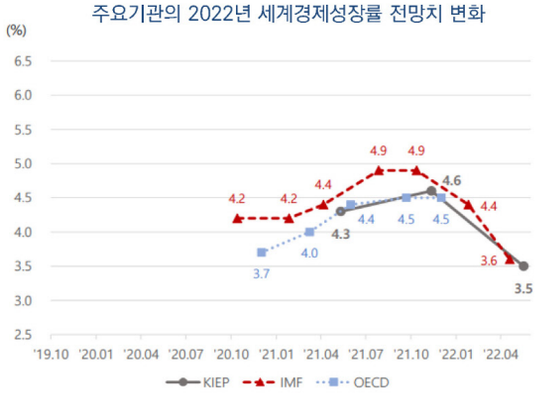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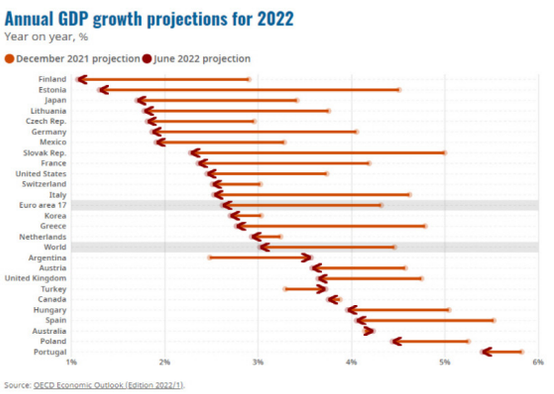
Ⅳ. 최근 경제전망 및 정책과제

최근 세계경제 성장 전망은 불투명

- IMF(2022.4), KIEP (2022.5), OECD (2022.6), World Bank (2022.6) 등 모두 회복세 둔화 예상
  - (1) 우크라이나 전쟁
  - (2)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한 통화 긴축
  - (3) 코로나19 방역정책의 불균형

주요기관의 2022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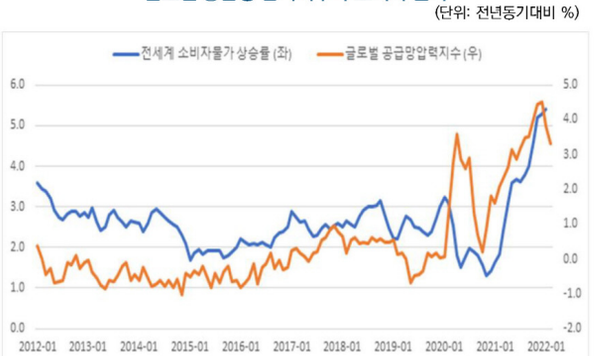
Ⅳ. 최근 경제전망 및 정책과제

공급망 압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급불일치, 부품 확보 어려움, 노동공급 부족, 운송 지연 등이 지속
  + 중국 봉쇄 영향으로 공급망 압박 장기화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및 곡물 물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와 소비자 물가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IHS Markit,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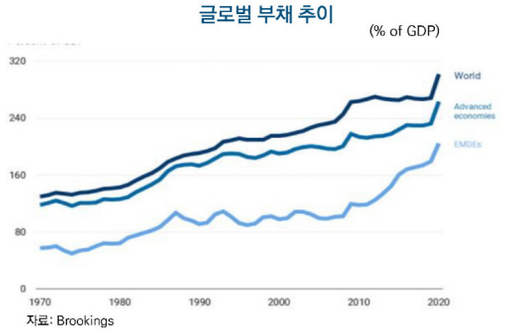
22

Ⅳ. 최근 경제전망 및 정책과제

민간 및 공공부채 급증에 따른 부담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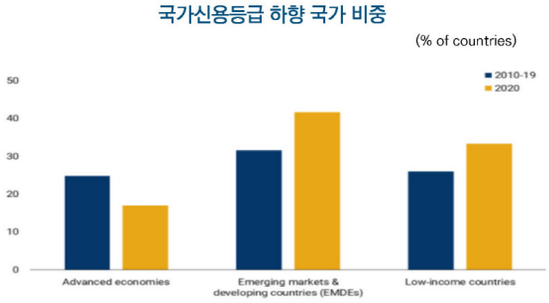
- 2020년 현재 전세계 부채 총합은 GDP 대비 3배 초과, 2020년 한 해에만 30%p 증가
  - 선진국의 부채는 물론, 신흥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름
- 금리 상승기 및 자산시장 위축기와 겹쳐 국채를 통한 재원조달에 어려움 예상
  - 인플레이션과 총량변수 회복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로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나 자산시장 여건은 부정적

글로벌 부채 추이



자료: Brookings

국가신용등급 하향 국가 비중



자료: Brookings

Ⅳ. 최근 경제전망 및 정책과제

정책 과제: 지속가능한 재정지출

- 재정 지출을 통한 장기 경제성장 잠재력 보존
  - 재난의 불평등성: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타격 (e.g. 소상공인, 비정규직, 저임금 서비스 종사자, 여성 노동자, 청년 구직자)
  - 불평등한 피해는 전체 경제구조에 영향을 미쳐서 성장 동력 훼손 가능
  - 구직자 근로의욕 저하, 자영업자 도산으로 인한 임대인 금융비용 손실,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 교육 공백으로 인한 인적자본 손실
  -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손실 최소화 필요: 장기적으로 재정 수입에도 도움
- 재정지출의 부작용 존재
  - 물가 상승 압력 (+ 대외 환경 불리)
  - 국가 재정 고갈 및 부채 증가

→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선별적으로 생산성 보존에 집중하며 경제구조 전환 지원
→ 적절한 세부담 동반하여 지속가능성 담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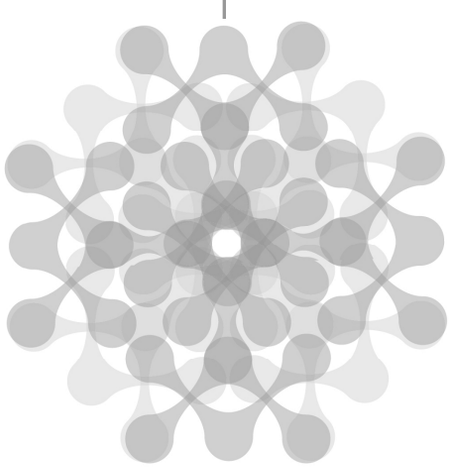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감사합니다

발표 2

글로벌 공급망 개편과 정책과제

김계환
산업연구원



포용적회복 연구단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글로벌 공급망 개편과 정책과제

2022. 6. 15.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김계환
동향 · 통계분석본부 김바우

목 차

1. 공급망 글로벌화의 이해

2. 인도 · 태평양 지역 공급망 글로벌화의 효과

3. 탈중국 공급망 재편의 주요 경향

4. 정책과제

KIET

3

1. 공급망 글로벌화의 이해

4

■ 생산 조직 방식으로의 GVC

○ 가치사슬은 제품과 서비스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의 모든 가치창조 활동의 연쇄
○ 이전에는 수직통합형 산업조직이 생산조직의 주류를 이루었으나 GVC와 함께 가치창조 활동이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여러 나라에 걸쳐 이루어지는 생산 조직 방식이 주류로 부상

■ 국제 차익거래(arbitrage), 언번들링(unbundling)과 글로벌화의 略史

○ Baldwin은 글로벌화의 동력을 국제(국가간) 아비트리지(arbitrage, 가격차 이용 거래)로 지목
○ 재화의 이동이 용이해지면서 무역 가능한 상품의 가격차를 이용한 거래가 확산되며 첫 번째 글로벌 언번들링, 즉 생산과 소비의 지리적 분리과정이 발생
○ 1990년대 이후 IC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아비트리지, 재화만이 아니라 공장의 국가간 이동을 통한 차익거래가 가능해짐.
○ 기업들은 생산의 특정 단계를 임금 등 비용 조건이 유리한 개도국으로 이전, 이는 두 번째 글로벌 언번들링, 즉 생산단계 분화를 의미
○ 세 번째 언번들링은 Digitech(telemigration, telecommuting기술) 발달에 의해 과거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서비스 산업의 차익거래에 의해 발생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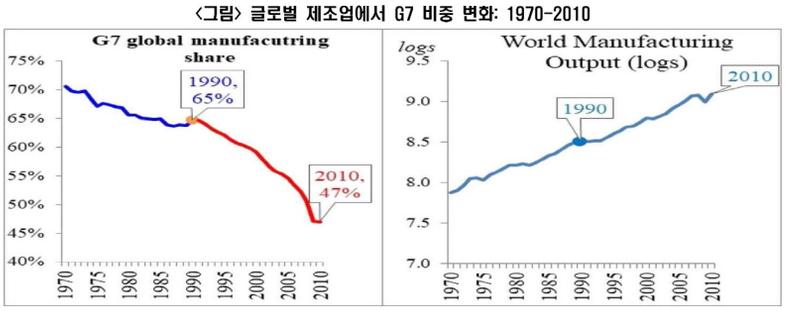
2. 인도 · 태평양 지역 공급망 글로벌하의 효과

6

(1) 2차 언번들링 이후 중국이 부상하면서 G7 국가의 탈산업화, 글로벌 생산의 대이동(Grand Shift)이 진행

- (2차 언번들링에 의한 글로벌 산업지형의 변화) G7의 글로벌 제조업 비중은 두 차례에 걸쳐 크게 감소: 1970-1990, 1990-2010년. 전기에는 70%에서 65%까지 소폭 감소, 그러나 1990년대 이후 65%에서 49%까지 급격히 감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세계 제조업 생산은 유사한 속도로 증가함. 이는 1990년 이후 제조 신흥국의 제조업 생산 증가가 G7의 생산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을만큼 빨리 증가하였음을 의미

〈그림〉 글로벌 제조업에서 G7 비중 변화: 197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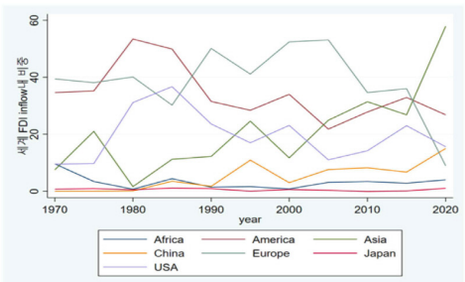
출처: Baldwin and Okubo, 2019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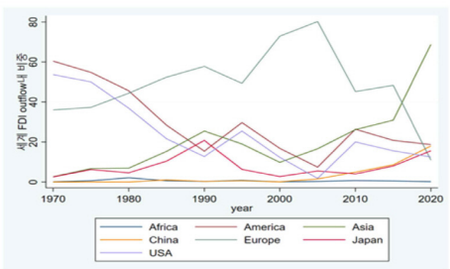
(2) 글로벌 투자구조 변화: 중국 超집중 현상

-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럽과 북미지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의 70%, 유출의 50% 가량을 차지하였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 그 비중이 급격히 감소
- 중국의 FDI 유입은 1990년대 이후 일본이나 아프리카 전체를 뛰어넘으며 주요 투자국으로 부상, 주목할 것은 중국보다 기타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아시아 지역의 GVC 참여도 증가를 반영

<그림> 세계 해외직접투자 순유입(inflow)의 지역별 구성비



[그림] 세계 해외직접투자 순유출(outflow)의 지역별 구성비



출처: 자료: UNCTAD로부터 저자 작성.

8

(3) G7의 탈산업화와 높은 대중국 수입의존도

- 최근 반세기동안 세계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증가, 북미지역의 1965년대아시아 수입비중은 14.5%에 불과, 1990년 30%를 돌파한 이후 2020년에는 39.4%까지 증가
- 1990년대 이후 중국은 북미, 유럽, 아시아지역의 주요 수입상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일본은 그 지위가 대폭 축소
- 1990년에는 일본 및 아시아 NICs 4국이 미국 제조업 무역수지 적자의 약 75%를 차지하였으나, 2017년에는 동 비중이 11%로 축소, 동기간 중국과 아세안의 비중은 16%에서 71%로 상승

<표 > 주요 대륙의 수출입 상대별 구성비 추이 (%)

수입국	북미					유럽			아시아		
수출국	북미	유럽	아시아	일본	중국	북미	유럽	아시아	북미	유럽	아시아
1965	37.4	23.3	14.5	8.2	0.1	14.8	57.8	4.9	30.2	16.7	30.6
1970	40.4	23.1	17.9	11.7	0.0	13.8	62.8	4.7	30.8	15.7	29.4
1980	27.2	17.7	21.0	11.9	0.4	10.2	60.2	6.6	19.8	10.9	33.7
1990	28.1	21.0	31.5	17.1	2.9	9.1	70.6	10.1	21.2	17.5	43.5
2000	27.7	20.2	31.4	11.4	7.8	9.2	70.3	13.0	16.5	15.9	52.0
2005	23.7	19.9	33.0	8.0	14.7	6.3	71.4	14.5	11.5	15.7	55.1
2010	21.0	18.6	34.5	6.1	18.4	6.1	68.6	17.0	9.7	15.3	51.7
2015	20.3	20.8	37.7	5.6	20.2	6.4	69.0	17.6	10.1	16.2	54.0
2020	17.3	23.2	39.4	5.0	19.0	6.0	69.2	19.2	9.2	16.5	55.2

자료: UN Comtrade로부터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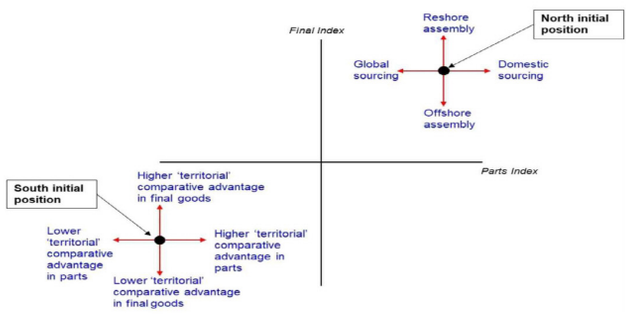
9

(4) 국별 GVC 이행 경로도와 실증적 비교우위

○ Baldwin and Okubo (2019)는 실증적 비교우위를 측정하기 위한 ECA 지수를 구성

- ECA(empirical comparative advantage)는 산업별로 부품과 최종재에 대해 정의 가능하며, 초기 위치와 이동 방향을 분석하여 일국의 GVC상 역할 변화상을 가늠할 수 있음.
- 부품에 대한 ECA 지수를 횡축, 최종재화에 대한 지수를 종축으로 설정한 그림을 GVC 이행 경로도로 정의, 이를 사용하여 국가별 산업화-탈산업화 경로의 특징을 분석

<그림> ECA 지표의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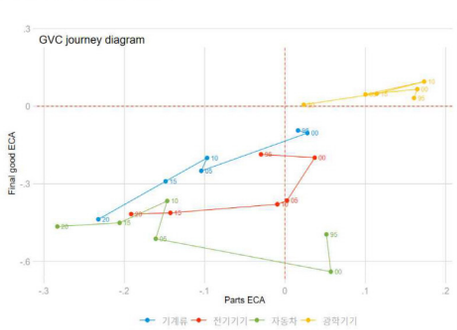
자료: Baldwin and Okubo (201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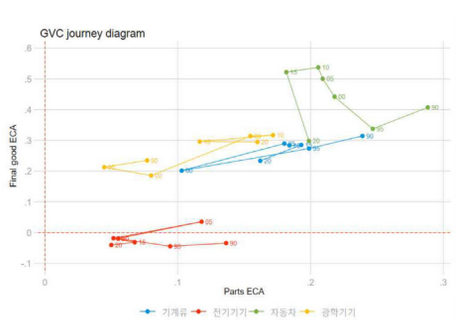
○ **국별 GVC 이행 경로도를 통한 국별 산업화-탈산업화 경로 특징을 비교분석**

- 미국은 출발점에서부터 최종재/중간재에서 모두 비교열위에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악화
- 독일과 일본은 출발점 기준 모두 비교우위에 있었으나 글로벌 소싱과 오프쇼어링이 지속되며 우위가 약화되는 양상, 다만 독일의 수송기계와 같은 예외도 있음

<그림> 미국의 GVC 이행도



[그림] 독일의 GVC 이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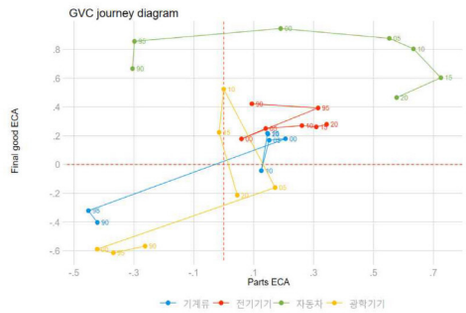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로부터 저자 작성.

○ 반대로 한국과 중국은 대체로 분석대상 업종이 경쟁 열위에서 우위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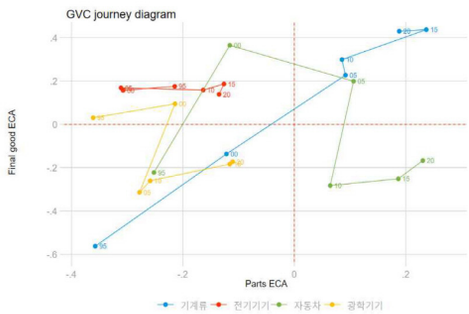
- 한국은 최종재보다는 중간재 경쟁우위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 전기 광학에서는 최종재가 경쟁우위에서 열위로 변화도 있어, 중간재 생산으로 특화가 진행되었음을 의미.

11

〈그림〉 한국의 GVC 이행도



〈그림〉 중국의 GVC 이행도



자료: UN Comtrade로부터 저자 작성.

12

3. 탈중국 공급망 재편 주요 경향

13

(1) 글로벌 공급망 구조 변화의 주요 동력과 재편 방향

■ **가치중심 통상정책의 확산과 클럽형 무역질서**

○ 강대국 패권경쟁과 경제안보 정책의 부상

○ 디지털 기술혁명의 새로운 단계

○ 기후 환경 위기와 그린 딜, ESG 규범의 확산과 무역 규범화

○ 글로벌 경제의 루이스 전환점

14

■ **가치 기반 블록화와 부분적/선별적 디커플링**

○ **re-shoring, near-shoring, friend-shoring 경향 => 지역 중심 블록화와 가치 기반 블록화**

- 공급망의 **지역 블록화** 경향 강화=>지산지소형 공급망 강화
- 미·중간 GVC **디커플링**과 무역과 투자의 가치기반 **블록화** 강화

<표> 선별적 · 부분적 디커플링과 복합지정학

		미-중 디커플링		
		<== 관여	선별적, 부분적 디커플링	전면적 디커플링 ==>
산업의 구분	전통산업	G2	협력	분리
	첨단산업	G2	분리	분리
국제경제질서	국제경제질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정경분리)	복합지정학 (국제정치와 경제의 융합, 국가개입의 증가)	냉전 (국가간 전쟁 수단으로서 경제)
		지정학이 아니라, 지정학의 시대	표준, 네트워크, 기술동맹	영토기반 지정학
	지배적 생산방식	GVC	platform-centered multiple GVC	블록별로 분할된 국제분업

15

(2) 전통산업의 공급망 재편

■ **미중 무역마찰로 가속화된 아시아 공급망의 변화**

○ 미중 무역마찰 후 중국 기업도 동남아시아로 생산기지 이전에 적극적

- 중국은 대베트남 직접투자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 중국 기업의 대베트남 직접투자 -> 베트남의 대중 수입 증가-> 대미 수출 증가 구도 발전
- 중국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에서도 주요 투자국으로 부상
- 한국, 대만, 일본은 인건비 폭등 등의 영향으로 이미 생산거점의 분산을 실행

16

○ 생산기지 이전의 후보지는 많은 경우 아시아 지역

- 201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미국의 대 중국 수입 감소가 높은 상위 10개 품목에서 점유율이 높아진 나라는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
- 품목별로 재편의 방향에 차이: 저부가가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하이테크 분야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등

<표> 품목별 미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승의 국별 순위

미국의 대중 수입(2018.1~2020.10), 감소 기여 상위 품목 (HS 6단위)		미국의 수입 비중이 증가한 나라 상위 5개국				
		1	2	3	4	5
1	무선수신기	**베트남**	**대만**	**태국**	이스라엘	체코
2	휴대전화단말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영국
3	기계부품,부속품	**대만**	**한국**	**베트남**	멕시코	**말레이시아**
4	처리장치(CPU등)	**대만**	폴란드	독일	**말레이시아**	폴란드
5	SSD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멕시코	**필리핀**
6	TV 수신장치	멕시코	**베트남**	**대만**	폴란드	헝가리
7	목재 프래임 등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멕시코

자료: JRI Asia Monthly, no. 238(21년 1월).

17

■ **공급망 탈중국화의 한계**

○ **한국, 미국, 일본, 독일의 대중국 전략적 의존도**

- 한국: ① 다양성, ② 중간재 중심, ③ 수직 분업에 의한 높은 중간재 의존도
- 미국: ① 높은 집중도, ① 소비재 중심, ③중-기타국, 미-기타국 무역구조와의 높은 연관성
- 일본: ① 소비재의 높은 의존도, ② 수직분업에 의한 중간재 의존성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적 의존도 분석 결과 요약: 2020년 기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중간재	소비재	전체	중간재	소비재	전체	중간재	소비재	전체	중간재	소비재	전체
대중 수입의존도		23.9	24.5	25.1	12.9	29.8	21.4	23.0	39.8	32.8	8.0	16.8	13.5
품목수	관심품목	604	264	1,088	185	241	575	475	385	1,048	114	107	281
	취약품목	366	164	653	86	127	281	268	226	598	55	33	107
수입비중	관심품목	25.1	46.6	34.0	16.8	67.6	56.3	34.5	71.9	62.9	14.8	28.2	34.9
	취약품목	17.5	32.2	22.8	10.3	47.8	43.6	13.8	38.5	37.7	2.6	6.1	15.8
	중국 세계시장 점유율 30% 미만 관심품목	13.0	11.8	11.4	1.5	0.7	0.5	16.4	17.8	15.4	1.1	1.5	0.6
	대세계 수입특화도 낮은 관심품목	8.5	8.1	10.5	3.7	3.6	3.2	13.2	1.2	8.9	12.2	24.4	27.8

자료: 김계환, 김바우, 2021

주: 취약품목=대중국 수입의존도 70% 이상, 관심품목=50% 이상; HS 6단위 기준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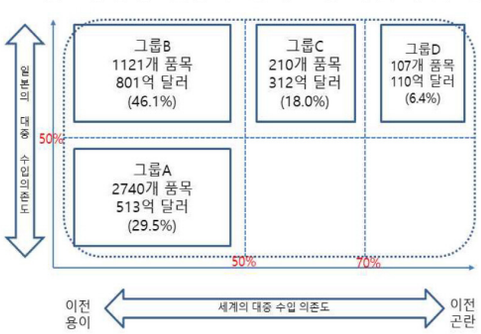
○ 탈중국 생산 이전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품목과 규모는 대중 수입의 일부

- 중국이 준 독점하는 품목은 생산이전이 단기적으로 어렵고, 대중 의존도가 낮은 품목은 이전의 필요성이 낮음

  * HS 6단위, 전체 6,553개 품목 중 459개가 중국 점유율이 50%이상, 수출 금액은 총 6,592억 달러; 중국 총 수출액 2조 4,942억 달러의 26.4%.

- 50% 초과 부분이 생산 이관된다고 가정할 때 생산 이관에 따른 수출 감소액은 전체의 5% 정도

<그림> 공급망 탈중국 용이도에 따른 구분 품목 구분: 일본 사례(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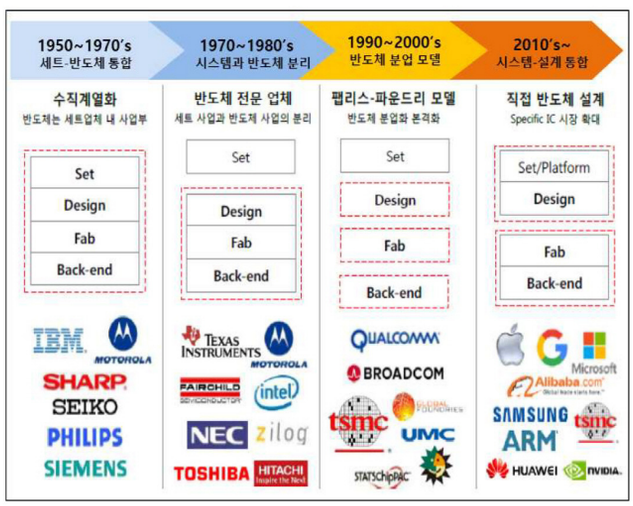
자료: 미즈호종합연구소

19

(3) 첨단산업의 공급망 재편: 반도체 사례

○ 반도체는 수직분할(vertical unbundling)과 GVC형 생산방식이 가장 발달한 산업

<그림> 반도체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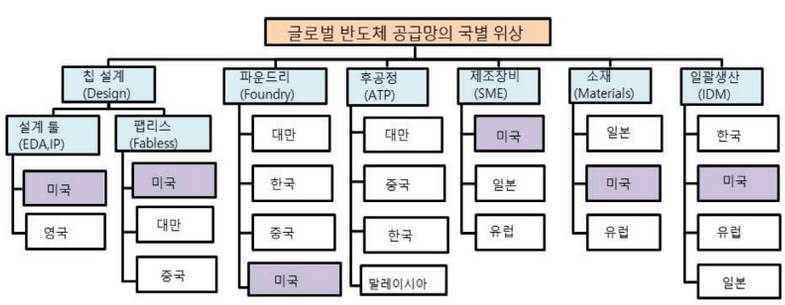
자료: 주대영, 김계환, 2022

20

○ 쌍방독점의 상황과 유사하게 긴밀하게 상호 의존

- 중국(시장)<->미국(기술), 미국(기술, IP)<->한국, 대만(제조, 생산), 일본(소재, 장비)<->한국, 대만(제조, 생산), 중국(시장)<->대만, 한국(제조,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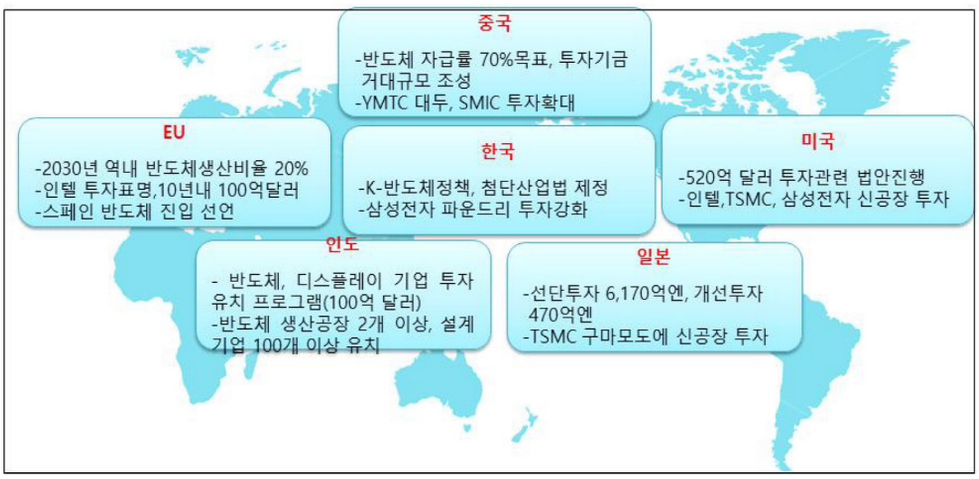
<그림> 반도체 공급망 단계별 국별 경쟁력



자료: 주대영, 김계환, 2022

21

○ 주요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대외 의존을 국가안보의 문제로 보고, 자국 중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강화



자료: 주대영, 김계환, 2022

22

○반도체 공급망의 가치중심 블록화=>friend-shoring 시나리오

<그림> 가치 중심 글록화와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망: friend-shoring 시나리오

미국 74%	미국 세계 장비 생산의 41%	동아시아, 세계 소재 가공의 57%	동아시아, 제조 역량의 56% 집중(대만, 한국, 일본)	중국, 세계 반도체 조립의 38%
디자인	장비	소재	웨이퍼 생산	조립
(EU, 미) (미) 세계 디자인의 74% - (미) EDA - (유럽)코어 프로세서 아키텍쳐 IP - (미) 디자인 전문가	(미, 일, EU) 첨단 제조 장비는 수십년간 연구개발 경험이 축적된 전문기업이 주도, 50종 이상의 공정 기술 제공 - (미) 41%, - (일)32% - (EU) 18%	(한국, 일, 미, EU) 4국이 폴리실리콘 시장의 90% 공급	(일, 미, 대만, 한국) 웨이퍼 가공은 동아시아의 기존 인프라, 미 정부가 아리조나에 건설한 공장 이용 - 200-500억 달러 설비는 최신 가공설비를 이용	(인도) 높은 노동집약도 때문에 인도가 유망 - 엔지니어링 인력이 풍부 (세계 반도체 디자인 인력의 20%)

23

4. 정책과제

24

(1) 공급망 안보 정책

○ 공급망 정책의 세 가지 방향은 협력, 시장 갭 보완, 글로벌화 유지

- (협력) 정부와 민간의 정보 수집 협력: 관련 기관이 없다면 만들어야 하고, 산업계는 공급망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적 도구 발굴
- (시장 갭 보완) 정부는 시장 의사결정이 어디에서 공급망 위험을 초래하는지 이해하고, 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해야 함.
- (공급망 글로벌화 유지) 그 조직 방식이 변화해야 하고, 정부가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함.

<표> 공급망 탄력성 강화 3단계 접근법

단계	내용
정보 수집 (Know)	- 기업이 공급망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tier 1을 넘어 tier 2, 3, 4까지 파악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음. - 초크 포인트나 single-source suppliers는 공급망의 어느 부분에서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파악이 우선 - 핵심 산업의 규제 당국은 해당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급망 정보를 수집하여 위험을 파악하도록 독려('공급망 스트레스 테스트')
결정 (Decide)	- 어떤 제품, 서비스, 자원이 가장 취약한지, 중요한지 파악
지원 (Assist)	- 기업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기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 - 새로운 무역 협정, '신뢰가능한 공급자 시장'의 창출 등이 정부 정책으로 지원

25

(2) 한국 산업의 포지셔닝과 공급망 다변화

○ 아시아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아시아 각국으로 산업화 프런티어가 확장, 국가간 분업의 화대 심화 과정
○ 한국은 지리적 잇점과 기술, 지식, 자본, 고급 인력 등 양질의 자원을 지랫대로 하여 미국, 일본, 유럽과 공급망 재편 협력을 강화
○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공급망 다변화: China+ , 원자재 채굴=>1차 가공=>부품 제조 현지 공동 투자

(3) GVC 확장의 새로운 프런티어 서비스 GVC 개척

○ 디지털 통상 전략 수립, 디지털 통상전략 컨트롤타워를 설치

- 통상협정의 국내파급효, 회외진출 파급효과 분석, 국가별 디지털 통상 협상 전략 수립, 통상규범 논의 주도

26

(4) 새로운 무역 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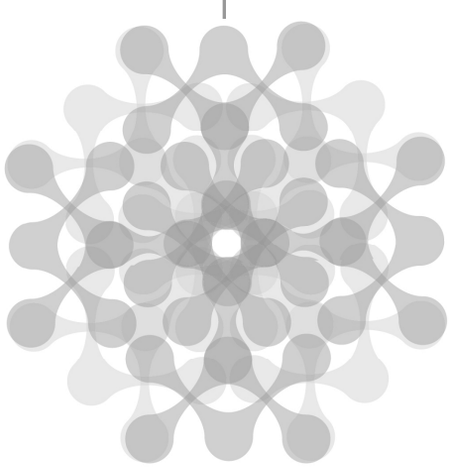
○ 가치 중심 통상정책의 확산과 경제안보의 주류화에 대응(New Bretton Woods Moment)

- 미-유럽 기술이사회(TTC)와 인도태평양경제 프래임워크(IPEF) 대응
- 공급망 분단 경향을 경계, 중견국으로서 독자적 국익을 정의,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과 협력, 국가간 협력과 공동 번영의 무역질서를 제안

발표 3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정책과 재정여력 확보방안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대응과 과제
- 재정여력 확보 방안 -

2022.06.15(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목차

Ⅰ. 재정현황과 전망

Ⅱ. 재원확보의 수단

Ⅲ. 재원확보의 시기
✓ 경제규모, 노동시장

Ⅳ. 재원확보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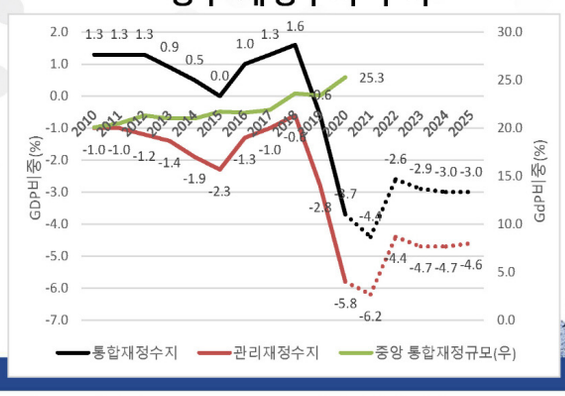
1

I. 재정현황(1/3)

✓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적자 시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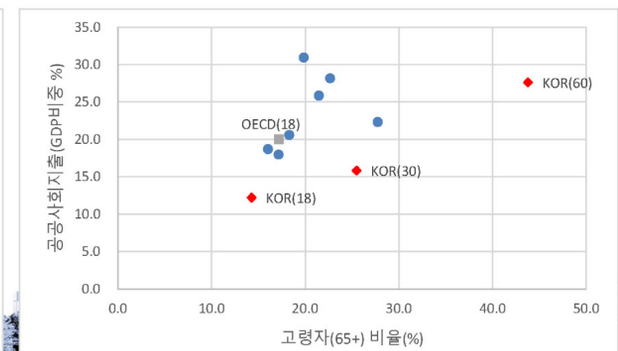
- 중기적 재정수지 개선 계획 없음
- 장기적 재정 부담 증가 예상

정부 재정수지 추이



자료: e나라지표, 202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고령화와 사회보장지출(2018)



자료: 전병목(2022)

2

I. 재정전망(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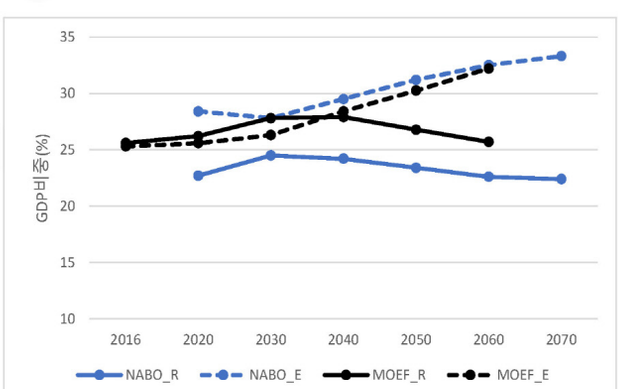
✓ **기존제도 기준**

- 장기 재정안정성 문제
  - 수입전망 차이에도 불구하고 재정 불안정성 유사
  - 전망에서 제외된 HI, LTC 지출 (11.5% of GDP in 2060)

✓ **새로운 제도 도입/확대**

- 건강보험 빠른 확장 등

장기재정전망(정부, 국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5.12)

3

Ⅰ. 재정전망(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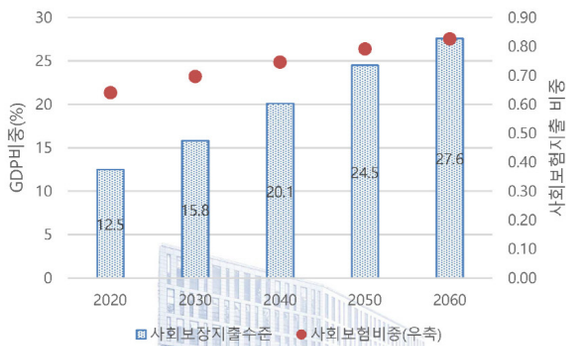
✓ **사회보험 중심 지출 증가**

- 사회보장지출 증가의 주 요인
  - 제도변화 효과 미포함
  - 인구구조 변화 효과 중심

✓ **사회보험 사각지대**

- 연금 등 향후 추가 지출예상

사회보장지출 전망



자료: 보건복지부(2020)

Ⅱ. 재원확보의 수단(1/6)

✓ **3가지 재원확보 수단**

- 지출구조조정, 국가채무, 조세(사회보장기여금 포함)

✓ **뚜렷한 장단점**

- 재원조달 규모, 지속성, 수용성 등

Ⅱ. 재원확보의 수단(2/6)

✓ **지출구조조정**

- 조달규모(지속성): 일시적/영구적 조정, 지출성격에 따라
  - 일시 < 영구, 재량 vs. 의무
- 수용성: 기존 수혜층의 반발(재량 < 의무, 일시 < 영구)
- 2022예산안: 코로나대응 증액사업 전면 재검토, 3년이상 민간보조사업 폐지·감축 등 기 포함
- 일률적, 반복적 조정 → 성과정보 연계, 구조적 조정 필요
  - 기존 위기대응 (재량)지출 조정 중요
  - 의무지출 비중증가에 따라 어려움 증가
  - 정부신뢰도와 연관

Ⅱ. 재원확보의 수단(3/6)

✓ **국가채무**

- 조달규모: 현 국가부채 수준, 대외신인도가 결정
- 지속성: 일시적 재원조달
- 수용성: 높음(현 세대 편향적 의사결정)

구분	1인당 GDP 3만달러 도달 시점 국가채무 비교		고령사회(14%) 도달시점 국가채무 비교	
	3만 달러 도달 시점	국가채무 비율[1]	고령사회 도달시점	국가채무 비율
한국	2017년	40.8	2017년	40.8
독일	1995년	54.2	1972년	14.1
영국	2002년	49.6	1975년	49.9
일본	1992년	69.9	1995년	89.8
프랑스	2004년	80.7	1979년	32.8
미국	1997년	65.5	2014년	104.3

주: 1)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국가채무비율은 「OECD Economic Outlook 108 (2020.12)의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자료를 활용함
자료: World Bank, UN, OECD, 국회예산정책처, 2021 대한민국 재정, 2021에서 재인용

Ⅱ. 재원확보의 수단(4/6)

✓ **조세**

- 조달규모: 다양
- 지속성: 높은 지속성
  - 의무지출 재원조달 방안으로 바람직
- 수용성: 낮음. 부과대상, 용도 연계여부 등에 따라 변화
  - 부과대상이 좁을수록, 용도 연계성이 높을 수록 높음
  - 조달규모 ∝ 부과대상

- 판단기준과 세목별 우위

판단기준	세목별 우위	비고
형평성	소득세 〉 법인세 〉 소비세	
효율성	소비세 〉 소득세 〉 법인세	
납세자 수용성	목적세, 법인세 〉 소득세 〉 소비세	목적세: 사회보장기여금

8

Ⅱ. 재원확보의 수단(5/6)

✓ **재원조달 수단들의 한계와 지속가능성**

구분	국가부채	지출구조조정		증세
		일시적 조정	영구적 조정	
재원조달 지속성	일시적	일시적	장기적	장기적
재원조달 한계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제약요인	국제금융시장	기존 사업수혜층의 반발		납세자 수용성

9

Ⅱ. 재원확보의 수단(6/6)

✓ **경제성장과의 연계성(Alinaghi and Reed, 2021)**

- Meta 분석: 49개 선행연구, 979개 추정치 기반
- 증세, 재정수지적자를 통한 경제성장 어려움

재원조달 방법에 따른 성장효과

Financed by:		Public Spending		Budget Surpluses
		Productive	Unproductive	
Taxes	Distortionary	*positive/negative (at low/high gov.size)*	*negative*	*ambiguous*
	Non-distortionary	*positive*	*zero*	*positive*
Budget Deficits		*ambiguous*	*negative*	-

자료: Gemmell, Kneller, and Sanz(2009, Table 1, p.19), Alinaghi and Reed(2021)에서 재인용

10

Ⅲ. 재원 확보의 시기(1/4)

✓ **(증세)재원확보의 시기는 경제/납세자 소득과 연동**

- 경제규모의 회복 또는 노동시장의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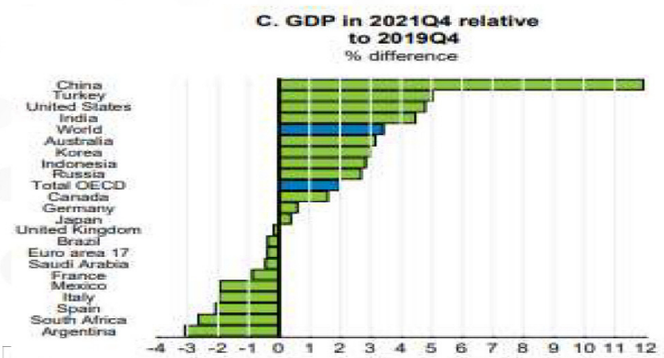
① 경제규모의 회복

- 코로나19의 영향을 벗어나는 것은 증세의 필요조건
  - (예 1) 미국: 2021~2022 회계연도 법인세율, 장기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인상 추진 but …
  - (예 2) 영국(Budget 2021): 2023년 4월부터 법인세율 인상(19%→25%) 추진
- 우리나라의 경우 필요조건 충족

11

Ⅲ. 재원 확보의 시기(2/4)

2019 4분기 대비 2021 4분기 경제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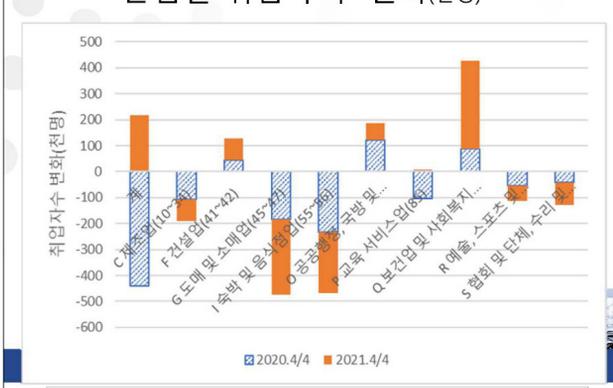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1. 5., p. 26.

Ⅲ. 재원 확보의 시기(3/4)

② 노동시장의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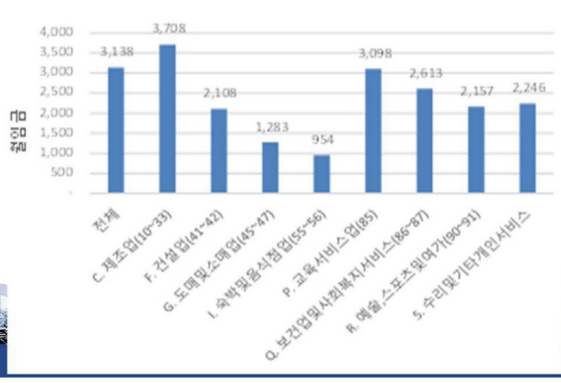
- 본격증세의 필요조건: 소득, 소비 등의 대중적 증세 가능
- 취업자 수 미 회복 & 저임금 일자리 중심 회복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천명)



주: 2019년 4분기 대비 취업자 변화
자료: 통계청, KOSIS

산업별 월평균 임금(2019, 천원)



Ⅲ. 재원 확보의 시기(4/4)

✓ 본격증세 가능시기:
- 적절한 증세 수단 준비할 필요

연령대별 고용률 회복

연령	2019Q4	2020Q4	2021Q4
30~39	76.6	75.0	76.0
40~49	78.4	77.0	77.6
60세 이상	42.4	42.9	43.3
전체	61.4	60.0	61.1

자료: 통계청, KOSIS

14

Ⅳ. 재원 확보의 방법(1/5)

✓ 경기 회복 지연시 적용 옵션
-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재정규율속)국가부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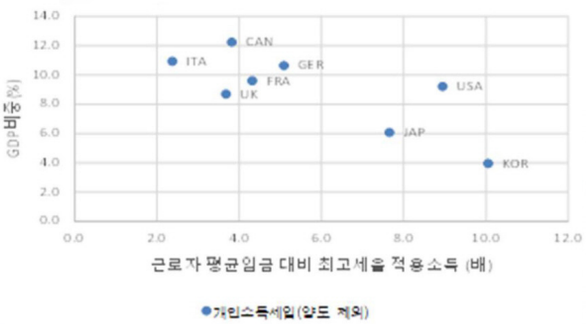
✓ 경제규모 회복시 적용 가능 옵션
- 부분적 증세, 환경 등 외부교정 과세
  - 금융투자소득 과세(2023) 공제한도(5천만원) 조정
  - 탄소배출 관련 에너지 과세(but 고유가 시기..)
  - 담배세, 주세 등
- 플랫폼 기업, 플랫폼 관련 사업자의 사회보험 적용 검토
  - 플랫폼기업의 정보 제공/고용주 의무 등

15

Ⅳ. 재원 확보의 방법(2/5)

✓ 노동시장 회복시 본격 증세 옵션
- 소득세의 점진적 강화
  - 전반적 실효세율 제고를 통한 세원확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과 소득세입(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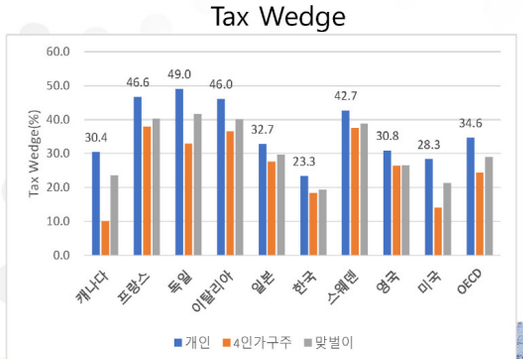


Ⅳ. 재원 확보의 방법(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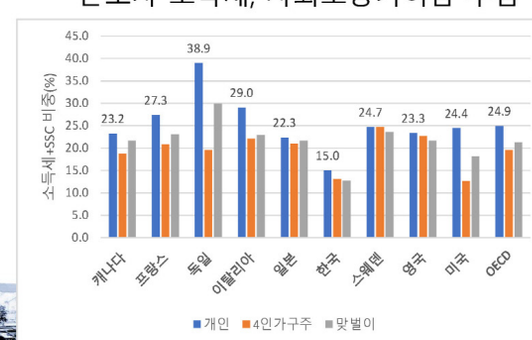
- 사회보장기여금의 역할 확대
  - 노동수요 영향을 고려해 Tax Wedge 모니터링 필요

Tax Wedge 및 근로자 세부담(2020)

Tax Wedge



근로자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부담



자료: OECD, Taxing Wages.

Ⅳ. 재원 확보의 방법(4/5)

- 사회보장세의 논의
  - 세입-세출 연계를 통해 납세자 수용성을 확보
    - 소비세-복지지출 조합을 통해 소득분배 개선 가능
    - (예) 일본의 부가가치세 인상
  - 재원배분을 통한 균형있는 복지재정 구축
    - 개별 사회보험에 기반한 불균등한 제도확대 조절
- 소비세 기능확대(면세 축소, 요율 조정 등)
- 개인소득과 법인소득간 이동유인 관리(부가급여, 세무행정)
  - 세율격차(45% vs. 25%) → 소득 법인유보/조세회피 가능성
  - 세무행정차이: 개인사업자 vs. 중소기업

18

Ⅳ. 재원 확보의 방법(5/5)

- 신세원의 역할
  - 로봇세, 탄소세, 디지털세, 데이터세 등 제기
    - 의미있는 세수역할 어려움
  - 로봇세: 산업경쟁력, 적용가능성 문제
  - 탄소세: 배출권거래제와의 중복, 산업경쟁력, 기존 에너지세제와의 중복, 지속성 문제
    - 중단기적 역할은 필요
  - 디지털세: 국제적 논의 유도를 위한 세제로 이미 국제적 과세 방안 합의(OECD Inclusive Framework)
  - 데이터세: 데이터 관리방안 마련이 우선

19

Thank You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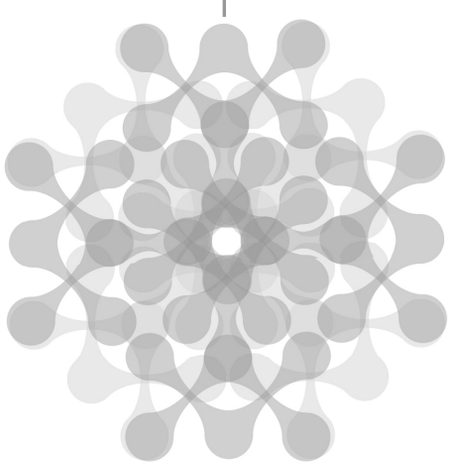


20

발표 4

자영업자 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자영업자 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김미루

KDI

June. 15, 2022

발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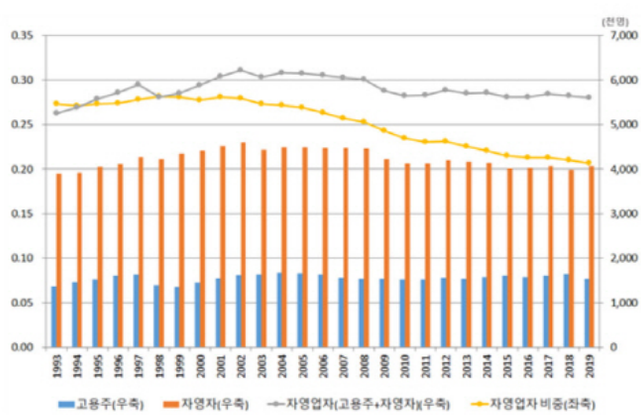
1. 자영업 규모
2. 자영업 대출 현황
3. 부채 임계수준 분석
4. 정책적 시사점

자영업 규모

자영업 규모: 일반 현황

2000년대 초반부터 자영업자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절대 규모는 다소 증가함.

-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27.3%에서 2019년 20.7%로 감소함.
  - IMF 외환위기 전후로 27~28% 수준에서 소 폭의 등락을 보이다가 2000년대에 접어든 이래 본격적이고 지속적인 감 소 추이가 나타남.
- 하지만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가 절대 규모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음.
  - 1993년 대비 2019년의 고용주와 자영자는 17만명가량 증가하여 전체 자영업자 수는 34.7만명 늘어남.
  - 자영업자의 비중 감소는 이 시기 동안 자영업자보다 임금근로자가 훨씬 큰 폭으로 증가(849.6만명)하였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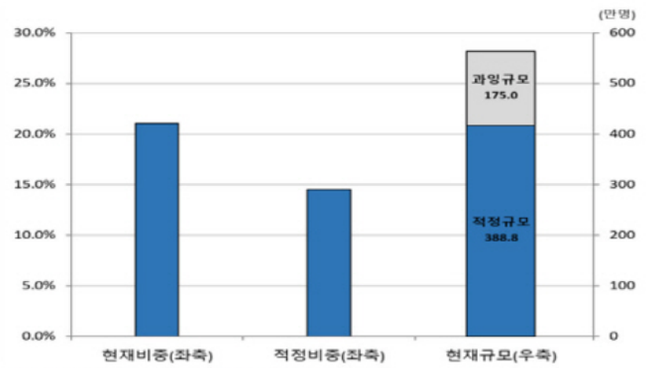
주: 자영업자 비중 = (고용주+자영자)/취업자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MDIS(1993~2019, 통계청)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진국(2020) 재인용

자영업 과잉 규모 추정

2018년 기준 자영업 과잉 규모는 약 175만명으로 추산됨 (이진국(2020)).

- 2018년 기준 자영업 비율은 적정 자영업 비율을 약 6.5%p 상회함.
  - 2018년 기준 적정 비중은 14.5%임에 반해, 실제 비중은 21%에 달함.
  - 이에 따른 적정 규모는 388.8만명이며, 따라서 175만명 정도 과잉으로 나타남.
- 이는 적정 규모의 약 1.45배에 달함을 의미.



주: 설명력이 가장 높은 2개 모형의 평균 수치를 보고함.
자료: 저자 작성. 이진국(2020) 재인용

자영업 과잉 규모 추정: 산업별

산업별로 적정성과 과잉성 정도는 매우 다르게 나타남 (이진국(2020)).

-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육업, 농림수산업, 기타 3차산업, 제조 업, 부동산업은 초과 공급
  - 농림수산업(16.6%p), 도소매업(16.4%p), 음식숙박업(15.8%p), 교육업(13.3%p), 부동산업(7.6%p)
- 반대로, 금융보험업, 의료복지업, 건설업에서는 자영업자 수가 적정 규모보다 과소한 상황
  - 의료복지업(Δ2.4%p), 금융보험업 (Δ3.4%p), 건설업(Δ3.8%p)

(단위: 만명)

	취업자	비중(2018년)		규모(2018년)			배율 (현재규모/적정규모)
		현재	적정	현재	적정	과잉	
전 산업	2,682.2	21.0%	14.5%	563.8	388.8	175.0	1.45
도소매업	372.3	31.4%	15.0%	116.8	55.9	60.9	2.09
음식숙박업	224.2	29.3%	13.5%	65.7	30.2	35.5	2.17
교육업	184.7	18.2%	4.9%	33.5	9.1	24.4	3.68
농림수산업	134.0	63.5%	46.8%	85.1	63.1	22.0	1.35
기타 3차산업	633.1	23.8%	20.4%	150.7	128.9	21.7	1.17
제조업	451.0	9.4%	7.3%	42.2	33.1	9.1	1.28
부동산업	52.8	30.0%	22.4%	15.8	11.8	4.0	1.34
기타 2차산업	19.7	4.1%	2.9%	0.8	0.6	0.2	1.40
광업	1.9	0.2%	1.2%	0.00	0.02	-0.02	-
공공행정,국방업	111.0	0.0%	0.3%	0.0	0.2	-0.2	-
가사업	4.8	15.5%	26.5%	0.7	1.3	-0.5	0.59
금융보험업	84.0	4.6%	8.0%	3.9	6.7	-2.9	0.57
의료복지업	204.6	4.4%	6.8%	9.0	14.2	-5.2	0.63
건설업	203.4	19.5%	23.3%	39.6	47.8	-8.2	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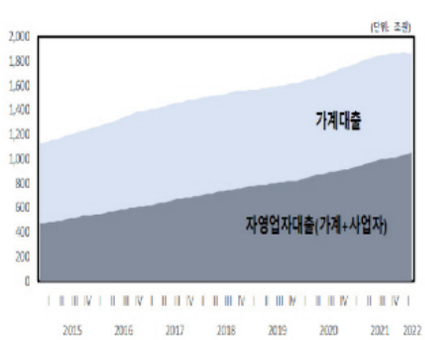
주: 1) 각 산업별로 설명력이 가장 높은 2개 모형의 평균 수치를 보고함.
2) 회귀모형 추정과 적정성 및 과잉성 분석이 각 산업별로 진행된 바, 각 산업별 수치의 합이 전 산업 수치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저자 작성. 이진국(2020) 재인용

자영업 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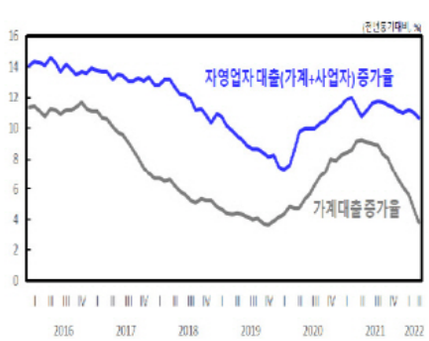
가계부채 및 자영업자 부채규모 추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은 감소한 반면,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일반 가계에 비해 개인사업자의 대출 총량이 빠르게 증가함.
  -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대출 뿐 아니라 사업자대출도 고려할 필요.
-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으로 인한 매출 피해가 개인사업자의 대출 총량 증가세 반등을 야기함.
  - 2020년 1/4분기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개인사업자 총대출 증가율이 2020년 2/4분기부터 상승세로 전환
- 코로나19 피해가 큰 자영업자 대출의 잠재적 부실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
  1.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롤오버(rollover) 제약 증가
  2.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종료(2022년 9월말 예정)
  3. 기준금리 인상



총 대출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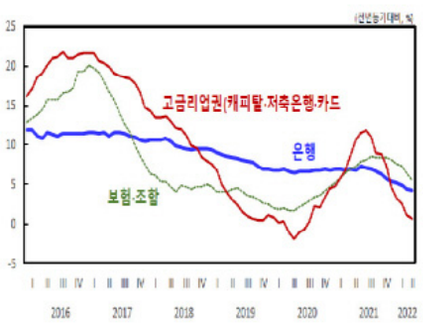


대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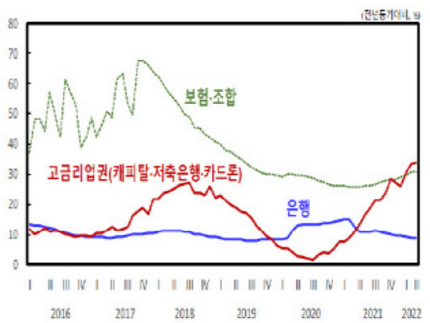
금융업권별 자영업자 부채 규모

최근, 자영업자 대출은 주로 사업자 대출 위주로 고금리 업권에서 증가함에 따라 채무구조 악화 우려.

- 2020년 말부터, 개인사업자의 고금리 업권(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짐.
  - 개인사업자 사업자대출 고금리 업권 대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
  - 반면, 개인사업자 가계대출 중 고금리 업권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었으며, 은행업권의 대출 증가율은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임
  - 코로나19 대응 정책금융 등의 영향으로, 2020년 개인사업자 사업자대출 중 은행업권 증가세가 일부 나타남
- 개인사업자 가계대출에서 고금리 업권 증가세는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기인할 가능성.
  - 2021년 초부터 은행권 총량규제가 강화됨
  - 향후 비은행권 총량규제 강화가 본격화 되면 롤오버 제약이 증가하여 다중채무자의 부실이 가시화 될 가능성



금융권별 개인사업자 가계대출의 업권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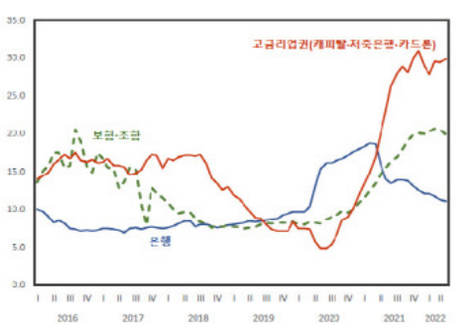


금융권별 개인사업자 사업자대출의 업권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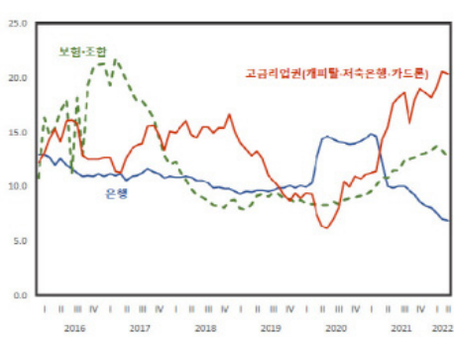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사업종별 채무구조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서 대출 총량이 더 크게 증가하였으며, 고금리 업권 대출 증가세도 두드러짐.

- 도·소매업, 개인·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업 등에서 대출총량 및 고금리 업권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짐.
  - 2020년 2/4분기 대규모 정책자금 공급에 따라 개인서비스업 및 음식업의 고금리 업권 대출 증가세가 하락함.
  -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은행권 총량규제 등에 따라 고금리 업권 대출 증가율이 재상승함.
  - 숙박·음식점업은 최근 안정화 추세를 보임.



소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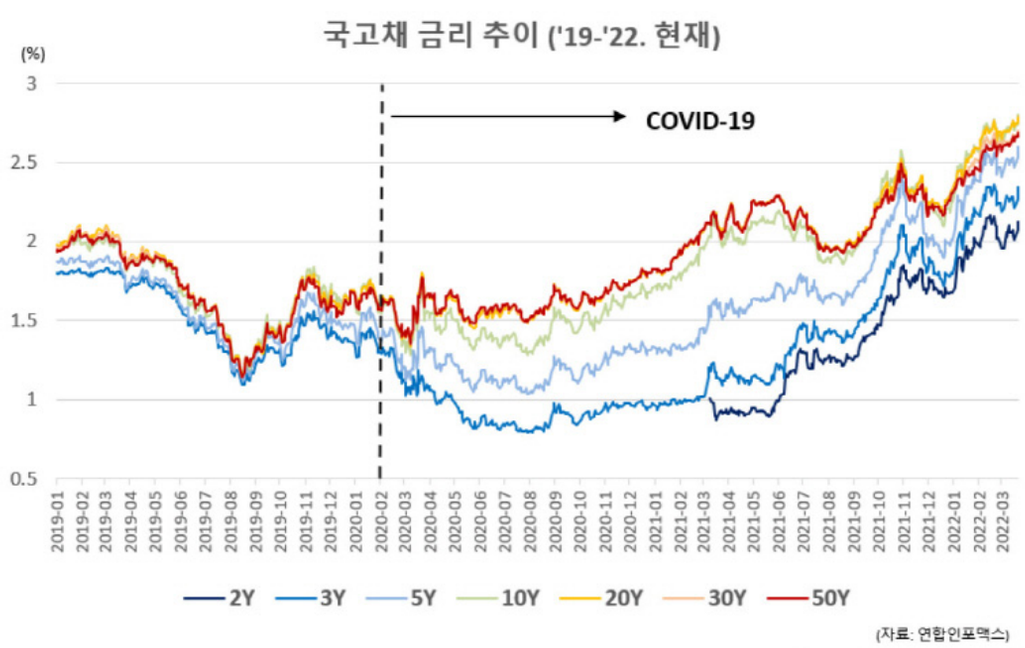


개인서비스업

부채 임계수준 분석

금융시장 동향

- 시장금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美 기준금리 인상,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상승 추세
  - 최근 美 CPI 8.6% 상승 등의 여파로 상승세 가속화



(자료: 연합인포맥스)

부채 임계수준 분석

소비와 연체에 관한 부채 임계수준 분석

- 차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나, 임계치 이상의 차입은 채무상환부담 증가로 인하여 소비를 구축할 가능성이 존재함.
- 원활한 연계 차입(roll-over)에 따라 연체율이 낮아질 수 있으나, 임계치 이상의 차입은 연체율을 급격히 증가시킬 가능성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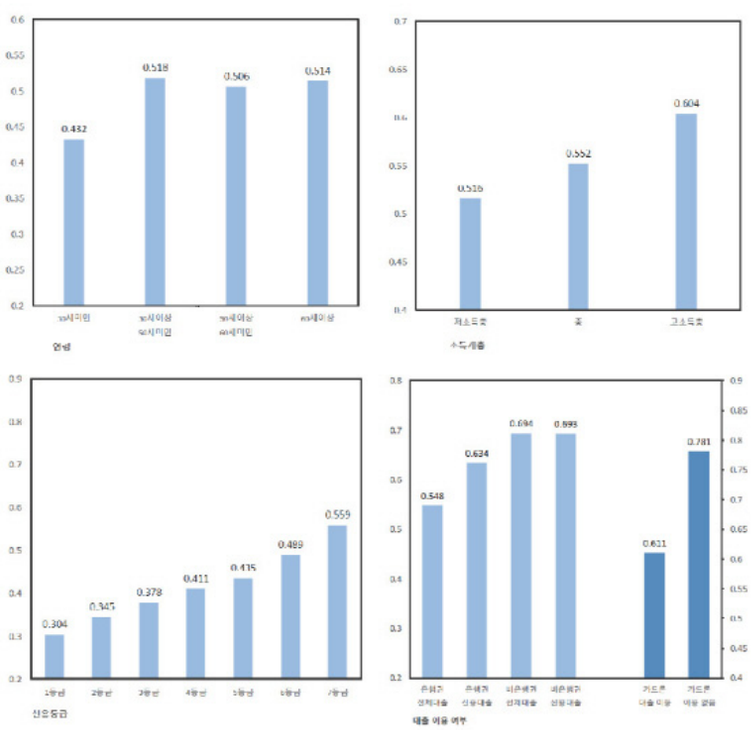
다음의 회귀식을 통하여 소비와 연체에 관한 부채 임계수준 분석을 시행함.

$$Consumption_{it} = \alpha + \beta_1 DSR_{it} + \beta_2 DSR_{it}^2 + \epsilon_{it}$$

$$DLQ_{30,90\,it} = \alpha + \beta_1 DSR_{it} + \beta_2 DSR_{it}^2 + \epsilon_{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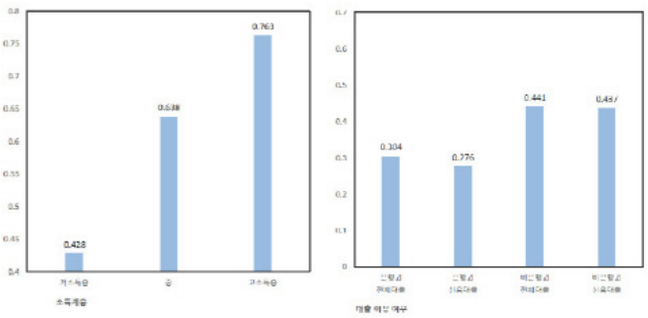
- *Consumption* : 월별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소비금액
- $DLQ_{30,90}$: 각각 월별 30일, 90일 이상 연체 여부

부채 임계수준 분석: 소비에 대한 DSR 임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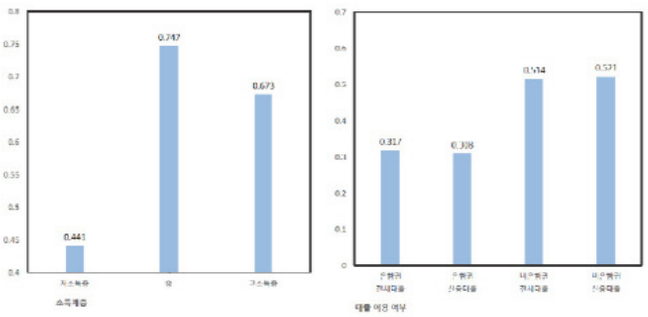


부채 임계수준 분석: 연체에 대한 DSR 임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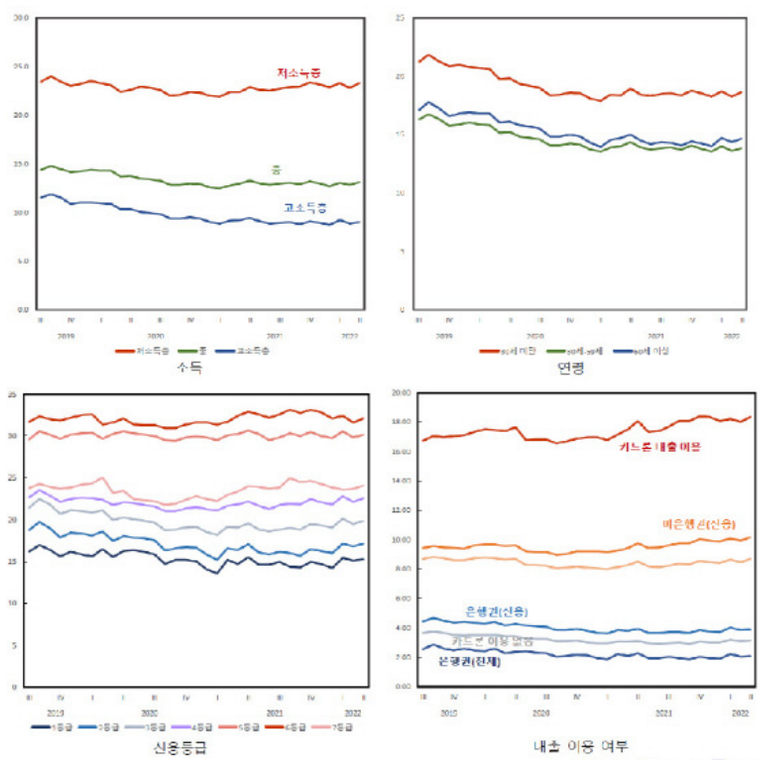
- 월별 카드 30일 이상 연체여부에 대한 임계치(graph)



- 월별 카드 90일 이상 연체여부에 대한 임계치(gra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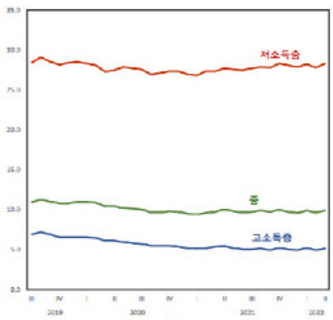


부채 임계수준 분석: 임계수준 초과 비율 추이(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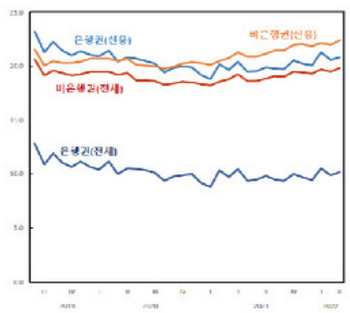


부채 임계수준 분석: 임계수준 초과 비율 추이(연체)

- (30일 이상 연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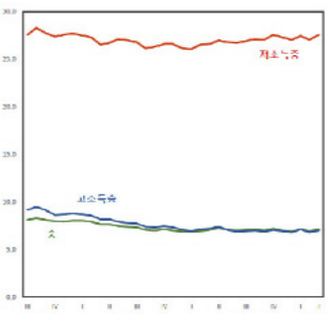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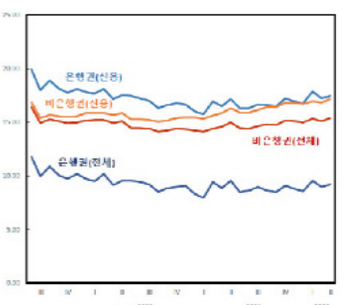


대출 이용 여부

- (90일 이상 연체)



소득



대출 이용 여부

정책적 시사점

정책 조합(policy mix)

자영업자 부채 안정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 조합**(policy mix)**이 요구됨.

- 국고채 발행량 증가는 발행금리 및 시장금리 상승을 야기함.
- 발행금리 상승은 정부 재원 조달비용 상승을 야기함.
  - 과거에 비해 발행량 증가에 따른 발행금리 상승 효과는 작아짐.
  - 최근, 발행량 증가에 따른 발행금리 상승 효과는 장기물에서 크게 나타남.
  - 발행량 1조원 증가 시 3년물: +0.57bp, 10년물: +1.37bp, 30년물: +1.63b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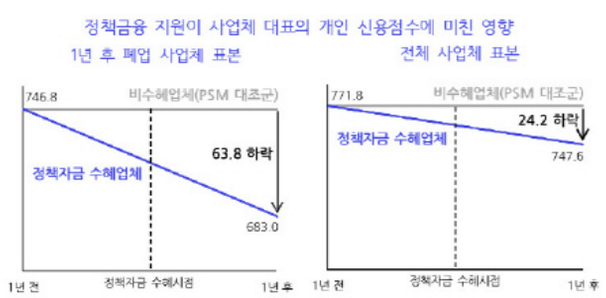
	3-year	5-year	10-year	20-year	30-year
(November 2014 ~ May 2017) * Total amt. of gov. bonds issued	0.0038	0.0048	0.0056	0.0060	0.0062
(June 2017 ~ August 2019) * Total amt. of gov. bonds issued	0.0193	0.0174	0.0165	0.0161	0.0160
(September 2019 ~) * Total amt. of gov. bonds issued	0.0057	0.0100	0.0137	0.0156	0.0163

- 또한, 발행금리 상승은 시장금리 상승을 통하여 가계 및 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 증가를 야기함.
  - 코픽스, CD91일, 은행채 3개월물 등 단기지표금리 평균 상승폭 8.1bp 기준, 가계 대출 평균 이자율은 +8bp, 기업대출은 +9bp, 이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액은 각각 4,000억, 5,000억임 (한국은행 2021.3 금융안정 상황보고서).
-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타격을 받는 경제주체에게 선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정책이 요구됨.
  -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이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동시에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소상공인 정책금융

채무구조 개선을 통한 회복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정책금융 혹은 폐업·재기 지원을 강화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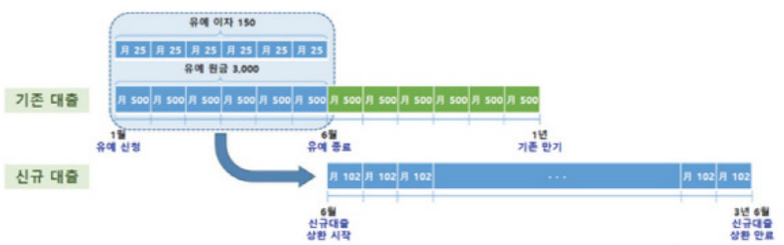
- 적절한 정책금융은 폐업을 감소시키고, 매출액·고용을 증가시킴.
- 반면, 정부지원금을 받은 직후 폐업한 업체에서는 신용이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남.
  - 경영이 매우 악화된 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은 채무상환 부담을 키워 신용을 악화시킬 수 있음
  - 경영 악화가 심화된 경우, 폐업·재기 지원이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 회복 가능한 자영업자 대상 정책금융을 지속할 필요
- 단, 금융정책이라기보다 사실상 "재정정책"에 해당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금융정책으로 전환할 필요.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선별적 지속

상환 유예된 원리금을 신규대출 원금으로 전환하여 기존대출과 분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
기존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재연장 여부는 차주별 상황에 따라 별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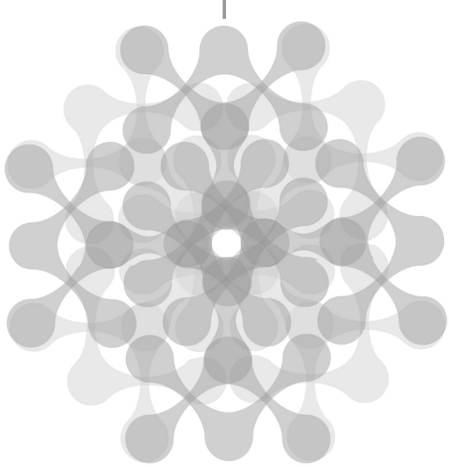
-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상환 유예된 이자를 기존대출과 분리하여 신규대출 원금으로 전환하고 기존 금리를 적용하여 3~5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 대출금 6천만원, 금리 5%(고정), 잔존만기 1년 일시상환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6개월 상환 유예된 이자의 이자는 약 2.2만원에 불구하여 면제하더라도 금융기관에 타격이 크지 않음.
  - 위 예에서, 현재까지 6개월 이자상환을 유예한 경우, 총 상환 유예된 이자는 150만원이므로, 이를 신규대출 원금으로 전환하여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금리 5%, 3년 만기)으로 상환하면 현 시점부터 매월 약 4.8만원 (추가유예 신청하지 않을 경우 29.8만원(25만원 + 4.8만원))만 상환하면 됨.
-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도 상환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신규대출 원금으로 전환하고 기존 금리를 적용하여 3~5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현 시점부터 상환.
  - 대출금 6천만원, 금리 5%(고정), 잔존만기 1년, 매월 5백만원 원금분할상환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상환 유예된 원리금 및 상환 유예 원금에 대한 이자는 약 3,194만원임.
  - 이를 신규대출 원금으로 전환하여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금리 5%, 3년 만기)으로 상환하면 현 시점부터 매월 약 102만원(기존 월 상환액 대비 약 19.4%)만 부담하면 됨.



발표 5

일자리 회복과 정책과제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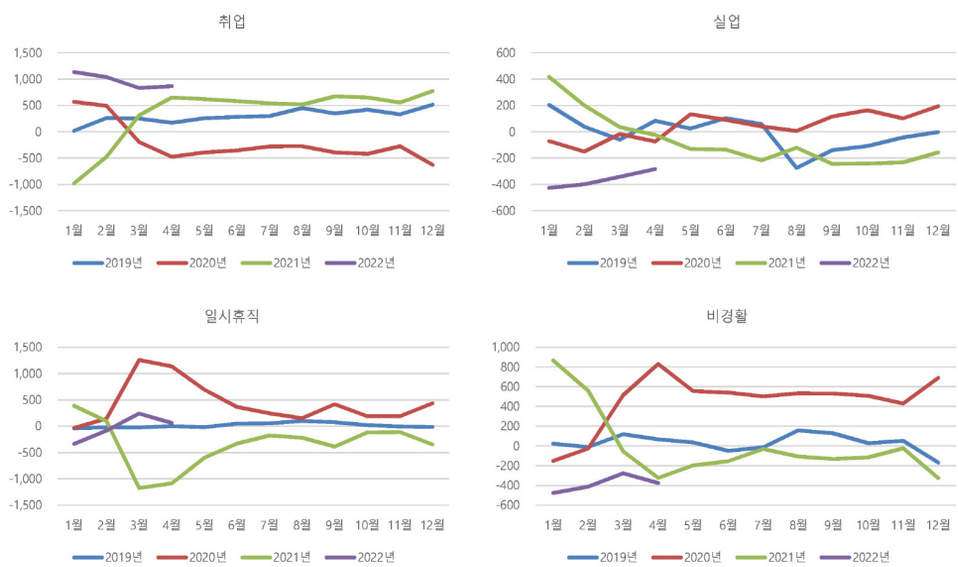
일자리 회복과 정책과제

2022년 6월 15일

오상봉(한국노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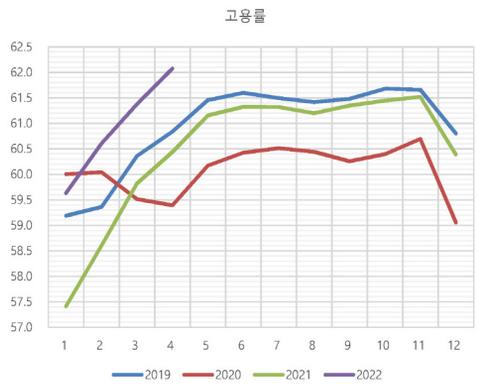
전반적 노동시장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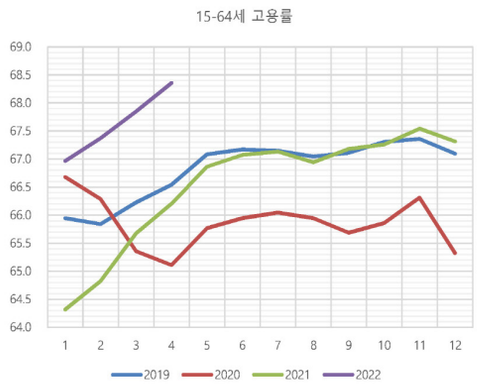
■ 노동시장의 급격한 위축 및 점진적 회복



전반적 노동시장 영향

■ 2021년 하반기에는 2019년의 고용률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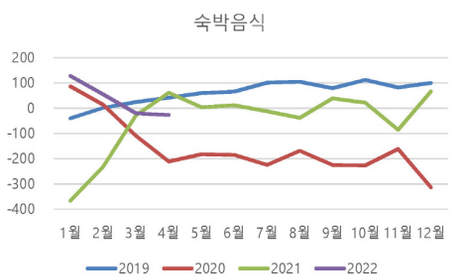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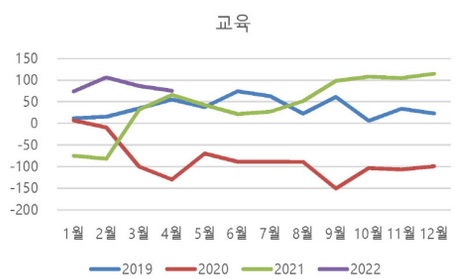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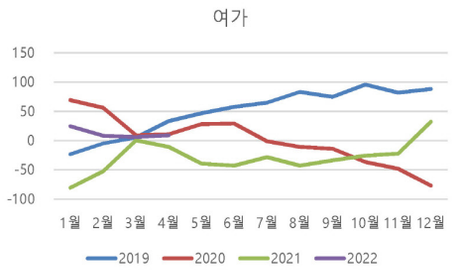
일자리 회복과 정책과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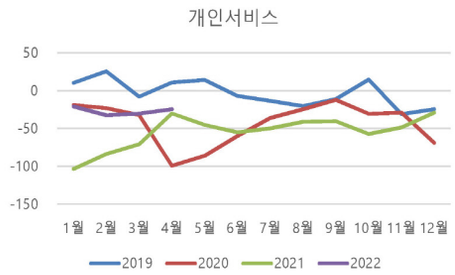
업종별 영향

■ 숙박음식,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업 영향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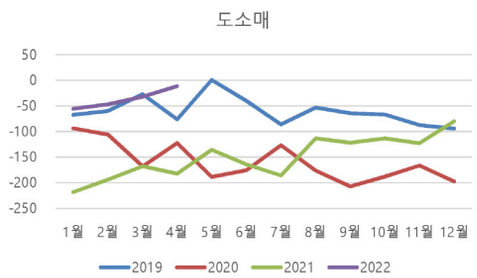




일자리 회복과 정책과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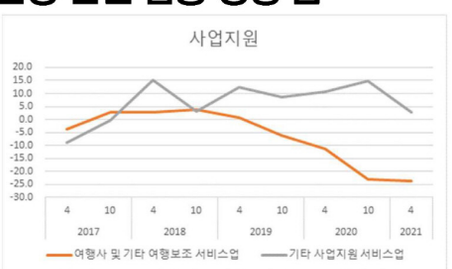
업종별 영향

■ 도소매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업종별 영향

■ 관광 관련 업종 영향 큼





■ 여가서비스 및 개인서비스의 영향도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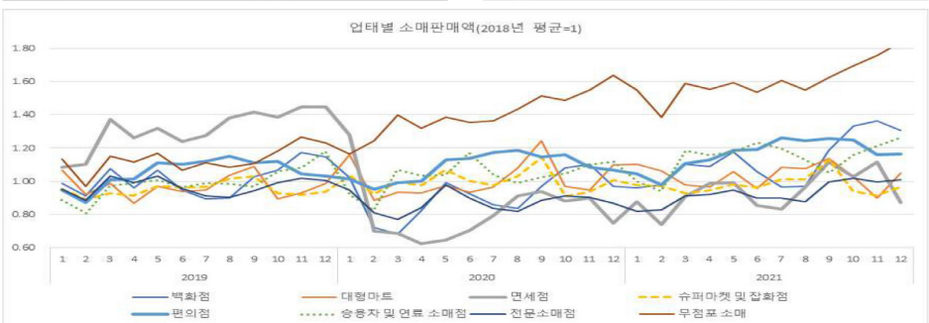


업종별 영향

■ 도소매업은 면세점을 제외하고 영향이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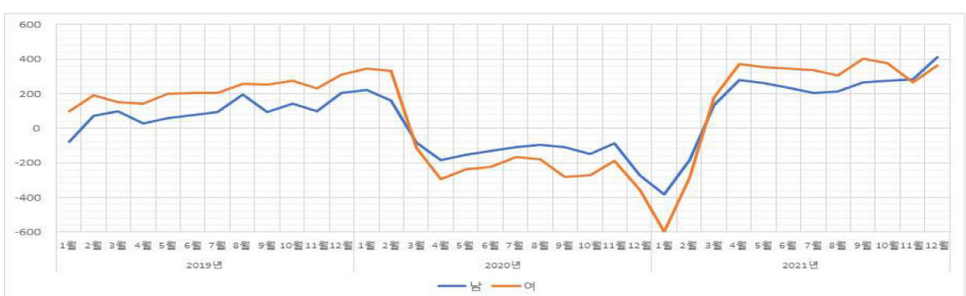






인적 또는 일자리 속성별 영향

■ 여성 영향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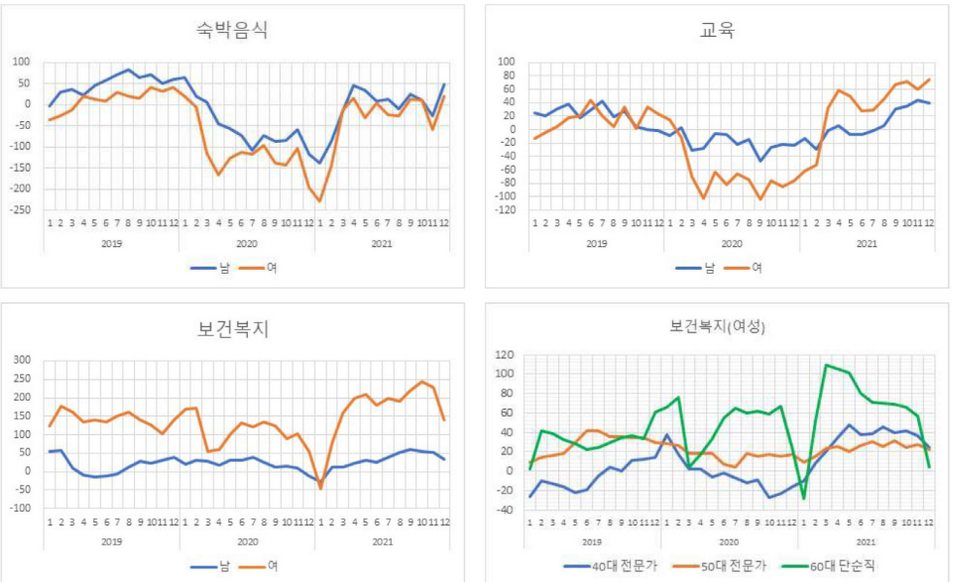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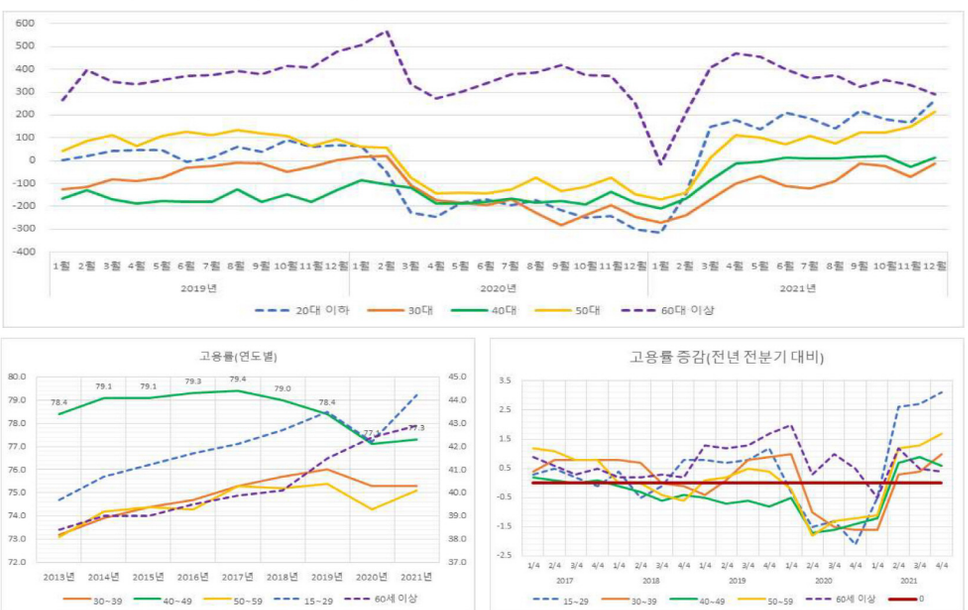
인적 또는 일자리 속성별 영향

■ 여성은 숙박음식, 교육 영향 큼



인적 또는 일자리 속성별 영향

■ 20대의 영향도 있었지만, 30~50대의 영향 큼



인적 또는 일자리 속성별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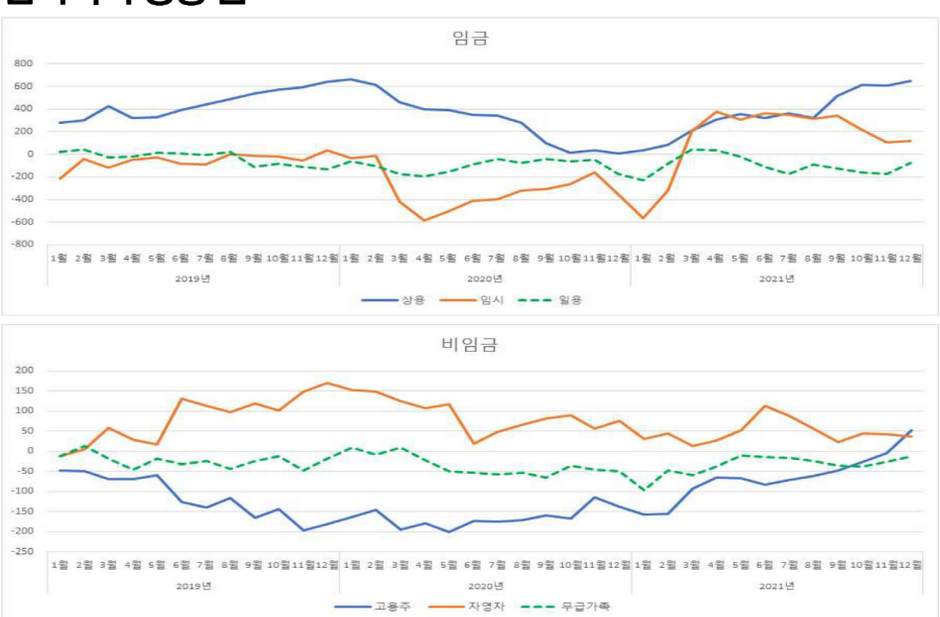
■ 고졸 이하의 영향 큼



일자리 회복과 정책과제 11

인적 또는 일자리 속성별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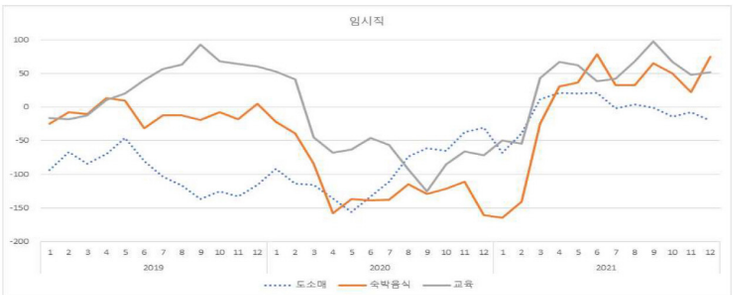
■ 임시직의 영향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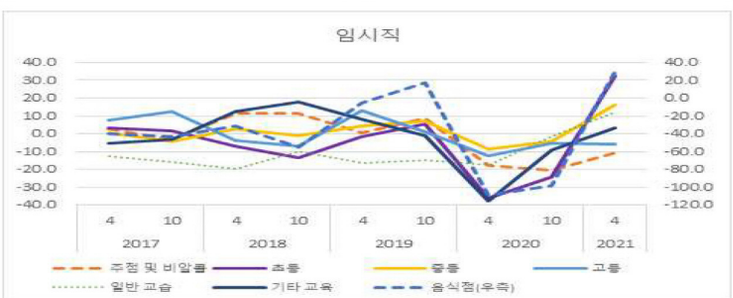


일자리 회복과 정책과제 12

인적 또는 일자리 속성별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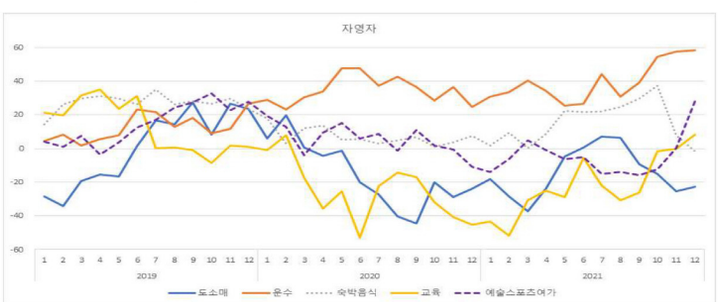
■ 숙박음식과 교육서비스업 위주 임시직 감소





인적 또는 일자리 속성별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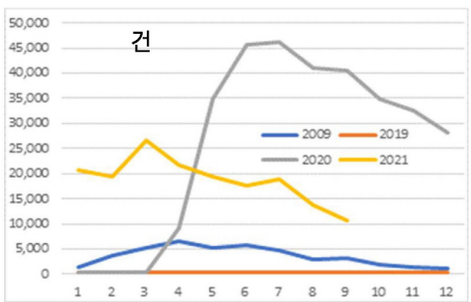
■ 자영자의 고용 감소는 업종별로 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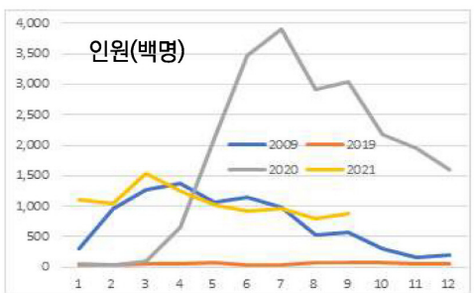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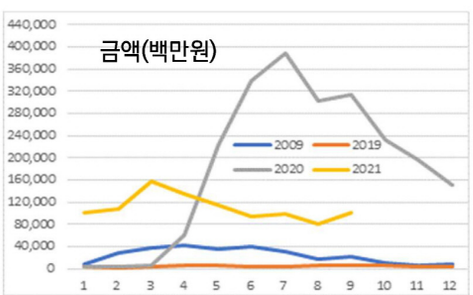


정부의 주요 정책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급증







일자리 회복과 정책과제 15

정부의 주요 정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실적〉	신규 수급자		기존 수급자	
	1인당 지원액	수급자 수	1인당 지원액	수급자 수
1차	150만원	50.7만명	-	-
2차	150만원	14.1만명	50만원	47.2만명
3차	100만원	11.1만명	50만원	57.1만명
4차	100만원	4.3만명	50만원	67.2만명

〈신규수급자 소득감소율〉	1차	2차	3차	4차
평균	68.9	60.1	62.1	61.3
표준편차	28.5	24.4	24.2	24.7
p10	32.7	30.3	30.9	30.2
p50	68.9	55.0	60.0	57.5
p90	99.9	100.0	100.0	100.0
평균(비중=1차)	68.9	57.5	58.6	58.6

일자리 회복과 정책과제 16

정부의 주요 정책

4차례 경영자금 지원 후 분기별 손실보상

〈지원금 실적〉	대상자 수	지원금액 총액
긴급고용안정지원금	82.7만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51만명	2.8조원
버팀목자금	301만명	4.2조원
버팀목 플러스	291만명	4.8조원
희망회복자금	179.2만명	3.9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2021.3분기부터)		

향후 정책과제

위기 대응에 대한 평가

- 정책 대상의 범위는 적절하였는가?
- 지원 수준 등 정책의 강도는 적절하였는가?
- 지원 기준 등 정책집행의 방식은 적절하였는가?
- 대응을 위한 구조적 미비점은 없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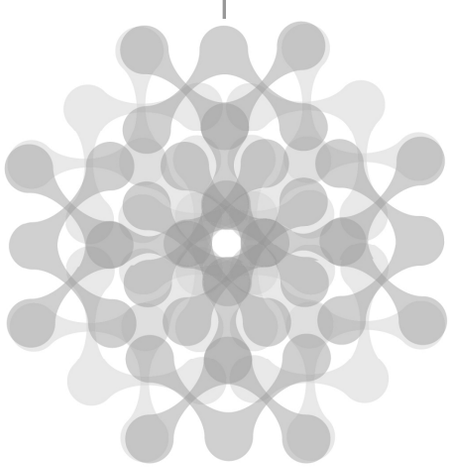
향후 위기 대응을 위한 준비

- 기존 제도의 위기 수준에 따른 대응 매뉴얼 정비
-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도 구축
- 필요한 행정 인프라 구축

발표 6

양극화 극복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방안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자료



양극화 극복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방안

2022. 06. 15.(수)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양극화 원인과 현황
2. 소득보장제도 현황과 한계
3. 양극화 극복 : 소득보장제도 측면
4. 마무리

1. 양극화 원인과 현황

Part 1

양극화 원인 : 이론적 측면

- 이데올로기적 요인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무역자유화, 자본자유화), 능력주의의 확산(구인회, 2020)
- 사회구조적 원인
  - 복지국가 재분배기능 축소, 누진적 조세제도 후퇴(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급격한 인하), 평등적 교육제도 후퇴(중산층 이상 계층에 대한 사교육의 계층유지기능)
- 기술적 요인 – 산업구조 재편(디지털 혁명,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진보(김흥종 외, 2005)
- 제도적 요인
  - 노동조합 쇠퇴, 최저임금에 대한 규제 약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약화(구인회, 2020), 기타(조세감면, 낮은 복지지출, 고령화 등)(김흥종 외, 2005)

3

1. 양극화 원인과 현황

Part 1

한국사회 양극화 관심 혹은 연구 시작점

- 양극화 연구
  - 2005년 신동균·전병유 논문이 발표되면서 관심이 높아짐. 여기서는 소득양극화에 초점(신동균, 전병유. (2005). 소득 분포의 양극화 추이: 1997-2003. 노동경제논집, 28(3). 한국노동경제학회. 77-109)
- 정치적 관심
  - 2005년 노무현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에서 시작(김왕배, 2009). 성장과 분배 선순환, 동반성장론 대두

➡ 노무현정부에서 양극화 담론을 주도한 이유로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분배정책 강화를 위한 사회적 지지와 조세 및 보험료 체계 개편 등을 위한 추동력 차원에서 시작한 것으로 평가(김왕배, 2009)

4

1. 양극화 원인과 현황

Part 1

양극화 원인 : 한국사회 성장 단계를 통해 본 관점

- 60~80년대 한국의 성장정책 : 고도 성장기
  - 재벌, 중공업 및 제조업, 전문엘리트(관료, 전문가 집단 등) 중심의 발전사회 : 노동운동, 민주화 운동은 있었지만 절대빈곤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 정부주도 인식사업 등으로 양극화, 분배 현상에 무관심(?). 경제성장이 최우선
    - ➡ 산업과 노동시장에서 격차 시작 : 기업규모별, 산업별 격차 발생
  - 교육격차 : 우리 자녀 혹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우리 가족도 좋아질 수 있다는 교육열 → 상류층은 기득권 유지, 중간계층은 더 높은 계층으로의 상승 희망, 하층은 직업을 가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 (남인숙, 2011, 20)
    - ➡ 교육에서 격차 시작 : 학벌사회, 수도권 중심(☞부동산문제 시작) 발전 등
    - ➡ 경제발전론 : 쿠츠네츠 역U자 가설, Catch-Up 효과 등 찾아보기

5

1. 양극화 원인과 현황

Part 1

양극화 원인 : 한국사회 성장 단계를 통해 본 관점

- 90년대 이후 사회발전과 경제성장 정책 : 마지막 고도성장기
  - 전문엘리트 중심의 사회고착화. 이속에서 민주화 운동을 반영한 사회정책 확대
    - ➡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면서 상대빈곤, 상대적 불평등에 관심을 두는 시기
  - 제조업,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90년대로 들어서면서 기술집약산업으로 전환에 따른 일자리 창출 능력의 저하 → 2000년대 들어 저성장 기조에 맞물리면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악화 → 양극화의 한 원인으로 진단(김원식, 2013)
  - 2000년대 들어 부동산 가격 불안정성 확대
    - ➡ 자산불평등, 부의 불평등에 대한 관심 증대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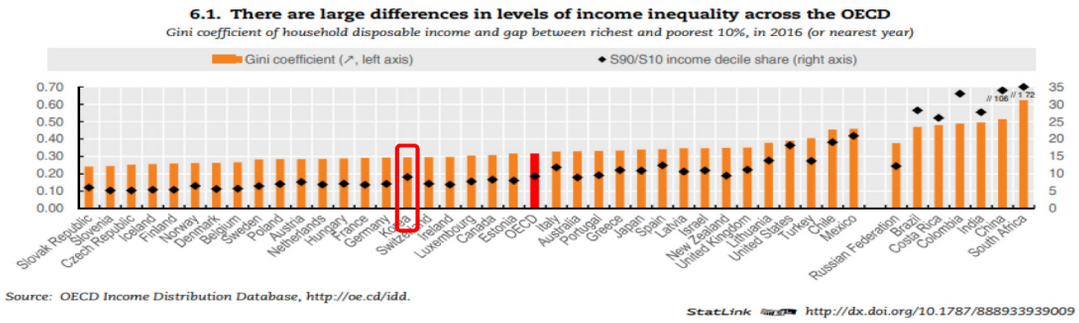
1. 양극화 원인과 현황

Part 1

양극화 의미와 현황

- 양극화(Inequality) 의미
  - 양극화는 “분포에 있어 중간이 줄어들고 분포의 양 끝단으로 밀집되는 현상”을 의미함(민승규 외, 2006.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 (소득)양극화는 중산층이 감소(앞의 그림 참조)하고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양끝단의 분포로 이동하는 형상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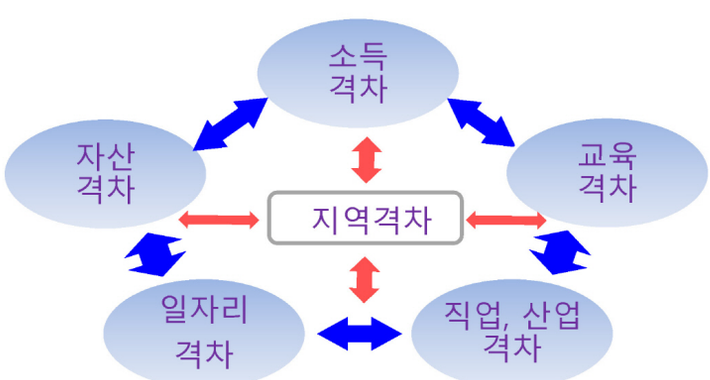


1. 양극화 원인과 현황

Part 1

양극화 원인 : 단편 혹은 다차원성

- 양극화 현상을 소득, 교육, 노동, 산업, 자산 등의 단편적 현상으로 이해하기
  - 양극화 초기 연구가 주로 관심을 두고 수행됨
- 양극화 현상이 복합적, 다차원적이고 상호연관성을 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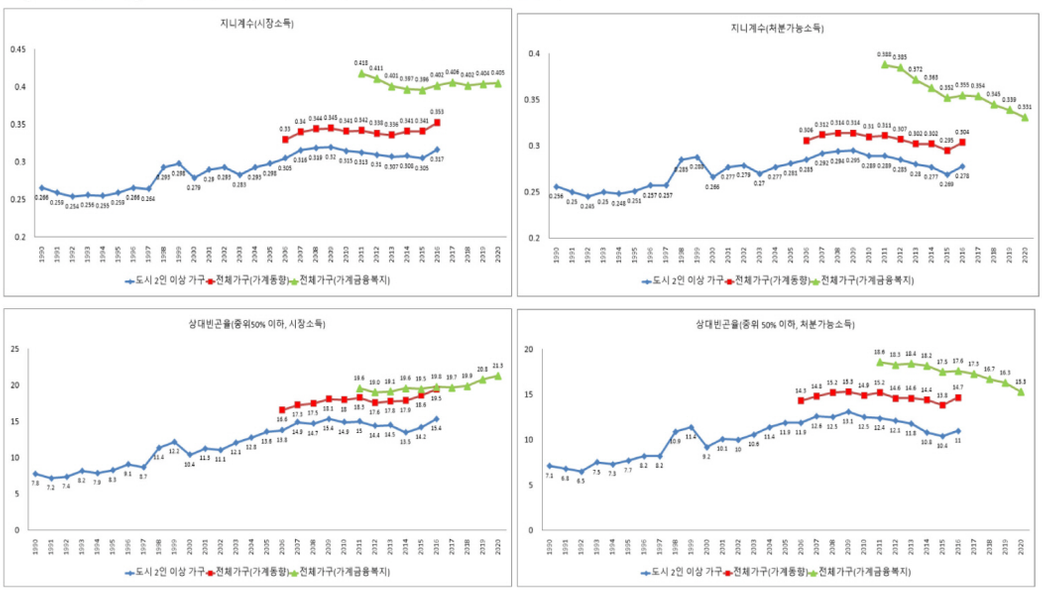


1. 양극화 원인과 현황

Part 1

한국의 양극화 현황 : 소득양극화

〔그림 1-1〕 시장 및 가처분소득 기준 분배 지수



자료 : 통계청(각년도), 국가통계포털, 재인용, 저자수정

9

1. 양극화 원인과 현황

Part 1

한국의 양극화 현황 : 소득과 자산양극화

〔표 1-1〕 소득 및 자산분위 변화

2006년	자산 1분위	자산 2분위	자산 3분위	자산 4분위	자산 5분위
소득1분위	8.7	5.9	3.8	2.7	1.5
소득2분위	6.3	6.5	4.5	3.8	2.2
소득3분위	4.0	5.5	5.5	5.1	3.2
소득4분위	1.3	1.6	3.1	4.7	4.3
소득5분위	1.0	1.4	2.1	3.1	8.5
2017년	자산 1분위	자산 2분위	자산 3분위	자산 4분위	자산 5분위
소득1분위	13.4	6.4	5.3	3.3	2.5
소득2분위	8.2	8.6	7.5	4.6	2.7
소득3분위	5.2	7.4	7.5	6.6	4.9
소득4분위	0.2	0.3	0.5	1.1	2.7
소득5분위	0.0	0.1	0.1	0.3	0.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자료 : 김태완 외(2020), 한국사회 격차문제와 포용성장 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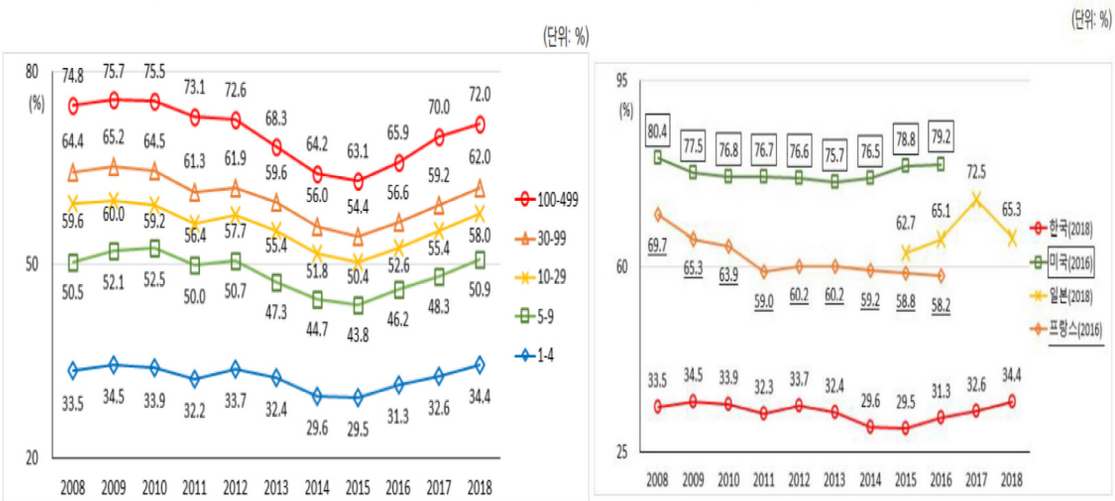
10

1. 양극화 원인과 현황

Part 1

한국의 양극화 현황 : 기업규모별 양극화

〔그림 1-2〕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 변화 추이(국내 및 국제비교)



자료: 한국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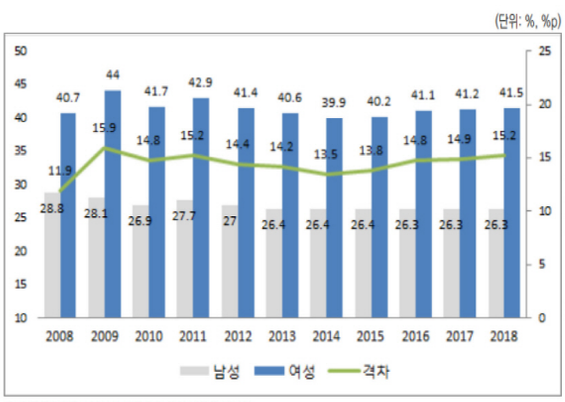
자료 : 김태완 외(2020). 한국사회 격차문제와 포용성장 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재인용

1. 양극화 원인과 현황

Part 1

한국의 양극화 현황 : 노동시장 양극화(성별)

〔그림 1-3〕 임금근로자대비 비정규직 성별 추이



주: 임금근로자를 100%로 기준으로 해당 비율을 제시함.
자료: 통계청(2008~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기준.

〔표 1-2〕 직종내 남성대비 여성 비중

(단위 : %, 천 명)

연도	관리[1]	전문[2]	사무[3]	서비스[4]	판매[5]	농림[6]	기능[7]	장치[8]	단순[9]	여성인원
2001	5.2	31.6	31.0	50.2	39.1	43.4	12.0	11.0	34.9	6,811
2002	3.1	32.3	31.9	59.9	43.0	47.0	14.6	9.5	40.6	7,676
2003	3.9	37.1	33.8	62.9	43.9	45.3	14.5	8.4	40.5	7,732
2004	3.6	35.5	32.1	64.3	44.7	50.0	14.6	10.3	40.6	8,188
2005	4.3	35.8	34.5	64.6	45.6	49.9	14.8	10.0	41.2	8,481
2006	7.6	46.0	45.4	69.4	49.3	53.0	15.5	14.7	49.9	9,912
2007	5.9	44.5	44.9	71.2	50.4	56.7	14.9	13.8	48.4	10,005
2008	11.1	44.7	44.1	67.3	50.7	49.6	16.4	14.4	51.6	10,049
2009	12.3	45.2	43.1	65.0	51.8	48.3	15.9	14.6	49.8	9,999
2010	12.4	46.2	43.8	65.1	50.8	41.2	15.7	14.4	48.4	9,755
2011	10.6	45.6	45.4	65.6	51.2	41.5	15.2	13.9	49.3	9,939
2012	11.7	45.5	47.5	66.0	49.5	36.4	13.4	13.3	52.0	10,125
2013	11.2	46.6	46.9	64.9	50.4	43.2	13.7	12.9	53.1	10,768
2014	10.1	47.4	47.9	64.1	51.0	42.2	12.7	13.1	52.0	10,972
2015	11.9	48.3	46.8	66.5	51.6	41.6	12.8	13.0	52.3	11,182
2016	10.4	48.0	48.0	65.9	50.4	40.3	13.6	11.6	51.4	11,283
2017	11.9	48.5	47.9	66.5	50.6	38.9	14.2	12.3	50.6	11,558
2018	15.4	49.0	48.5	67.4	50.9	40.3	13.0	12.2	49.2	11,628
2019	15.9	49.1	49.3	66.7	50.2	38.2	12.5	12.1	49.8	11,619

자료 : 김태완 외(2020). 한국사회 격차문제와 포용성장 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재인용

➡ **정규직과 비정규직, 학력과 참여 산업 등에 의한 격차 등**

1. 양극화 원인과 현황

Part 1

한국의 양극화 현황(K자 양극화) : 코로나 이후 소득, 자산 양극화

코로나19, 소득 양극화 더욱 키워…저·고소득층 간 소득 5배 차이



2022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중 갈무리. [출처=신한은행]

저소득층, 고소득층과 자산 격차 8.5배까지 늘어나…빚의 무게도 달라



2022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중 갈무리. [출처=신한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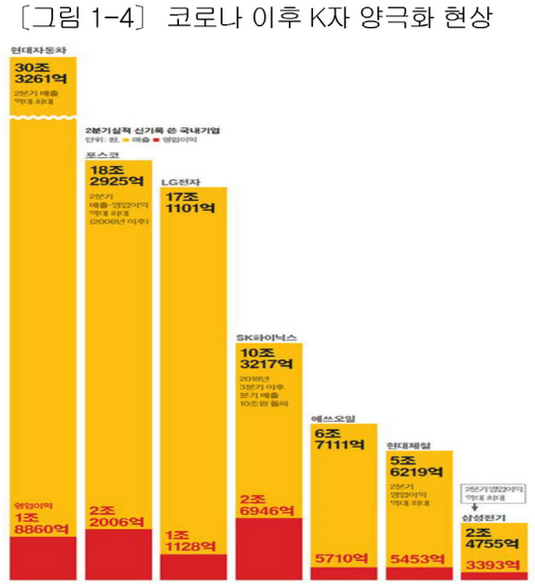
13

1. 양극화 원인과 현황

Part 1

한국의 양극화 현황(K자 양극화) : 코로나 이후 기업별 양극화

〔그림 1-4〕 코로나 이후 K자 양극화 현상





자료 : 중앙일보(2021.08.01). ‘K자 양극화의 공포: 대기업 ‘사상최대’, 소상공인 ‘휴폐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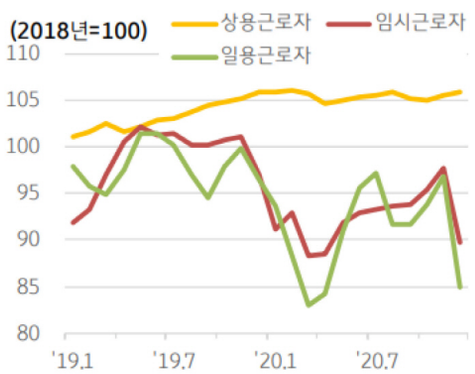
14

1. 양극화 원인과 현황

Pa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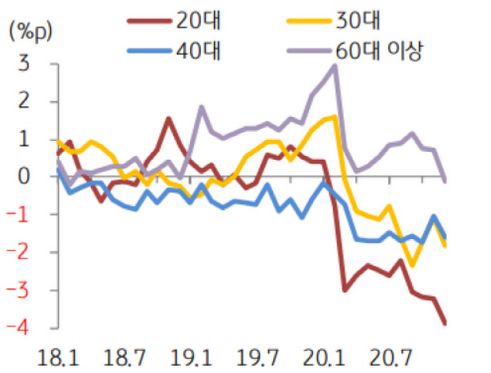
한국의 양극화 현황(K자 양극화) : 코로나 이후 노동시장양극화

[임금근로자 지수]



주: 계약 기간 1년 이상은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은 임시근로자, 1일 이상은 일용근로자로 분류
자료: 통계청

[연령별 고용률 변동(전년 동월 대비)]



자료: 통계청, 블룸버그

자료 : 이승훈(2020).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의 양극화 심화와 과제. KB지식 비타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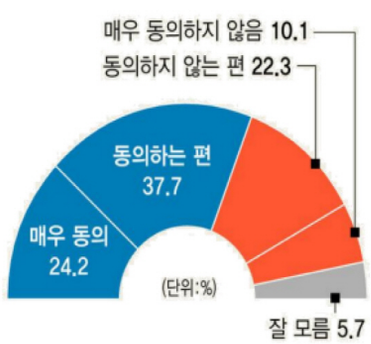
15

1. 양극화 원인과 현황

Pa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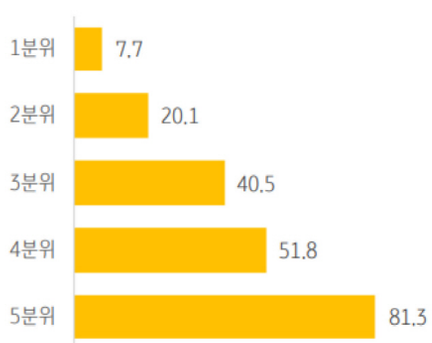
한국의 양극화 현황(K자 양극화) : 코로나 이후 교육양극화

[온라인 수업에 따른 교육 격차]



주: 만 18세 이상 1000명, 5월23일~24일 조사
자료: 사교육없는세상, 리얼미터

[소득 5분위별 교육비 (월, 만원)]



주: 2019년 가계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자료 : 이승훈(2020).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의 양극화 심화와 과제. KB지식 비타민

16

1. 양극화 원인과 현황

2. 소득보장제도 현황과 한계

3. 양극화 극복 : 소득보장제도 측면

4.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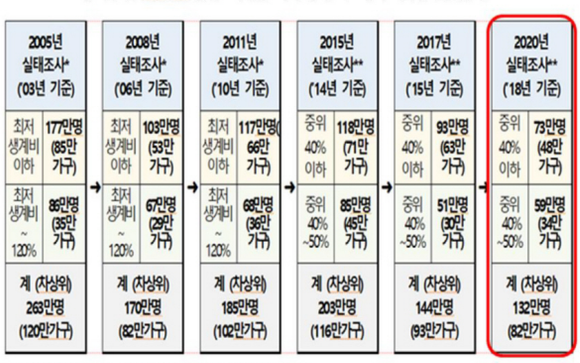
2. 소득보장제도 현황과 한계

Part 2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 빈곤, 실업 등의 위기 계층에 대한 보호 미흡
- 연금 사각지대 상존, 상병수당 제도 미도입 등

〔그림 Ⅱ-4〕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규모



자료: 보건복지부(2020).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재인용
김문길, 김태완 외(2020),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Ⅱ-5〕 고용보험 사각지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9), 고용안전망확충 사업 분석, p18. 재인용
배규식(2021). 코로나19와 일자리.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 p29. 재인용

2. 소득보장제도 현황과 한계

Part 2

빈곤층 : 기초생활보장제도 한계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및 노인빈곤 문제 상존

표 3. 일반 수급자의 연도별 연령별 비율 추이(2001~2020년)

(단위: %)

구분	0~4세	5~9세	10~19세	20~39세	40~64세	65세 이상
2001년	1.1	2.3	4.1	1.2	3.0	9.7
2002년	1.0	2.2	3.9	0.9	2.8	9.1
2003년	1.0	2.3	3.9	1.1	2.8	8.9
2004년	1.1	2.4	4.1	1.1	2.8	8.8
2005년	1.3	2.7	4.4	1.2	2.9	8.7
2006년	1.3	2.7	4.6	1.2	2.9	8.4
2007년	1.3	2.6	4.6	1.1	2.9	8.2
2008년	1.2	2.4	4.5	1.1	2.9	7.7
2009년	1.2	2.4	4.6	1.2	3.0	7.5
2010년	1.2	2.2	4.4	1.1	2.9	7.3
2011년	1.1	2.0	4.1	1.1	2.7	6.8
2012년	1.0	1.8	3.7	1.0	2.5	6.5
2013년	0.9	1.6	3.4	1.0	2.5	6.2
2014년	0.9	1.5	3.2	1.0	2.4	6.0
2015년	1.1	3.2	6.1	1.1	2.7	6.4
2016년	1.0	3.1	6.1	1.1	2.6	6.2
2017년	0.9	2.8	5.6	1.1	2.6	6.1
2018년	1.1	2.8	5.4	1.2	2.8	7.4
2019년	1.3	3.0	5.2	1.3	3.1	8.2
2020년	1.6	3.3	5.7	1.6	3.5	8.5

주: 연령대별 수급자 수/연령별 주민등록연앙인구×100

자료: 김태완, 김기태, 이주미, 강예은. (20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접근성 강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2. 재인용.

19

2. 소득보장제도 현황과 한계

Part 2

청년, 중장년 대상 소득 및 고용보장제도 한계

- 근로연령층(만 18~64세)은 실업, 휴·폐업 등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만을 대상을 생계급여 지급.
  - 근로장려세제는 연간 1회(근로자 2회) 급여 지급으로 일시적 지원에 불과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도입되었지만, 수급대상, 급여조건 매우 협소

I유형 · 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	I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 매출 1,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https://www.kua.go.kr/uapaa010/selectSporTrgt.do). 재인용.

20

2. 소득보장제도 현황과 한계

Part 2

중고령세대 불안정

- 중장년기 불안정 노동시장 참여는 노인빈곤의 주요 원인 중 하나

표 3. 중장년기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에 따른 노인빈곤율(2018년 기준)

(단위 : %)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종사	비경제 활동인구	주된경제활동 변동자	소계
소계	9.6	20.7	32.6	38.2	29.4	31.7
남성	7.3	18.0	25.0	40.1	24.3	26.7
여성	31.6	28.9	43.6	37.2	36.0	36.3
주된경제활동 점유율	6.4	14.2	18.6	49.9	12.9	100.0

주: 1) 빈곤율은 균등화 가처분소득 50%를 기준으로 함

표 4. 중장년기 주된 활동 기업규모에 따른 노인빈곤율(2018년 기준)

(단위 : %)

구분	10인 미만	10~100인 미만	100~500인 미만	500인 이상	기업규모 변동자	소계
소계	30.7	13.7	0	0	32.7	29.4
남성	26.0	7.5	0	0	26.7	23.3
여성	37.4	26.1	0	0	37.7	36.4
주된활동 기업 규모 점유율	39.5	9.7	0.4	1.7	48.8	100.0

주: 1) 빈곤율은 균등화 가처분소득 50%를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조사, 각연도

자료: 이주미 김태완(2020), 노인빈곤원인에 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40(2).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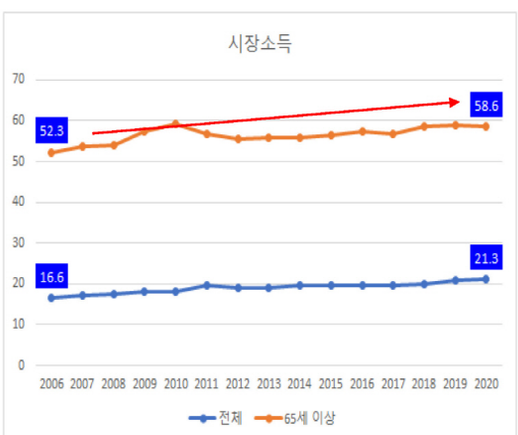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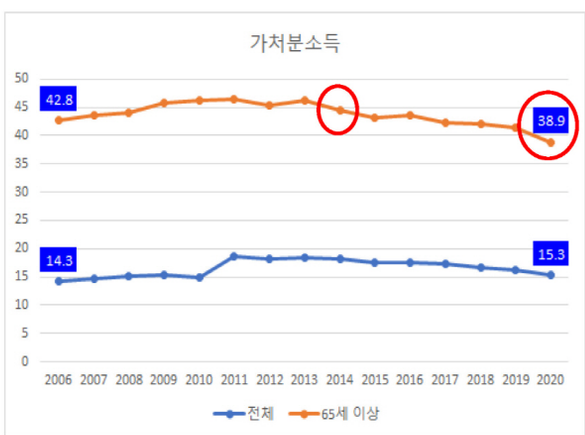
2. 소득보장제도 현황과 한계

Part 2

노인 빈곤 : 노후소득보장 개편 필요성

- 배경 : 한국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2014년 이후 점진적으로 (가처분소득)감소하는 경향 – 기초연금 도입 시점(2014년)





주: 2006-2010 가계동향조사, 2011년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소득분배지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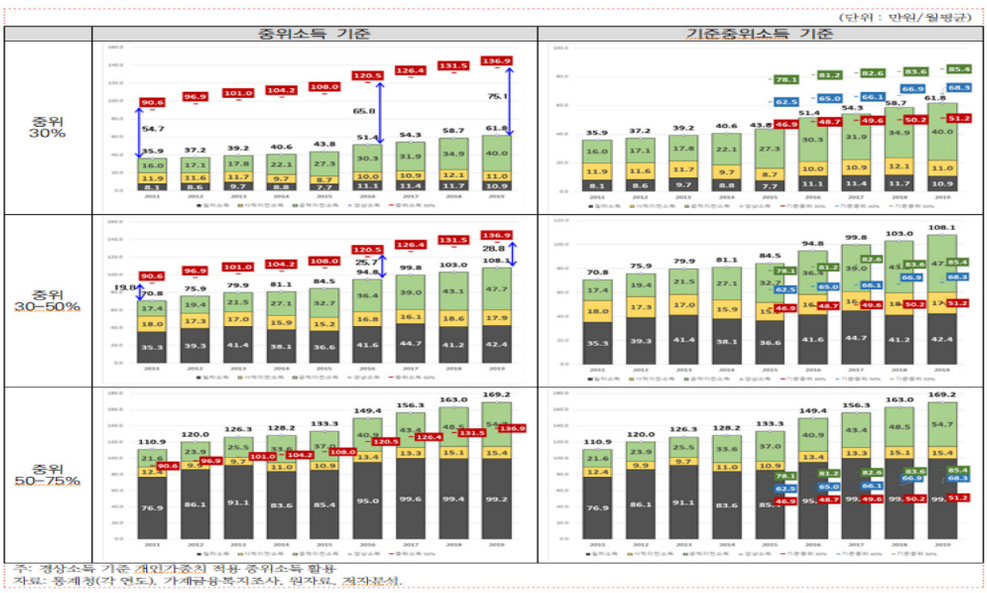
22

2. 소득보장제도 현황과 한계

Part 2

- 빈곤선과의 격차 확대 중

[그림 Ⅰ-1-6] 소득수준별 노인(65세 이상)의 소득수준



주: 경상소득 기준 개인간중치 적용 중위소득 활용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분석.

자료: 김태완, 이주미(2021), 노인빈곤 진단과 대응,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재인용

2. 소득보장제도 현황과 한계

Part 2

- 노인 세대 : 베이비 부머의 다른 특징
  - 베이비 부머세대 노인연령 유입에 따른 미래세대 노인 소득보장 문제

(노인연령별 빈곤율)

(단위 : %, %p)

구분	65세	66세	67세	68세	69세	70세	71세	72세	73세	74세	75세
2011	36.9	34.7	36.2	41.7	52.3	48.2	51.6	55.3	55.2	54.6	57.1
2012	32.9	36.7	38.6	40.9	44.3	54.3	47.5	51.6	59.1	56.6	58.1
2013	34.5	35.9	34.3	38.0	41.4	45.3	54.2	49.9	58.2	61.9	61.3
2014	28.8	33.2	34.5	35.6	42.6	45.2	44.2	54.9	53.0	61.3	61.2
2015	29.7	32.5	33.4	37.4	44.0	46.1	42.4	49.4	55.5	52.9	63.3
2016	25.9	26.6	30.9	33.7	36.3	38.1	37.6	42.1	45.7	51.2	56.2
2017	23.7	27.6	28.7	30.6	37.0	36.1	40.6	44.4	45.4	45.7	51.9
2018	24.7	25.9	26.9	33.4	32.0	38.8	40.9	40.6	43.2	53.3	52.1
2019	21.2	25.4	26.8	27.8	31.1	32.8	44.1	43.7	44.1	44.5	54.4
변화율	-15.7	-9.3	-9.4	-13.9	-21.2	-15.4	-7.5	-11.6	-11.1	-10.1	-2.7

주: 경상소득 기준 개인간중치 적용 중위소득 활용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분석.

자료: 김태완, 이주미(2021), 노인빈곤 진단과 대응,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재인용

  - 국민연금 수급연령 조정에 따른 60세 이후 소득크레바스(절벽) 문제

    ➡ 수당 vs 노동시장 중 어느 것으로 풀 것인지(정년폐지, 계속고용, 정년 연장 등)

  - 신정부 개편 방향 ➡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설치,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등

2. 소득보장제도 현황과 한계

Part 2

기타 계층 : 저출산 및 장애인 등

- 배경 : 계속해서 낮아지는 출산율과 장애인 빈곤율 증가



<노인 및 장애인의 빈곤율 추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장애인	시장소득	행정자료 대체X	55.4	54.2	52.4	53.2	52.7	-	-	-
		행정자료 대체O	-	-	-	-	49.7	51.8	54.6	56.0
	가처분소득	행정자료 대체X	47.0	46.4	42.0	41.9	43.2	-	-	-
		행정자료 대체O	-	-	-	-	40.6	40.3	41.5	42.0
노인	시장소득	행정자료 대체X	60.1	59.8	60.7	61.6	58.7	-	-	-
		행정자료 대체O	-	-	-	-	58.7	58.4	59.9	59.8
	가처분소득	행정자료 대체X	48.7	48.4	47.0	46.6	43.9	-	-	-
		행정자료 대체O	-	-	-	-	43.6	42.3	42.0	41.4

주: 빈곤율은 가구 규모에 따라 균등화된 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하여 산출됨.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부터 소득 정보(2016년 기준)가 행정자료로 대체되어 2012~2015년과 2016~2019년 사이에 시계열 단절이 존재함.
자료: 2012~2015년은 가계금융복지조사(2013~2016년) 원자료 분석. 2016~2019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빈곤통계연보 인용.
자료: 오욱찬(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자료 재인용

- 신정부 개편 방향 ➡ 부모급여 신설(11개월 이하 월 100만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등

25

1. 양극화 원인과 현황

2. 소득보장제도 현황과 한계

3. 양극화 극복 : 소득보장제도 측면

4. 마무리

3. 양극화 극복 : 소득보장제도 측면

Part 3

소득보장 사각지대 진단

높은 노인빈곤율 급여충분성 문제

대상사각지대 제도확충 문제

〈표 4-1-2〉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연령별 규모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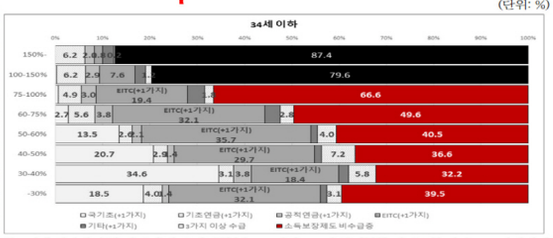
(단위: %, 만명)

구분	18세 미만		18-34세		35-49세		50-64세		65-74세		75세 이상		전체	
-30%	17.8	(7만)	15.2	(6만)	28.6	(11만)	31.4	(13만)	1.5	(1만)	5.5	(2만)	100.0	(40만)
30-40%	25.0	(8만)	16.1	(5만)	27.6	(9만)	26.7	(9만)	2.7	(1만)	1.9	(1만)	100.0	(33만)
40-50%	28.0	(16만)	18.4	(10만)	28.1	(16만)	21.6	(12만)	0.9	(0만)	3.0	(2만)	100.0	(56만)
50-60%	23.5	(16만)	20.3	(14만)	28.8	(20만)	24.7	(17만)	1.0	(1만)	1.7	(1만)	100.0	(70만)
60-75%	26.8	(45만)	21.1	(35만)	27.9	(47만)	22.5	(38만)	0.7	(1만)	1.1	(2만)	100.0	(167만)
75-100%	27.8	(118만)	20.8	(88만)	28.6	(121만)	21.8	(92만)	0.4	(2만)	0.6	(2만)	100.0	(423만)
소계		(210만)		(159만)		(224만)		(181만)		(6만)		(10만)		(789만)
100-150%	25.7	(227만)	21.5	(190만)	30.9	(273만)	21.0	(186만)	0.3	(3만)	0.5	(4만)	100.0	(883만)
150%-	20.0	(301만)	24.3	(366만)	29.3	(441만)	25.9	(390만)	0.3	(4만)	0.3	(5만)	100.0	(1508만)
전체	23.2	(738만)	22.5	(715만)	29.5	(938만)	23.8	(757만)	0.4	(12만)	0.6	(19만)	100.0	(3180만)

주: 기초연금만 받는 64세 이하의 경우 비수급층으로 산정.
자료: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8년 소득기준), 원자료.

〔그림 4-1-4〕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비율(만 34세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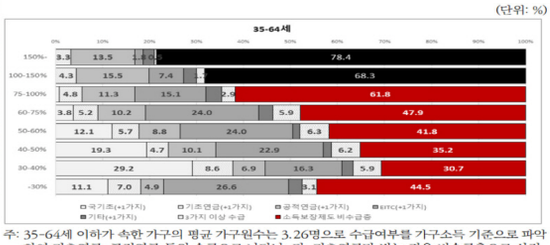
(단위: %)



주: 34세 이하가 속한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3.84명으로 수급여부를 가구소득 기준으로 파악하여 기초연금, 공적연금 등의 수급으로 나타남. 단,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 비수급층으로 산정.

〔그림 4-1-5〕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비율(만 35~64세 이하)

(단위: %)



주: 35~64세 이하가 속한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3.26명으로 수급여부를 가구소득 기준으로 파악하여 기초연금, 공적연금 등의 수급으로 나타남. 단,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 비수급층으로 산정.

자료: 김태완 외(2020), 우리나라 소득분배 진단과 사회보장 재구조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인용.

27

3. 양극화 극복 : 소득보장제도 측면

Part 3

노인 빈곤 대응 : 노후소득보장 개편

- 기초연금 개편 방향
  - 기초연금 :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현 정부)
    - ➡ 국민연금 A값 약 16% 수준. 2018년 연금개혁 당시 제안된 사항
    - ➡ 줬다 뺐는 논쟁,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 가능성
- 국민연금
  - 2022-2023년 5차 재정계산 예정 : 소득대체율 vs 보험료 인상 ➡ 현세대도 가난, 미래세대도 가난
  -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 검토 : 현세대 노인 vs 미래세대 노인
    - ➡ 현세대 노인 : 국민연금 불가능. 따라서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일자리, 주택 연금 등 대안 제시 필요
    - ➡ 미래세대 노인 : 국민연금 개혁, 기초연금 및 특수직역연금과의 관계 등 더욱 복잡

28

3. 양극화 극복 : 소득보장제도 측면

Part 3

빈곤층 및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편
  - 문재인 정부 대응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급여 단계적 폐지

〈표 1-1-2〉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

구분	2015년 7월	2017년 11월	2018년 10월	2019년 1월	2020년 1월	2021년 1월	2021년 10월
생계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노인·중증장애인 포함된 가구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구(만 30세 초과)	그 외 가구대상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소득 하위 70%)	부양의무자 가구 노인이 포함된 가구 (소득 하위 70%)		
주거급여			폐지	유지			
교육급여	폐지	유지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a).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안)

  - 신정부 개편 방향 ➡ 기준중위소득 인상, 재산 및 자동차 기준 완화, 주거급여 및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등

29

3. 양극화 극복 : 소득보장제도 측면

Part 3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향
  - 재산 기준 변경 : 재산의 소득환산율, 자동차 기준 및 급지 구분

〈표 4-2-4〉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70.

〈표 4-2-5〉 기본재산액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69.

〈표 4-2-6〉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 한도액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1.2억원	9,000만원	5,200만원
의료급여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33.

30

3. 양극화 극복 : 소득보장제도 측면

Part 3

근로빈곤 및 근로연령층 지원 : 전국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

-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2018기준) 해소를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및 확대 조치

<table>
<tr><td colspan="5">경제활동인구 2,804만 명</td></tr>
<tr><td colspan="5">취업자 2,691만 명</td></tr>
<tr><td rowspan="2">①비임금
근로자
686만 명
(25.5%)</td><td colspan="4">임금근로자 2,005만 명(74.5%)</td></tr>
<tr><td>②적용제외
345만 명
(17.2%)</td><td>적용대상
1,660만 명</td><td>실제 가입자
1,298만 명
(78.2%)</td><td>③미가입자
361만 명
(21.8%)</td></tr>
<tr><td colspan="2">제도적 사각지대</td><td>고용보험 수혜대상</td><td>고용보험 수혜자</td><td>실질적 사각지대</td></tr>
</table>

주: 1)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함.
2) 적용제외 대상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포함이 되어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9),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 분석, p.18.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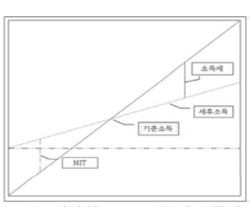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활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 근로장려세제 등 근로연령층 대상 지원제도 통합과 조정을 통한 실질적 실업부조 제도 도입
  - 현재의 근로연령층 지원제도는 일시적, 대상한정적 제도라는 점에서 장기실업,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위기 대상을 위한 지원에 한계. 적극적 제도 개선 필요

31

3. 양극화 극복 : 소득보장제도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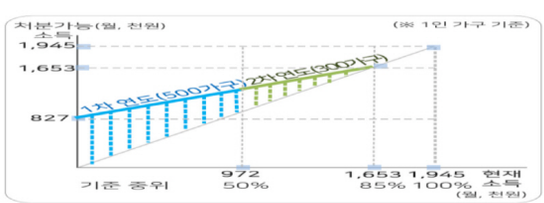
Part 3

- 근로빈곤층에 대한 대응 : 긴급복지지원제도 이외 대응
  - 부의 소득세와 안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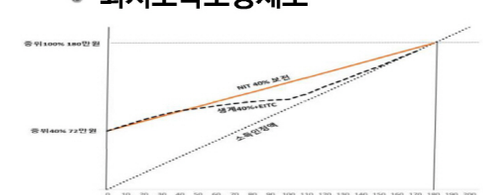
-면세점 기준으로 정(+)의 소득 납세자와 부(-)의 소득세 수혜자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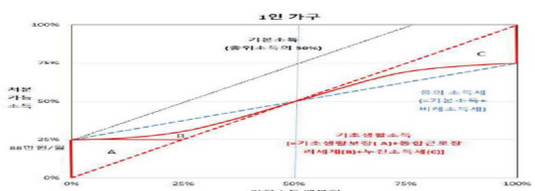
자료: 김낙회. (2021). 부의 소득세 도입방안,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 자료집



자료: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보도자료(2022)

  - 최저소득보장제도





자료: 오건호. (2020), 미래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방안: 소득 중심 재구조화,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토론회

자료: 노대명(2021), 소득보장체구조화와 대안적 소득보장 체안. 사회안전망 6차포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4. 재인용)

  - 신정부 개편 방향 ➡ 근로장려세제 확대 추진. 단 자활사업은 제외됨

32

3. 양극화 극복 : 소득보장제도 측면

Part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es)

-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으로 표현. 여기에는 직업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이 포함(김혜원, 2019, p111)
-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 진행된 유연안정화 정책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사회보장 확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강조 등 사회보장을 넘어서 고용 보호 정책의 변화를 포함(최유석, 2016). 노사 간의 타협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대신에 사회보장을 확대하고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이 결합함

〔 총자산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예산 국제비교 〕

(단위 : GDP=100, %, %p)

구분	전체	적극적 노동시장							소극적 노동시장
			직접 일자리	직업 훈련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창업 지원	보호 지원	
OECD(2017)	1.20	0.52	0.06	0.12	0.13	0.09	0.01	0.09	0.64
한국(2017)	0.64	0.32	0.16	0.03	0.04	0.03	0.03	0.02	0.32
한국(2020)	1.04	0.49	0.13	0.06	0.06	0.18	0.03	0.03	0.54

주: 1) 보호·지원: 장애인 등 노동능력이 감소된 사람들의 노동시장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한국에서는 별도 구분하지 않고 다른 유형에 포함.
2) 2020년도 수치는 2017년 OECD 기준을 가정하여 산정한 예상치임.
자료: 오성욱(2020). 취약계층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특성 및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발표자료.

33

3. 양극화 극복 : 소득보장제도 측면

Part 3

기타 수당 제도 : 아동수당 및 장애인 연금 등

- 향후 방향
  - 아동 수당 : 현행 만 7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운영 중
    - ➡ 아동수당 지급 연령 조정 :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생 전체, 중학생 등
    - ➡ 아동수당 지급 급여 조정 : 월 10만원에서 얼마 인상? 자녀수 별 차등 지원?
  - 장애인연금 : 기초연금과 연동하여 월 30만원 지급 중
    - ➡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조정 : 중증과 3급 단일까지 포함여부(약 20만명)
    - ➡ 장애인연금 지급 급여 조정 : 기초연금 40만원과 보조 아니면 전면 개편(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과의 관계)
  - 신정부 개편 방향 ➡ 부모급여 신설(11개월 이하 월 100만원, 2024년)로 대응

34

1. 양극화 원인과 현황

2. 소득보장제도 현황과 한계

3. 양극화 극복 : 소득보장제도 측면

4. 마무리

4. 마무리

Part 4

소득보장제도 남은 쟁점

- 빈곤층 및 취약계층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복지지원제도
  - 생계급여 기준 상향에 따른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
    - ➡ 최저임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준에 주는 영향, 근로연령층 빈곤함정 등
  - 긴급복지지원제도 :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근로장려세제,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등 여러 소득보장제도에 많은 영향
- 사회수당 제도 확장 혹은 유지
  - 첫째, 청년층을 위한 소득지원제도 검토 가능성 ➡ 자산기반 복지로 해결 가능?
  - 둘째, 50대 이상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방안 ➡ 소득과 고용보장 대표적 사각지대
  - 셋째, 한부모 등 취약여성,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지원 ➡ 차별금지법

36

4. 마무리

Part 4

소득보장제도 남은 쟁점

- 소득보장제도 불안정성 : 현금급여 VS 현물급여
  - 시장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현상을 2차 분배인 현금급여로 모두 지원 가능할까
    - ➡ 현금급여는 빈곤층, 취약계층 등 제한적. 새롭게 등장하는 신빈곤층(청년, 근로빈곤층 등) 대상 현금급여 도입의 한계
- 지출경감 정책 : 현물급여 혹은 사회서비스 확대
  - 첫째, 지출부담 높은 비용에 대한 직간접 지원 ➡ 주거 및 교육급여 확대, 대학생 등 장학금(대출이 아닌 장학금) 확대 등
  - 둘째, 만성질환, 고령층 대상 지원 방안 ➡ 의료서비스, 보장성 등 확대
  - 셋째, 청년, 신혼부부, 자녀 둔 가구 등 대상 ➡ 양육부담 절감, 주거공급 확대 등

37

4. 마무리

Part 4

미래 사회 양극화 ?

- 디지털 전환,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정보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 양극화
  - 미래 자본은 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개인, 산업 간 양극화 심화
    - ➡ 사례 : 국내 네이버, 카카오, 웹 기반 산업 등의 발달과 전통 산업의 약화
  - 미래 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은 제한적 이며, 메타버스 등 신기술 발달에 따른 전통적 산업 기반의 약화 또는 붕괴
    - ➡ 사례 : 메타버스 등 사이버 공간 확대와 활동 극대화로 기존 건물 등과 같은 공간의 필요성이 약화. 이로 인한 일자리, 부동산 및 서비스 산업 약화 등 부정적 영향 발생
- 노동자 중심의 사회보험, 빈곤층 중심 공공부조 제도 지속가능성 ? ➡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고민 필요

38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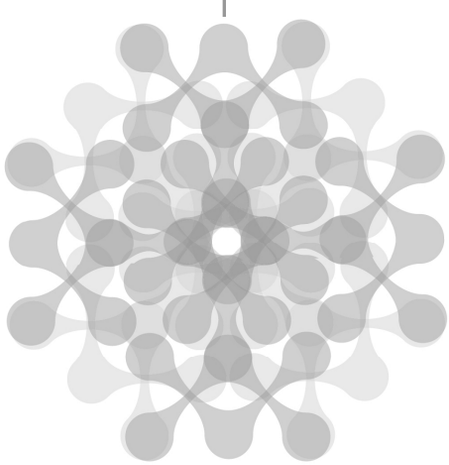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9

발표 7

지속가능한 방역인프라를 위한 공중보건체계 구축방안

김동현
한림대학교



지속가능한 방역인프라를 위한 공중보건체계 구축방안

김 동 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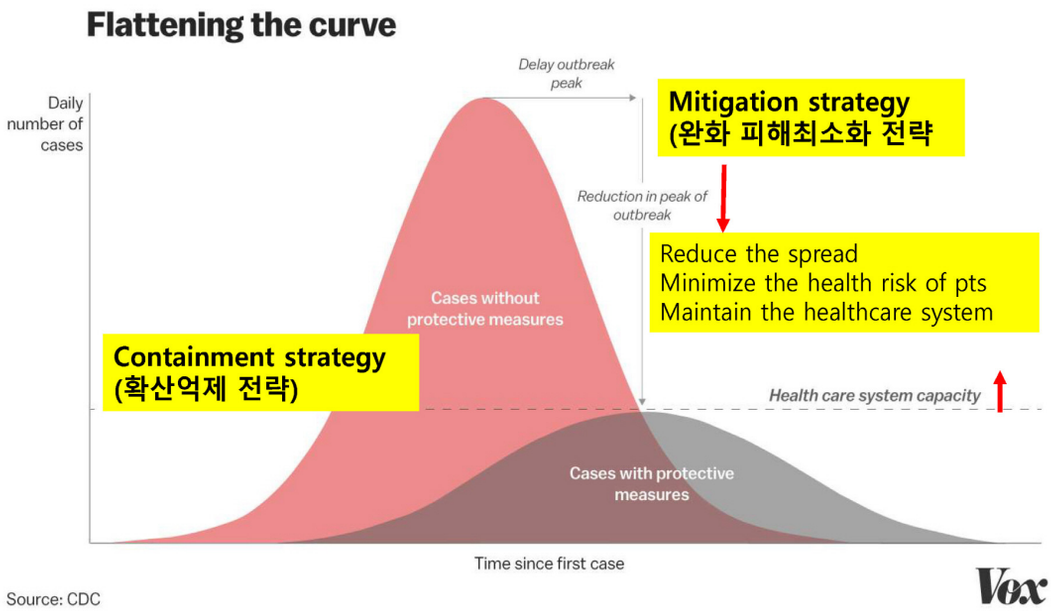
1. 코로나 19와 지속되는 위기: 복기가 필요한 지점
2. 감염병 팬데믹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이해
3. 우리나라 공중보건인프라 강화 방안
4. 맺는 말..

목차

1. 코로나 19와 지속되는 위기: 복기가 필요한 지점
2. 감염병 팬데믹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이해
3. 우리나라 공중보건체계 강화 방안
4. 맺는 말.. .

Ongoing and Next pandemic crisis 에 대한 대비 대응을 위해 지난 시기에 대한 복기가 필요 !!

Ultimate goal of response against COVID-19



복기 1: 코로나 위기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대응(~2021)

- Containment strategy (TT-IQ)
  vs Mitigation strategy

  ↓

  : Staged social distancing
  vs Draconian lock down

- Community-wide protection
  vs Focused protection

- Avoidable death vs Acceptable risk

The Great Barrington Declaration (10/4/2020)

The most compassionate approach that balances the risks and benefits of reaching herd immunity, is to allow those who are at minimal risk of death to live their lives normally to build up immunity to the virus through natural infection, while better protecting those who are at highest risk. We call this **Focused Protection.**

.....

Those who are not vulnerable should immediately be allowed to resume life as normal. Simple hygiene measures, such as hand washing and staying home when sick should be practiced by everyone to reduce the herd immunity threshold. Schools and universities should be open for in-person teaching.

THE JOHN SNOW MEMORANDUM (10/15/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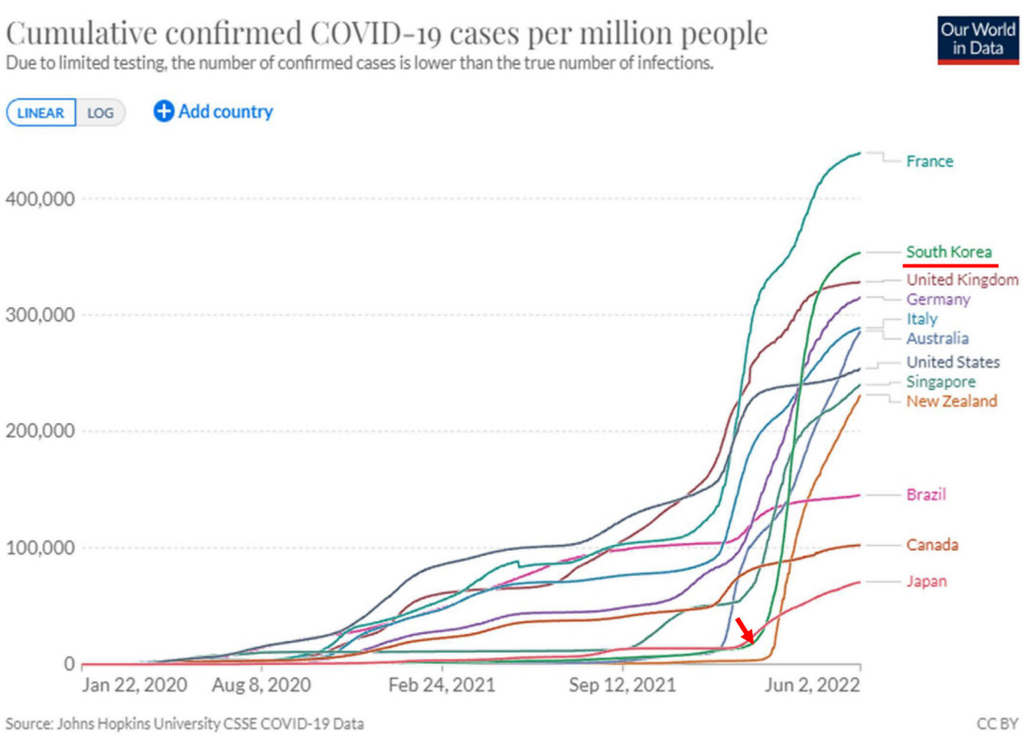
Any pandemic management strategy relying upon **immunity from natural infections for COVID-19 is flawed**. Uncontrolled transmission in younger people risks significant morbidity(3) and mortality across the whole population. In addition to the human cost, this would impact the workforce as a whole and overwhelm the ability of healthcare systems to provide acute and routine car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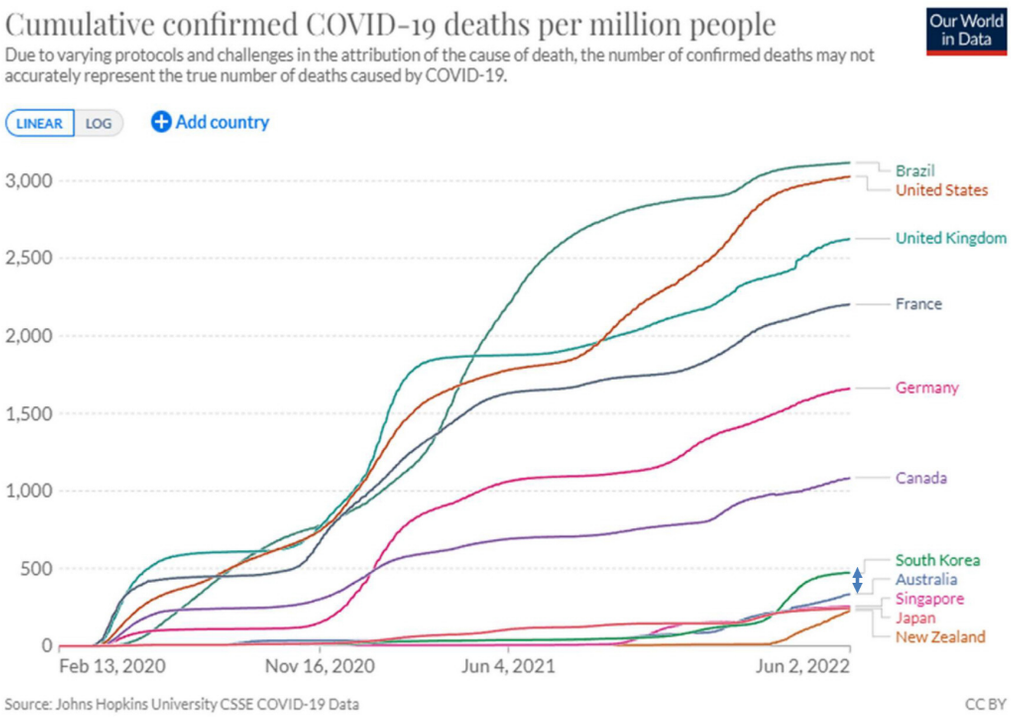
Such an approach also risks further exacerbating the socioeconomic inequities and structural discriminations already laid bare by the pandemic. Special efforts to protect the most vulnerable are essential but must go hand-in-hand with multi-pronged **population-level strategies.**

(Alwan NA et al., 2020, Lanc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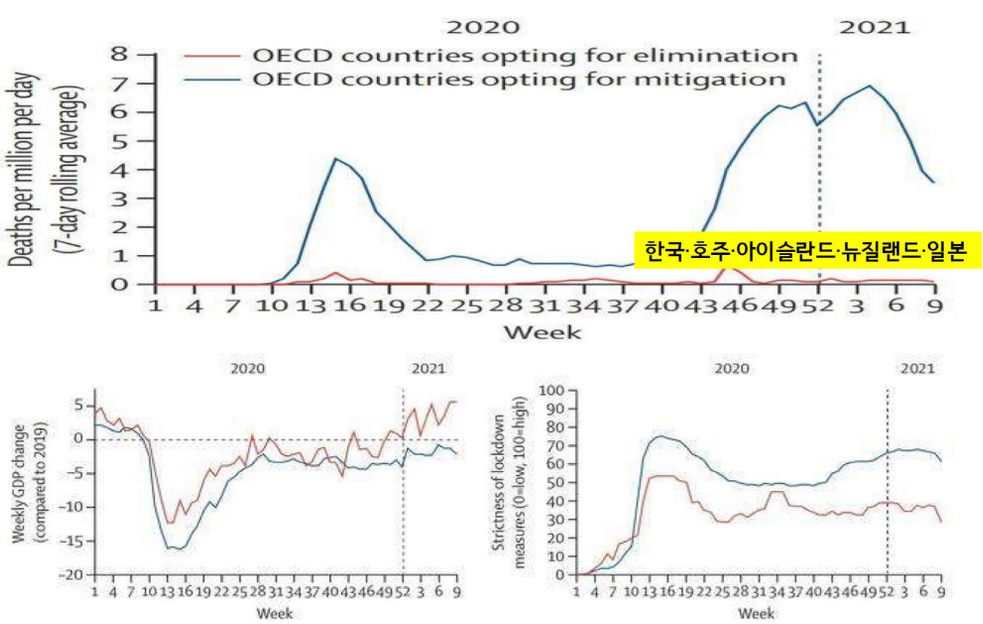
방역: 코로나19로 인한 인구 백만명당 누적확진자수, 6/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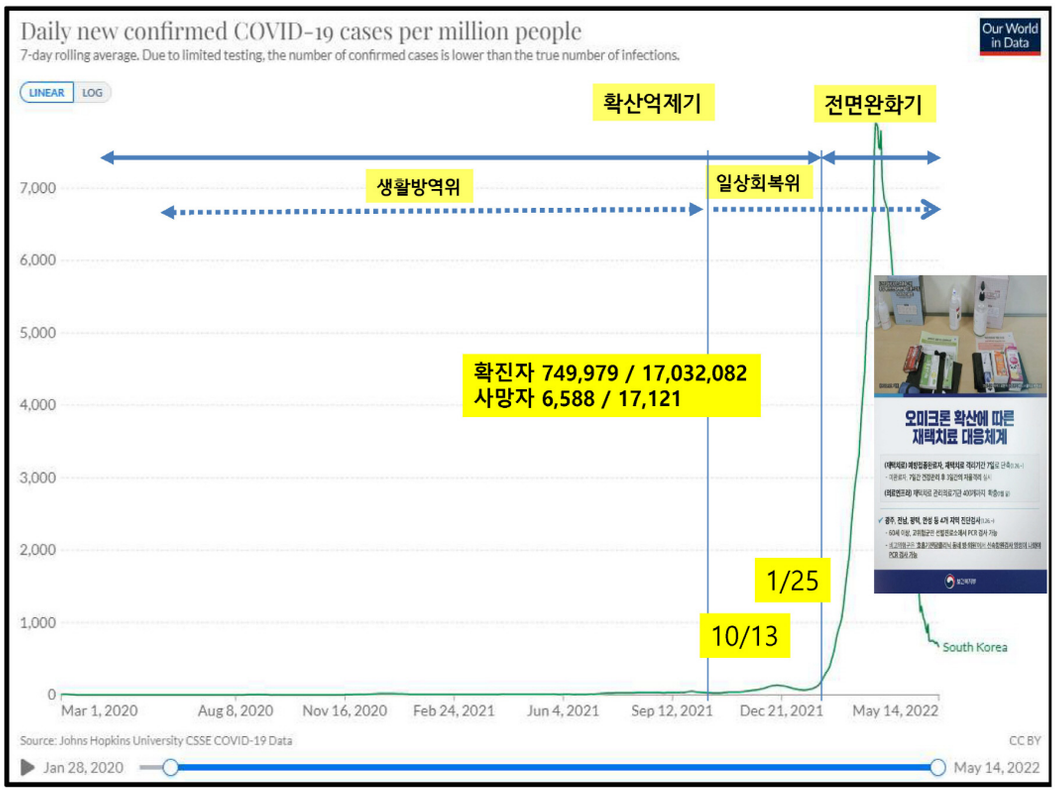
의료: 코로나19로 인한 인구 백만명당 누적사망자수, 6/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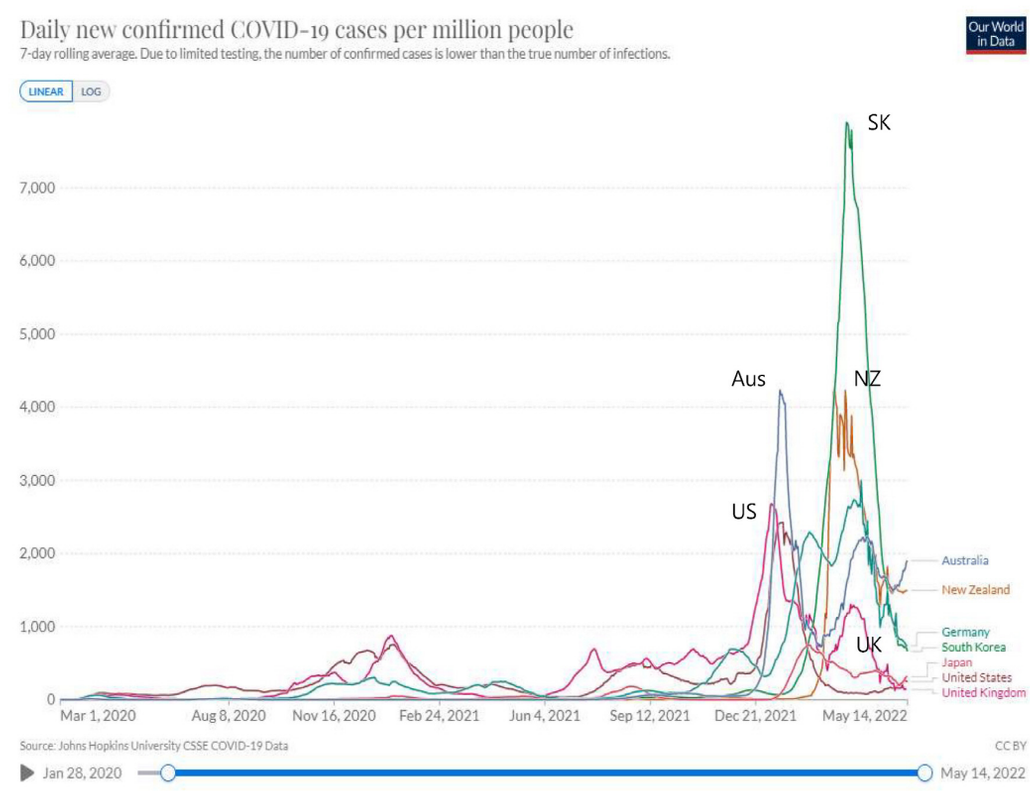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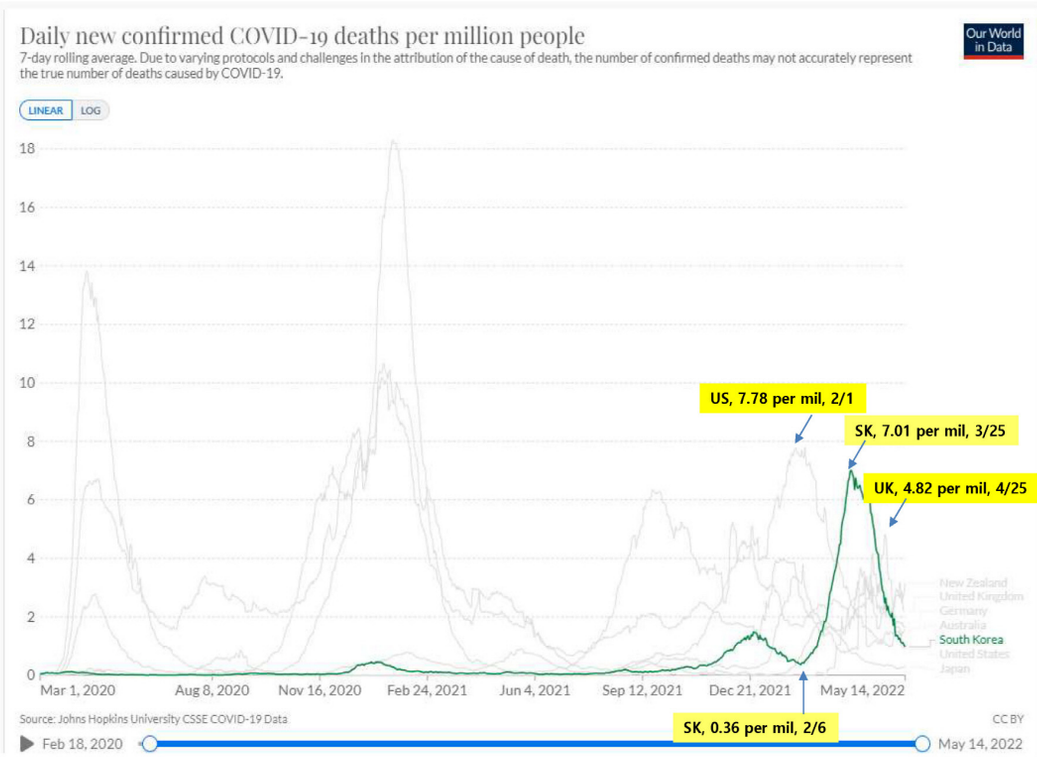
SARS-CoV-2 elimination, not mitigation, creates best outcomes for health, the economy, and civil liberties (Lancet, 4/28/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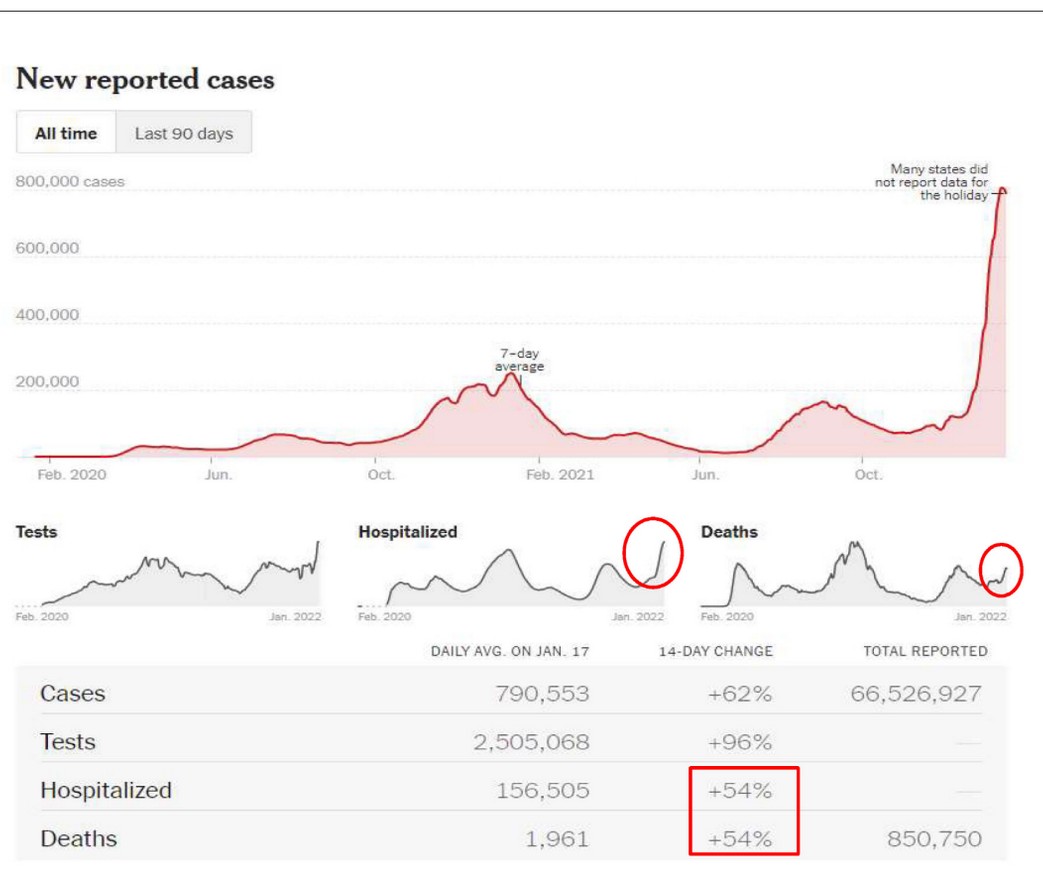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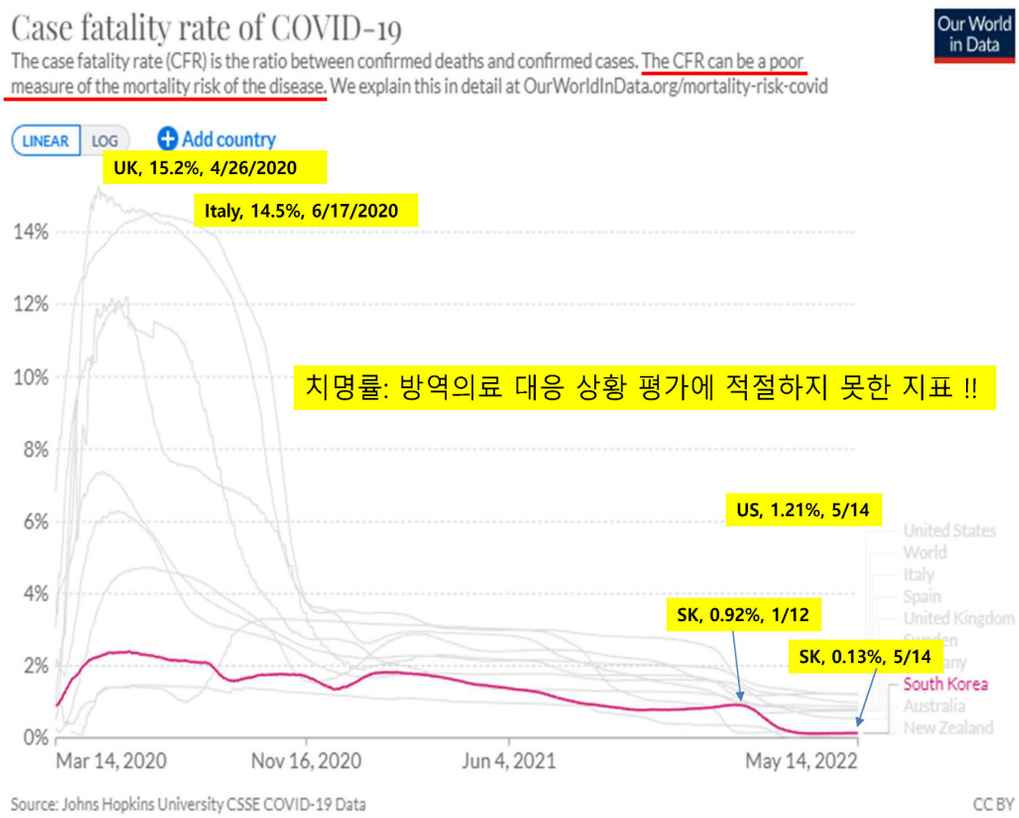
박멸(붉은선)-공존(푸른선)전략 국가간 GDP(좌)·봉쇄조치 수준(우) 비교 그래프


Daily new confirmed COVID-19 cases per million people
7-day rolling average. Due to limited testing,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is lower than the true number of infections.
Our World in Data
LINEAR
LOG
확산억제기
전면완화기
생활방역위
일상회복위
확진자 749,979 / 17,032,082
사망자 6,588 / 17,121
1/25
10/13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 대응체계
South Korea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Mar 1, 2020
Aug 8, 2020
Nov 16, 2020
Feb 24, 2021
Jun 4, 2021
Sep 12, 2021
Dec 21, 2021
May 14, 2022
Source: Johns Hopkins University CSSE COVID-19 Data
CC BY
Jan 28, 2020
May 14, 2022


Daily new confirmed COVID-19 cases per million people
7-day rolling average. Due to limited testing,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is lower than the true number of infections.
Our World in Data
LINEAR
LOG
SK
Aus
NZ
US
UK
Australia
New Zealand
Germany
South Korea
Japan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Mar 1, 2020
Aug 8, 2020
Nov 16, 2020
Feb 24, 2021
Jun 4, 2021
Sep 12, 2021
Dec 21, 2021
May 14, 2022
Source: Johns Hopkins University CSSE COVID-19 Data
CC BY
Jan 28, 2020
May 14,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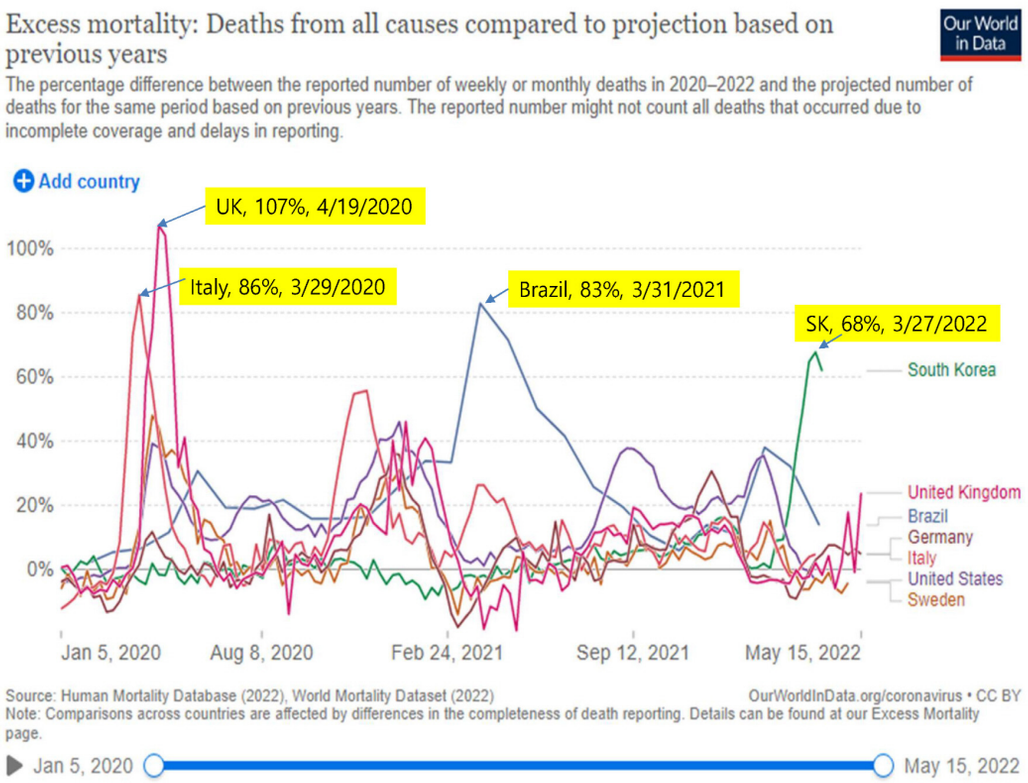

Daily new confirmed COVID-19 deaths per million people
7-day rolling average. Due to varying protocols and challenges in the attribution of the cause of death, the number of confirmed deaths may not accurately represent the true number of deaths caused by COVID-19.
Our World in Data
LINEAR
LOG
18
16
14
12
10
8
6
4
2
0
US, 7.78 per mil, 2/1
SK, 7.01 per mil, 3/25
UK, 4.82 per mil, 4/25
New Zealand
United Kingdom
Germany
Australia
South Korea
United States
Japan
Mar 1, 2020
Aug 8, 2020
Nov 16, 2020
Feb 24, 2021
Jun 4, 2021
Sep 12, 2021
Dec 21, 2021
May 14, 2022
Source: Johns Hopkins University CSSE COVID-19 Data
CC BY
SK, 0.36 per mil, 2/6
Feb 18, 2020
May 14, 2022


New reported cases
All time
Last 90 days
800,000 cases
600,000
400,000
200,000
Many states did not report data for the holiday
7-day average
Feb. 2020
Jun.
Oct.
Feb. 2021
Jun.
Oct.
Tests
Hospitalized
Deaths
Feb. 2020
Jan. 2022
DAILY AVG. ON JAN. 17
14-DAY CHANGE
TOTAL REPORTED
Cases 790,553 +62% 66,526,927
Tests 2,505,068 +96%
Hospitalized 156,505 +54%
Deaths 1,961 +54% 850,750



Indicators used in assessing and comparing the healthcare impact of COVID-19 among countries*

Indicator	Definition	Use	Limitations
Case fatality rate due to COVID-19	Total Covid-19 deaths / Total (lab) confirmed cases	To assess and compare the clinical severity of the on-going epidemic To assess the **medical care capacities** coping with the COVID-19 outbreak	**Not true risk of dying from COVID-19** Differing accessibility to diagnostic testing (unidentified cases in the community) Differing completeness and accuracies of reporting COVID-19 related deaths Delayed reporting of clinical endpoints
Infection fatality rate due to COVID-19	Total Covid-19 deaths / estimated cases(derived from seroprevalence studies) in total population	Real estimates of COVID-19 death rates, including presence of unreported infections in the denominator. True mortality risk ?	**Variable sampling regimes of seroprevalence study,** demographics, and healthcare resources Different levels of presence of asymptomatic or mildly symptomatic infections and lack of testing capacity
Mortality rate (per 1 M) due to COVID-19	Total Covid-19 deaths / Total population (per 1 M population)	Measure the probability that any individual in the population will die from the disease	**Differing completeness and accuracies of reporting COVID-19 deaths**
All-cause excess mortality	Number of deaths above expected baseline levels, regardless of the reported cause of death	measure of the **overall population health impact of COVID-19 pandemic**	Not account for **uncertainty in the reporting lag or completeness of these provisional data.**



오미크론 발 위기대응 긴급 대응 전략

➢ 범부처,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신속한 방역의료 대응전략 마련과 집행**을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통합 TF 구성 !
- 행안부, 기재부, 교육부 등 범부처 협력 실무 거버넌스 필요

➢ 역학조사 및 접촉자 **역학조사 체계 재정립**

- **전산화,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재택치료)**, dashboard 구축
- Digital contact tracing !

➢ 과학과 데이터 기반 위기대응 주도할 **전문가 중심 의사결정 구조** 필요

- 세분화된 자문위원회와 분절화된 용역과제로는 대비대응의 시의성 확보와 (검증가능한) 효과적 대응이 어려움
- **'과학으로서 방역' 패러다임 !**

(2022.1.20 청년의사 간담회)

복기 2:오미크론 위기에 대한 무전략적(!) 대응

➢ flattening the curve 와 피해 최소화 실패

- 방역의료 대응의 총체적 난국
- 지난 2여년 방역의료성과 실종
- 요양기관, 고령자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사망 피해 폭증

➢ 당시 방역의료 상황 평가에 부적절한 지표(치명률 ?)에 의존
- 방역정책 오판 초래(?)

➢ **위기대응 정책결정에 혼선: 경제정책 vs 방역정책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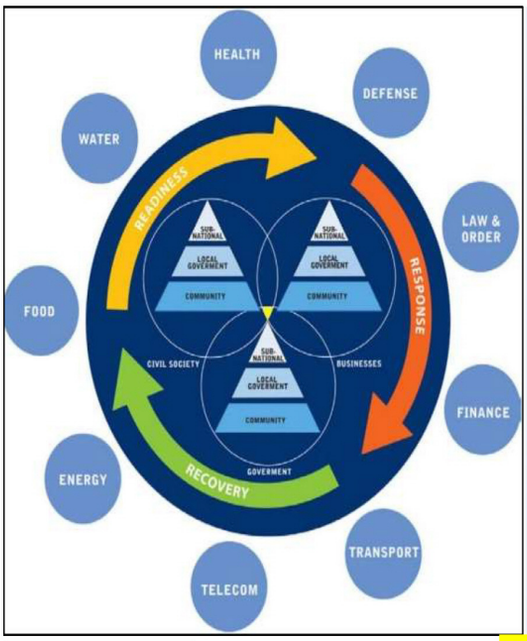
-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민생정책과 방역의료정책의 대립(?)
- 방역의료 전문가의 산발적 의견 개진 !

지속적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

방역 대비	1) Surveillance and monitoring 체계 구축 2) 역학조사 및 접촉자 추적조사 체계 재정립 3) 범부처,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의료적 대비	4) Worst case scenario 가정한 임상 자원 동원 계획 마련 5) 의료기관의 기능 유지와 비상 의료전달체계 구축
사회적 대비	6) 시민 주도,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 마련 7)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
과학적 근거 창출	8) 역학,임상, 방역 R&D governance and roadmap 마련

(2020.6.3. 국회 신현영 의원실 주최 국회 간담회)

Whole of Government and Whole of Society Approach



(WHO, 2012)

Summary

This policy brief discusses the role of effective governance, and in particular the rol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people, in building countries' resiliency and in responding to and managaing nation-wide cris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After outlining key elements of state-people governance relationships, the brief puts forward five policy messages emphasizing that (i): the COVID-19 pandemic and crisis while a challenge also presents an opportunity to design and operate a resilient public health infrastructure and effective institutions for handling crisis; (ii) the provision of essential services to all must be at the core of state-people governance relationship; (iii) social protection for all, especially the poor and vulnerable, is a pre-requisite to fostering a resilient society (iv) credible, legitimate and trusted state leadership is critical all the time but even more so during a nation-wide crisi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and (v) government in times of crisis must endeavor to keep the country unified, foster solidarity and avoid social disintegration.

(UN, COVID-19: Reaffirming State-People Governance Relationships, 2020.5)

목차

1. 코로나 19와 지속되는 위기: 복기가 필요한 지점

2. 감염병 팬데믹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이해

3. 우리나라 공중보건체계 강화 방안

4. 맺는 말.. .

코로나 팬데믹위기에서도
왜 공중보건 (Public Health)이 중요한가 ?

문제 제기의 배경

- 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기능하는 체계라 할 수 있음 (김창엽, 9/23 감염병포럼 발제문).

- 이 체계만으로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건강과 질병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없다는 문제의식의 확산과 더불어 **인구집단건강을 위한 공중보건학적 접근전략에로의 근본적 인식전환**(radical shift)이 절실히 필요함.

- 아울러, 이에 대응한 **'공중보건체계'**의 구성(또는 재구성) 논의는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건강권에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켜나갈 것 인지를 중심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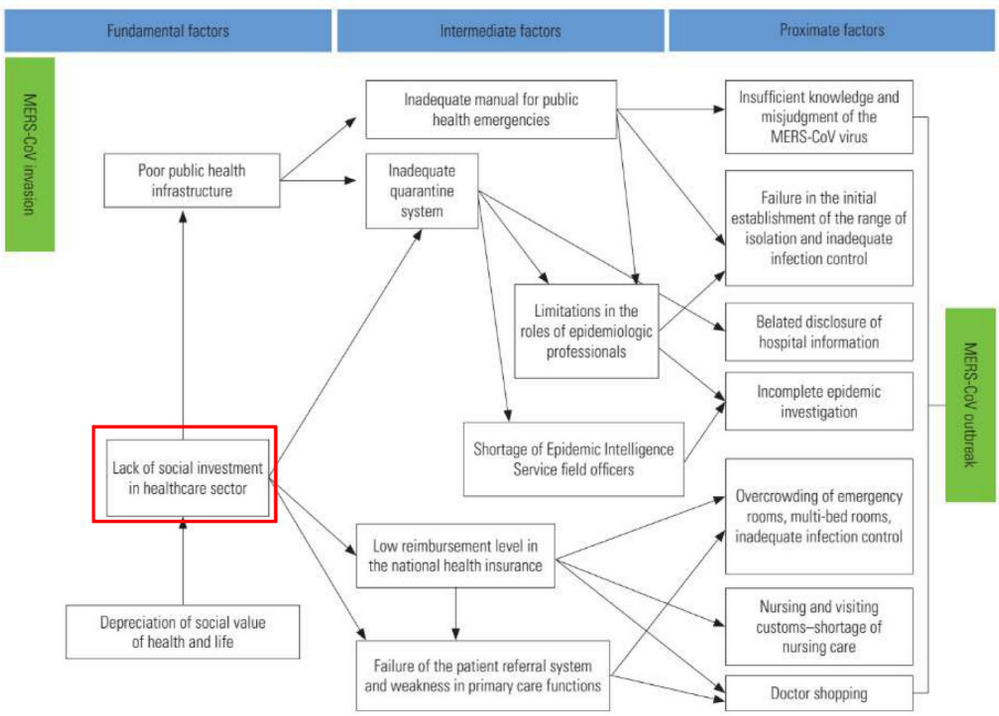


Figure 1. Structural factors of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outbreak in Korea.

(Dong-Hyun Kim, JPMPH, 2015)

공중보건학적 접근전략 : 인구집단의 건강문제 이해하기

Risk behavior in an individual

v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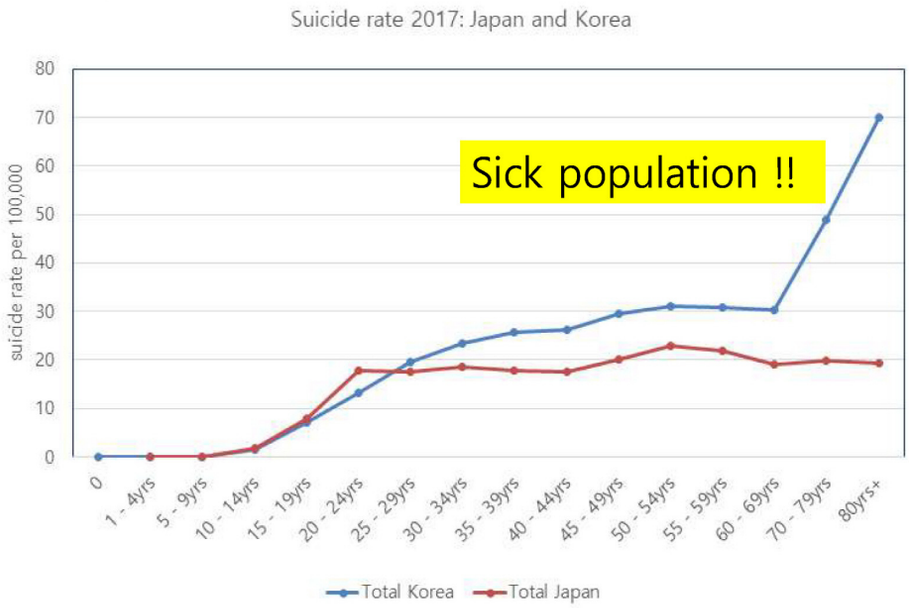
High rates in one population

↓

예) 개인의 자살행위 vs 한국사회의 높은 자살률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올바른 건강정책 수립에 중요

Why ??



연령군별 자살률 비교: 한국과 일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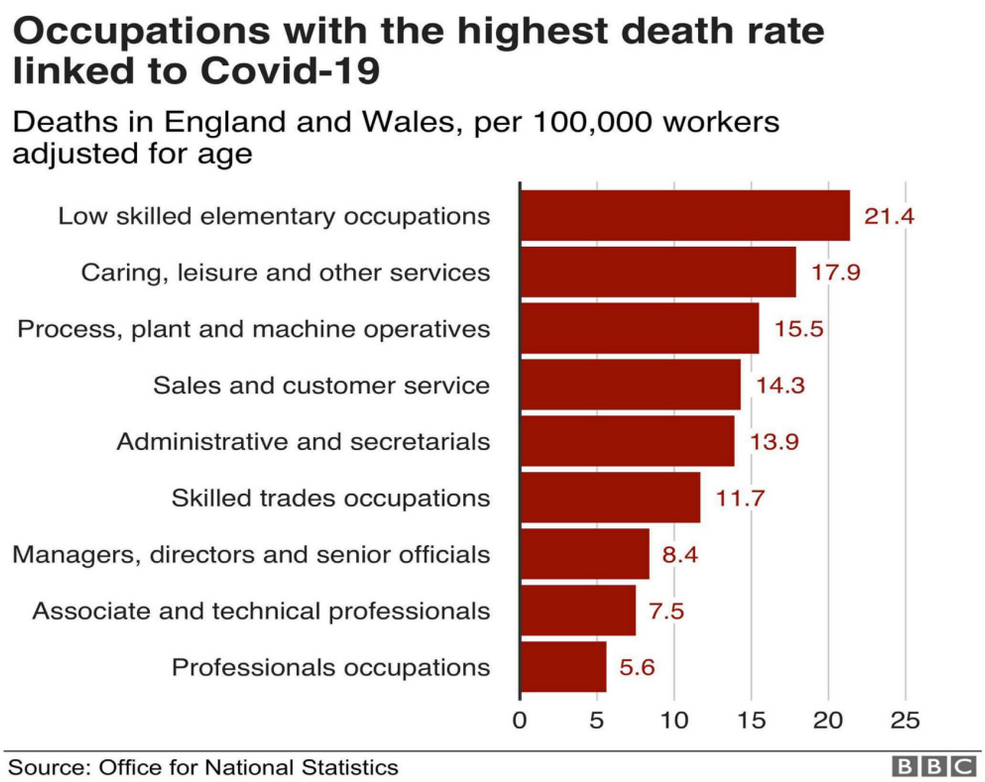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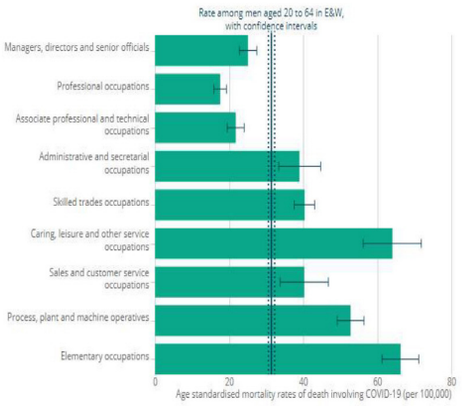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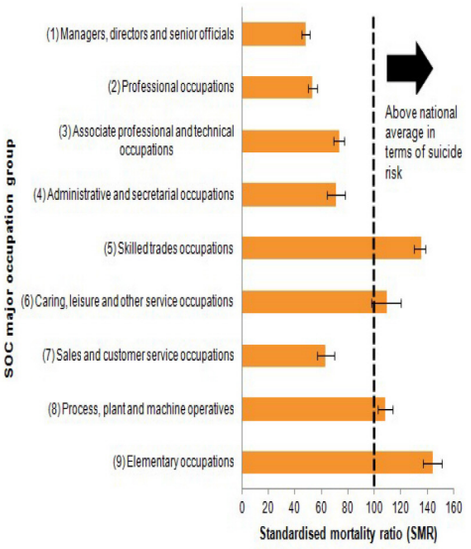
Figure 1: Men working in elementary occupations or caring, leisure and other service occupations had the highest rates of death involving COVID-19

Age-standardised mortality rates of death involving the coronavirus (COVID-19) in England and Wales, by major occupational group, deaths registered between 9 March and 28 December 2020



Sourc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 Deaths registered in England and Wa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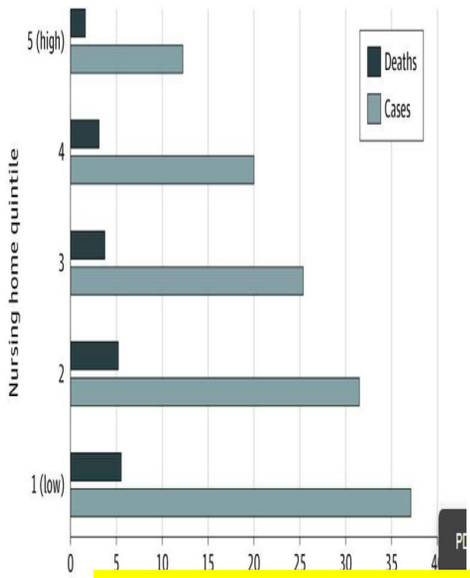
[Suicide by occupation, England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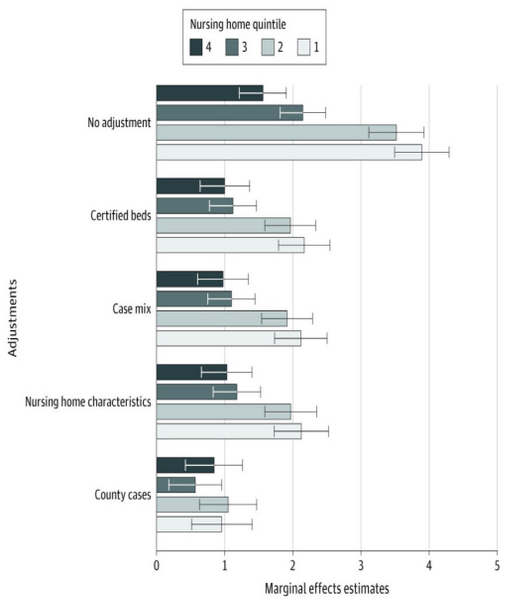


What are common denominators ?

Factors Associated With Racial Differences in Deaths Among Nursing Home Residents With COVID-19 Infection in the US

Figure 1. Unadjusted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Cases and Deaths Among Residents by Nursing Home Racial Composition Quint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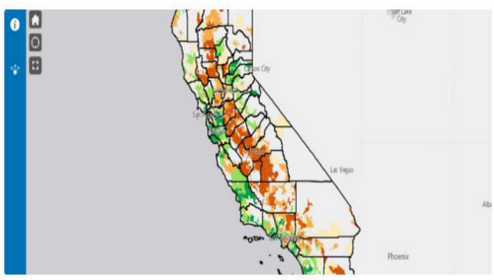
Nothing New as a Health Inequity Problem !! 1.

COVID-19 Vulnerability Index in CA

(코로나19 지역사회 취약지수)

UCLA Center for Neighborhood Knowledge HOME INDICATORS

Blog - Latest News



COVID-19 Vulnerability Indicators: California Data for Equity in Public Health Decision-Making

December 2, 2020 / 0 Comments / in publications / by CNK Staff

To help slow the spread of COVID-19 and save lives, UCLA Center for Neighborhood Knowledge and UCLA BRITE Center for Science, Research, and Policy developed vulnerability indicators aimed at identifying which neighborhoods in California are at most risk of becoming impacted by COVID-19 infections. The map includes four important indicators known to significantly increase a person's medical vulnerability to COVID-19 infection: 1) pre-existing health conditions, 2) barriers to accessing services, 3) built-environment risk and 4) social vulnerability.

To access the statewide maps: https://knowledge.luskin.ucla.edu/california-covid-19-medical-vulnerability/

Download the full report here: COVID-19 Medical Vulnerability Indicators: A California Data Model for Equity in Public Health State Level Decision-Making

Pre-Existing Health Vulnerability	The Pre-Existing Health Vulnerability (PHV) indicator was developed to capture risks of COVID-19 infectio…isting health conditions identified in academic journals a…ith experts consulted for this project. The PHV consists of …2) obesity, (3) heart disease, (4) fair or poor health status, (5) mental health and (6) food insecurity.
Built Environment Risk	The Built Environment Risk indicator is meant to identify areas at higher risk of COVID-19 infection due to lack of adequate space available to adhere to shelter-in-place mandates and…t the spread of COVID-19. The indicator is compos…density, (2) building structure density, (3) in-unit housing crowding, (4) availability of nearby parks and open space, and (5) average household size.
Barriers to Assistance Indicator	The indicator on Barriers to Accessing Services is meant to capture barriers that increase difficult…ices. This indicator is …population, (2) English language barrier, (3) lack of broadband internet, (4) lack of health insurance, and (5) availability of vehicles per person.
Social Vulnerability Index	The Social Vulnerability Index was created by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to identify vulnerable areas in need of preparation and response to hazardous events or nat…evel to which a community experiences …d to hazardous events, such as natural disasters. CDC uses 15 ACS variables. The variables are organized into four dimensions: (1) socioeconomic status; (2) household composition; (3) minority status and language; and (4) housing type and transportation.
COVID-19 Case Rates	Cumulative case rates per 100,000 persons: total cases as reported by county health departments divided by estimated 2020 population from the state of California. Repor… popul… early months of the pandemic. Despite a lack of precision and accuracy, the rates are, nonetheless, useful in capturing relative differences across populations and communities.

기저질환

환경적 요인

의료기관에의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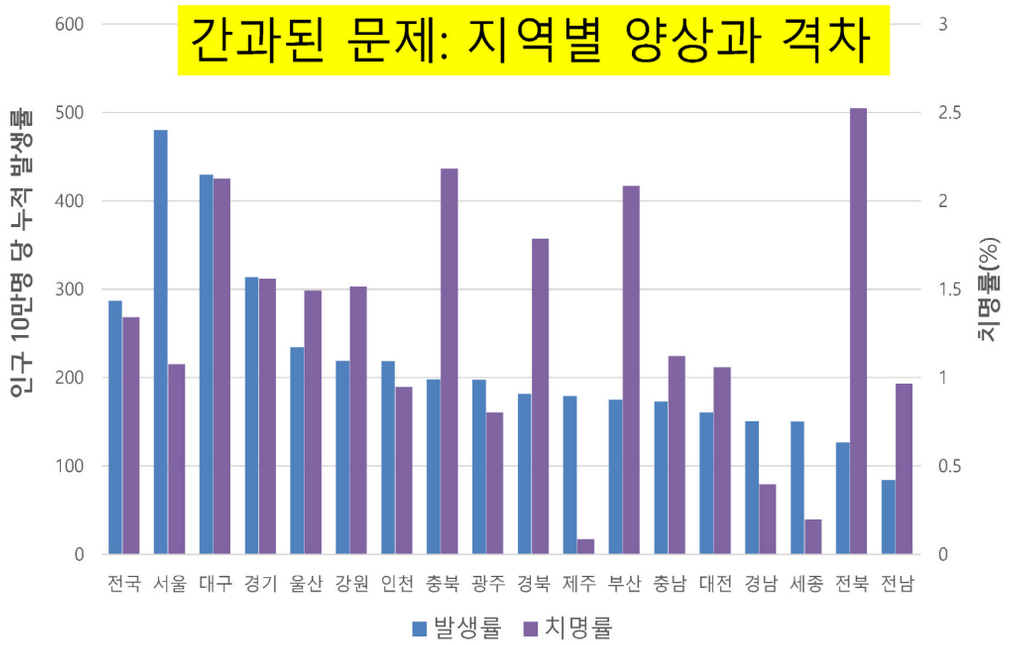
사회경제적 지수

인구 십만명당 누적확진자수

광역시도별 코로나19 누적발생률과 치명률

(2021.6.15 기준)

간과된 문제: 지역별 양상과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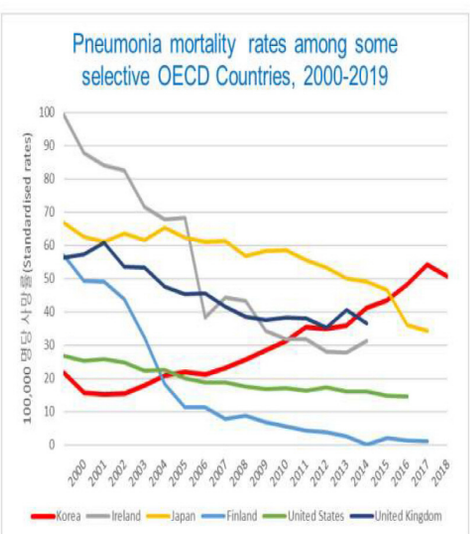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이해

Causes of the cause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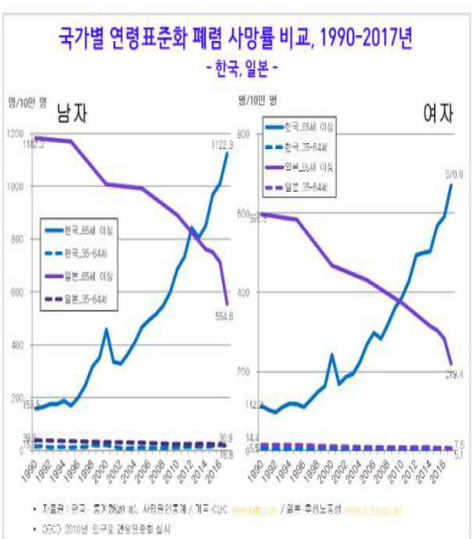
마스크 쓰기 !
2m 거리두기 !!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 !!!

: 콜센터, 물류센터, 이주민 작업장, 요양시설 !

→ 약한 고리,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대응 절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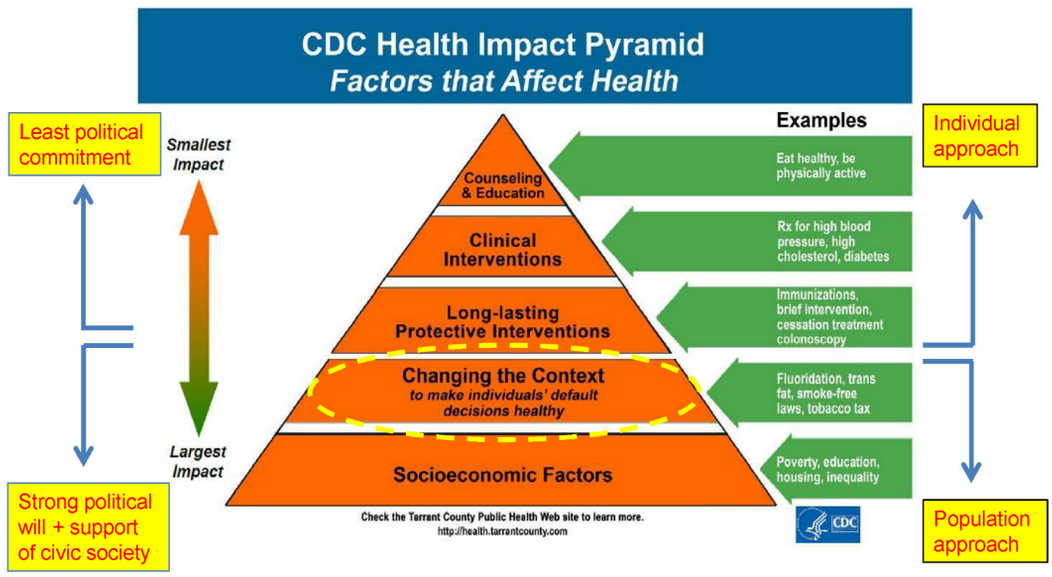


Graph 1 OECD 국가들의 폐렴사망률 변화 (2000-2019)



Graph 2 국가별 연령표준화 폐렴사망률 비교(1990-2017)

Framework for Public Health Action (Thomas Frieden, AJPH, 2010)



Key concepts of public health approach

Understanding on **social context** and

population perspectives of health 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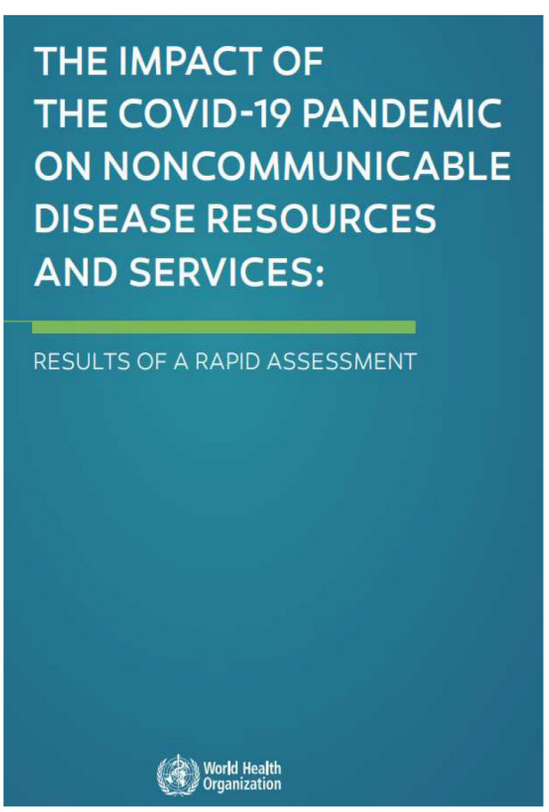
health care in one society



- People with underlying noncommunicable diseases (NCDs) such as hypertension, diabetes, cardiovascular disease, chronic respiratory disease and cancer have a high risk for developing severe and even fatal COVID-19

-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그리고 암**과 같은 **만성질환(NCD)**을 갖고 있는 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이나 사망 위험이 높다** !

37



- 고혈압관리, 당뇨, 암환자에 대한 **필수서비스가 붕괴**되고, 수백만명의주민이 돌봄을 받지 못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 이러한 **시스템 붕괴는 많은 위험행태에 노출위험**, 예를 들어 방역조치에 의해 초래된 **불건강식사, 음주, 신체활동 결핍, 스트레스**, 에 더하여 NCD 를 갖고 있는 이들을 더욱 열악한 처치에 빠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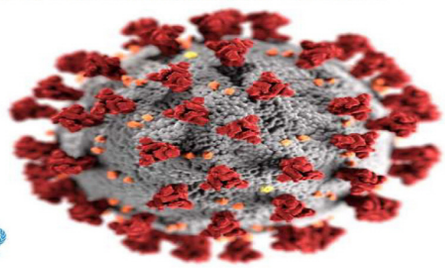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38

UPDATE 2021

Responding to non-communicable diseases during and beyond the COVID-19 pandemic

Examples of actions being taken by selected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Inter-Agency Task Force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on-communicable Diseases



UN INTERAGENCY TASK FORCE ON NCDs

World Health Organization

UNDP

Addressing NCDs must continue to be an integral part of the COVID-19 response and recovery at global, regional, national and subnational levels and building back better to achieve Agenda 2030.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and the pledge to leave no one behind must continue to be the overarching approach for integrated action

NCD 에 대한 주목은 세계, 권역, 국가, 그리고 소지역단위에서 코로나19 대응과 복구(Covid-19 response and recovery)와 Agenda 2030 성취를 위한 보다 나은 회복(building back better)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

39

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CONTEMPORARY REVIEW

COVID-19,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Opportunities for Preventing Cardiovascular Disease: A Conceptual Framework

Rienna G. Russo, MHS; Yan Li, PhD; Lan N. Đoàn, PhD, MPH; Shahmir H. Ali, BA; David Siscovick, MD, MPH; Simona C. Kwon, DrPH, MPH; Stella S. Yi, PhD, M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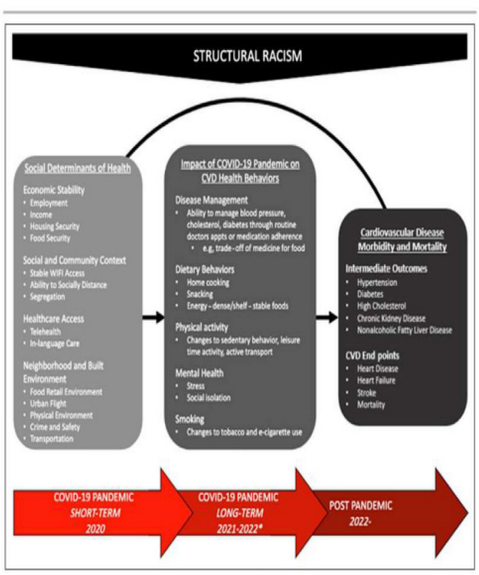


Figure 1. Effects of the pandemic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short- and long-term cardiovascular disease (CVD).
*Estimated time frame of the longer-term pandemic consequ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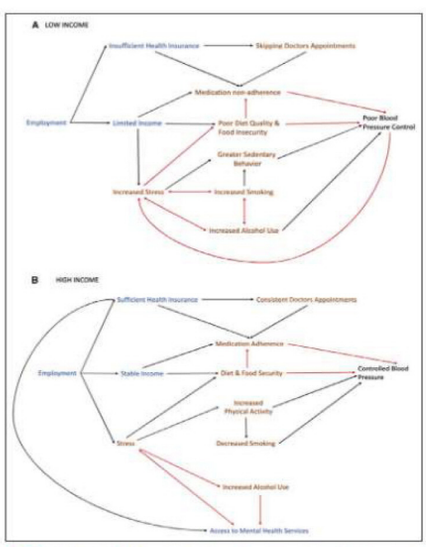


Figure 2. Example of applying systems thinking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blood pressure control among populations with hypertension.
Feedback loops are identified with red arrows.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re denoted in blue, and health behaviors are denoted in brown. A, Depicts the hypothetical experience of low-income individuals. B, Depicts the hypothetical experience of high-income individuals.

목차

1. 코로나 19와 지속되는 위기: 복기가 필요한 지점

2. 감염병 팬데믹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이해

3. 우리나라 공중보건인프라 강화 방안

4. 맺는 말.. .

공중보건 체계 구축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

→ 개념과 정체성 복원



공중보건의 가치와 지향성 ? !

- 건강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 건강불평등(젠더, 계층, 지역 등) 해소
-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 접근
- 보건의료뿐 아니라 타 분야(복지, 환경, 도시계획, 교통, 교육, 체육 등)와 협력
- 거버넌스(협치)
- 지역사회 자원 활용, 파트너십
- 주민참여, 주민주도, 주민역량강화

44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공중보건인프라 강화방안

I. (조직) 지역보건의료 전담 전문조직 강화: 공중보건위기 대응 control tower 구축

II. (기능) 지역보건소 기능개편과 역할 강화: 지역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III. (인력)공중보건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I. 공중보건 전담 공조직 강화

◆ 공중보건위기대응과 공중보건-공공의료 포괄적 기능을 전담할 중앙정부 역할 강화: **위기대응시 컨트롤 타워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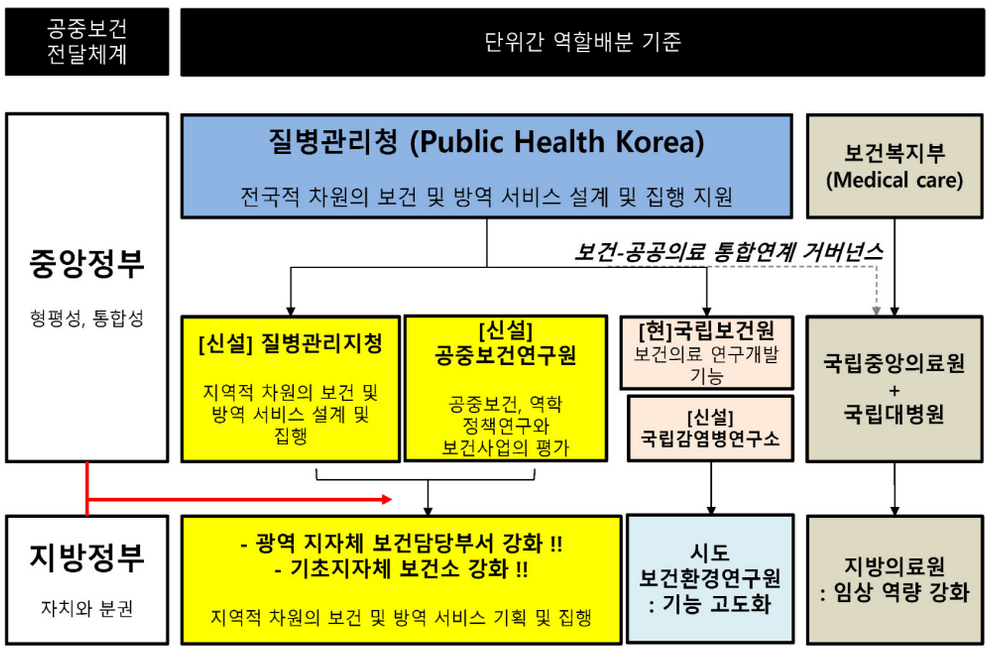
- 기존 **질병관리청의 운영(인사와 예산)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질병청 산하 광역단위 지역방역 거점조직 신설**

- 상시 또는 유사시 중앙- 광역- 지역을 연결하는 지휘 조직체계의 구축

- 중앙방역당국 - 중앙 및 지역단위 공공의료기관(+민간의료기관) - 광역단위 방역조직 및 지역보건소의 협력적 조직 구조 마련

공중보건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직 역량 강화

공중보건 거버넌스 기능정립 및 역할배분 (제안)



공중보건연구원의 기능과 역할

: 공중보건체계 구축을 주도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이 필요

➢ 연구, 사업, 교육을 통합하여 근거기반 질병관리 정책 수립과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1)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위한 위기평가 및 예측을 위한 전략
2) 질병과 손상 Surveillance and monitoring 체계 구축 → 통합 건강통계센터
3) 효율적, 윤리적, 전문적 역학 조사 체계 재정립
4) 공중보건연구(public health science): 역학 및 방역대응 연구사업
5) 지역중심 질병예방관리, 보건사업 및 방역대응 능력 강화

II. 지역 보건소 기능과 역할 강화

◆ 보건소의 기능개편을 통해 방역을 포함한 일상적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 **보건소의 위상강화와 기능개편** 통해 통합적 보건사업이 가능한 구조마련

- 지역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 역할 구현: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위기상황시 보건소(장)에 현장 컨트롤 타워 역할 부여**

- 보건소장 위상제고와 인사 안정성 확보

공중보건체계의 기능 강화

III. 지역사회 공중보건 전문인력의 안정적 양성과 배치

◆ 우리나라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을 현장(예를 들어, 지역, 학교, 그리고 직장 포함)을 중심으로 풀어나가고, **지역현장에서 인구집단 대상 공중보건학적 프로그램을 구상, 실천**하고, **이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나가는 인적기반**이 필요

◆ 이러한 현장 수요에 부응하여 지역사회건강(community health)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우수한 공중보건 전문(의료)인력(qualified public health professionals)의 체계적 양성**이 필요

◆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할 전문역학조사관 집중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임시적인 공중보건의 배치(x)

공중보건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적 역량 강화

역학-추적조사를 위한 지역사회 방역 조직/인력 인프라 !!!

- **전국 보건소 조직**: 감염병 대응 활동,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 **역학조사관**, Epidemic Intelligence Service(EIS) officials
- **광역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Infectious Disease Control Center(IDCC) in most of the local governments
- **보건소 감염병관리자 교육 프로그램 FETP**(Field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f for public health officials working at the public health centers of all counties(~250)
- **광역 및 기초지자체 행정조직의 역할**

공중보건위기와 대비해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중심 방역 대응 거버넌스 구축 필요 !

행정 조직 진단에 기반해 대대적 개편이 시급 !!

Time to Act
for (Re)building Public Health System

질병관리청은 공중보건 핵심 가치를
구현하는 정부 조직으로 발전해야 !!

목차

1. 코로나 19와 지속되는 위기: 복기가 필요한 지점

2. 감염병 팬데믹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이해

3. 우리나라 공중보건인프라 강화 방안

4. 맺는 말..

우리를 넘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 **Covid-19 in North Korea**
- **Vaccine for all**
- **Global health security**

'코로나19' 팬데믹

"북한 누적 발열자 400만 육박"…WHO에 문의도

입력 2022.06.04 (19:05) | 수정 2022.06.04 (21:47)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어제 오후까지 북한 전국에서 발생한 발열 환자가 모두 399만 6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84만 9천여 명이 완쾌됐고, 14만 6천여 명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오후 6시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발생한 신규 발열환자 수는 7만 9천여 명으로 닷새 연속 1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8만 6천여 명이 완쾌됐고, 신규 사망자는 1명이었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모두 71명이 됐고, 이에 따른 치명률은 0.002%라고 주장했습니다.

→ 수만~수십만의 대량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지원 방안 준비 !!

Vaccine for All

- Developing a vaccine against COVID-19 is the most pressing challenge of our time - and **nobody wins the race until everyone wins** (WHO)

- Allowing people to fall behind in the vaccine rollout due to their race, gender or economic situation only exacerbates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It could also slow the pandemic recovery (World Economic Forum, 2021, March)

SARS-CoV-2 elimination, not mitigation, creates best outcomes for health, the economy, and civil liberties (Lancet, 4/28/2021)

National action alone is insufficient and a clear global plan to exit the pandemic is necessary. Countries that opt to live with the virus will likely pose a threat to other countries, notably those that have less access to COVID-19 vaccines.

팬데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조치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전 지국적 계획이 필요하다.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 특히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되지 않는 나라들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Health Security and the COVID-19 Pandemic

➢ "Health **security**" should no longer drive global health policy !!

- countries in every region, especially high-income nations, repeatedly adopted **nationalistic policies** and were **hostile or indifferent to collective action** (Celia Almeida, 2021)

➢ Where to go ??

- to restore respect for nature,
- protect human rights,
- mitigate global health inequities,
- and achieve better conditions of life for the most vulnerable

➢ **Global Health Solidarity !!**

Preparing for the next "Disease X"

** Disease X represents the knowledge that a serious international epidemic could be caused by a pathogen currently unknown to cause human disease. The R&D Blueprint explicitly seeks to enable early cross-cutting R&D preparedness that is also relevant for an unknown "Disease X"*

반복되는 공중보건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부실한 공중보건인프라와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부족이다.

Back to Better Normal !

보다 나은 일상의 회복을 위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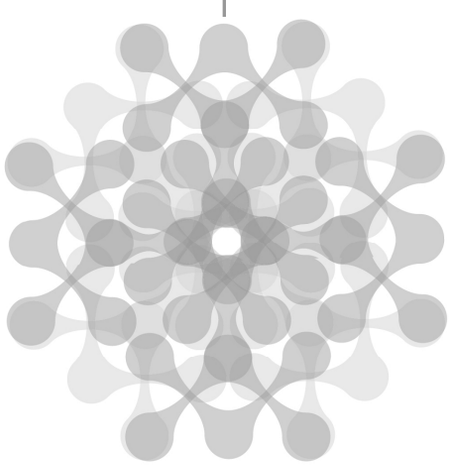
김 동 현

(dhkims@hallym.ac.kr)

발표 8

지역공동체 회복 방안

황 하
한국행정연구원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한국행정연구원
황하 부연구위원(사회통합재난안전연구실)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Chapter 1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변화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형성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비대면 수업과 재택근무의 확산 -> 불규칙한 일상생활

◆ 가공식품, 간편식, 알콜섭취 증가 -> 식습관 균형 붕괴, 체중 증가

◆ 식습관의 변화로 인한 산업 생태계의 변화(키오스크, 드라이브스루, 음식배달 서비스 등)

◆ 주거공간에 다양한 가치 부여(쇼핑, 영화, 게임, 요리, 운동, 경제, 레저 활동 등)

3

재택근무도 좋지만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고파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직원간 소통 네트워크 약화

◆ 코로나19 초기에는 재택근무의 업무 효율성이 평균적으로 64.7% 떨어진다는 결과

◆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근로자 대다수(91.3%)가 재택근무에 만족한다는 응답

◆ 그러나 세계적으로 재택근무로 인한 참여와 생산성에 대한 만족도 하락, 소속감을 위해 사무실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 증가

4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약화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종교는 적절한 질병교육을 제공하고 예방활동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정부의 권고를 무시

◆ 코로나19는 대면접촉이 중요한 사회적 관계 혁성의 수단인 종교 동동체의 활동과 소속감에 타격

◆ 사교모임, 취미·여가모임, 운동모임 등도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활동 제한

◆ 사회적 관계가 대면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일부 친밀한 관계를 제외하고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짐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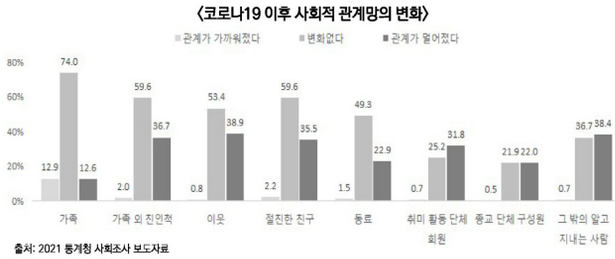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을 제외한 전반적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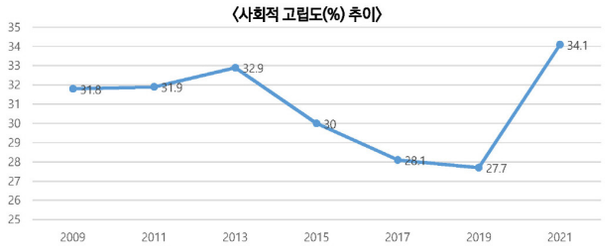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고립도가 급격히 증가함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출처: 2021 통계청 사회조사 보도자료

〈사회적 고립도(%) 추이〉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탈(https://kosis.kr/)에서 사회통계 부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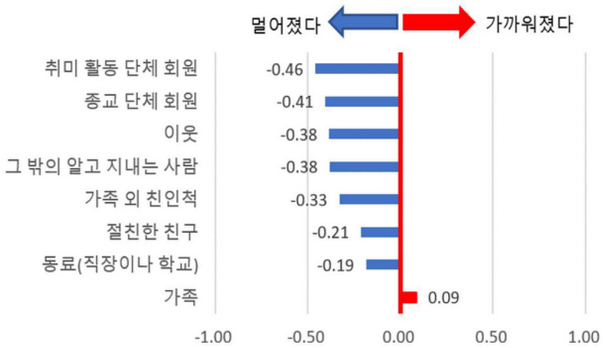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간의 관계가 멀어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사람들 간의 만남을 어렵게 하였으나, 반대로 가족 간의 관계를 가깝게 만드는 계기가 됨

◆ 그러나 가족을 제외한 모든 관계가 멀어짐

〈코로나19로 인한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



7

코로나19로 인한 관계의 변화는 나이가 많을 수록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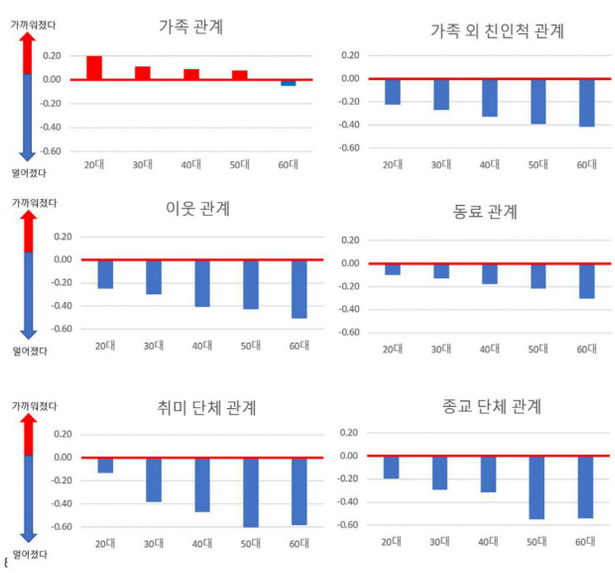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임(모든 관계에서 $p<0.01$)

◆ 인터넷이나 SNS 등 비대면 관계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 비해 기술적 매개를 이용한 관계의 경험이 부족한 중년층 이상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

◆ 6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역시 멀어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코로나19로 인한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 세대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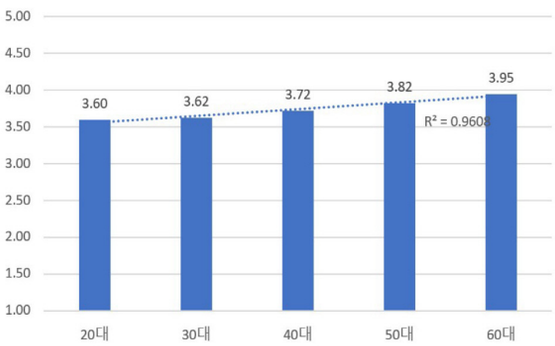
젊은 세대에게 공동체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음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이 별로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일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었고, 코로나19는 이러한 추세를 보다 강화 시켰다고 볼 수 있음

〈공동체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세대별 차이 (5점 척도)〉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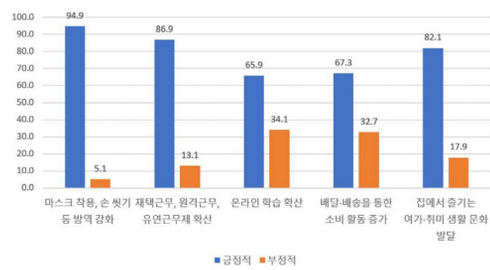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 앞으로 지속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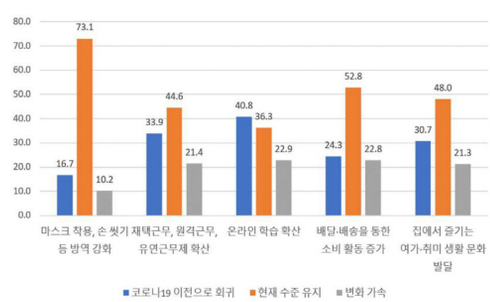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방역행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94.9%), 재택근무·원격근무·유연근무제의 확대(86.9%) 및 집에서 즐기는 여가, 취미 활동의 증가(82.1)에 대해서도 긍정적

◆ 대부분의 변화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되거나 가속될 것이라고 응답

◆ 다만 온라인 학습(40.8%), 재택근무·원격근무·유연근무제의 확대(33.9%) 등 기술매개 근무와 학습에 대해서는 이전 상황으로 회귀할 것이란 응답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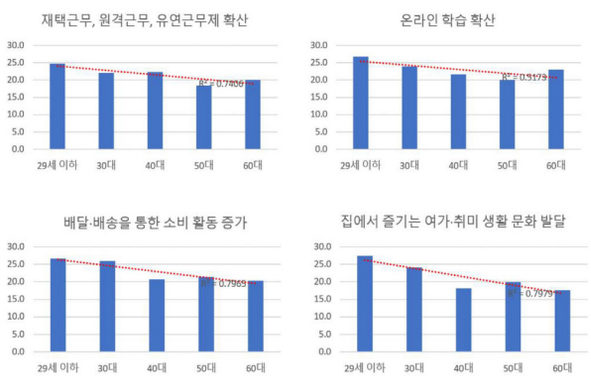
10

변화의 가속에 대한 응답은 젊은 세대일 수록 높게 나타남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코로나19에서 기술매개 비대면 활동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었던 재택근무·원격근무·유연근무제 및 온라인 학습의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의 변화가 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는 경향

◆ 다만, 방역행태의 가속 여부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보다 나이 든 세대들이 변화가 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



11

Putnam(2000), 미국의 전통적 공동체 활동의 몰락과 변화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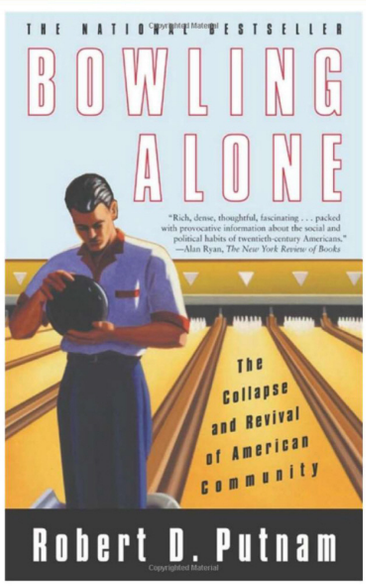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첫째, 전통적 가족 개념이 해체되면서 맞벌이 가구가 경험했던 시간과 돈의 압박

◆ 둘째, 도시의 팽창으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과 기존 공동체의 해체

◆ 셋째, 텔레비전 등 여가시간을 혼자서 보내게 하는 기술적 변화

◆ 넷째, 전통적 공동체주의를 가진 세대가 개인적인 신세대로 교체되는 세대교체 효과



12

Chapter 2

감염병 취약성, 취약성의 악순환, 포용적 회복 정책

취약성, 호두까기에 물려있는 호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취약성은 두 가지의 상호작용으로 발생

◆ 첫째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조건

◆ 둘째는 외부 또는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가해지는 충격

◆ Freks 외(2011, p.109)는 이러한 취약성의 특성을 빗대어 '호두까기에 물려있는 호두(a nut between the two legs of a nutcracker)'에 비유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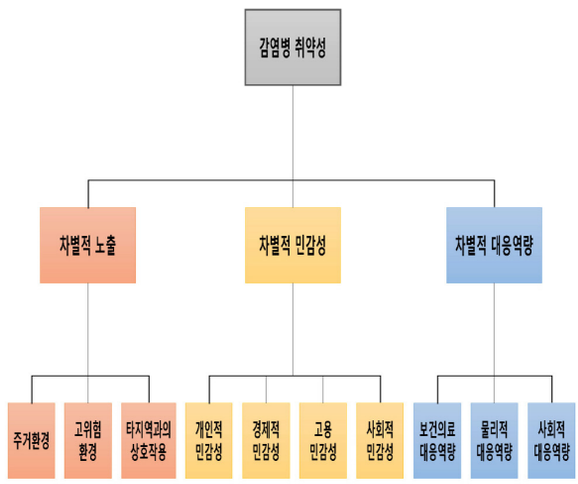
감염병 취약성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기존의 감염병 취약성 개념은 개인의 역학적 민감성(나이, 기저질환, 생활습관 등)만을 반영

◆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알지 못했던 감염병 취약성의 양상이 확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감염병 취약성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활발

◆ 감염병 취약성을 '차별적 노출', 차별적 민감성', '차별적 대응역량'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정의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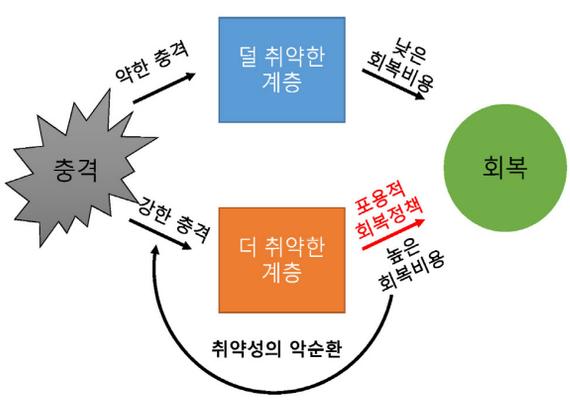
취약성의 악순환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재난에 취약한 계층은 다른 계층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며,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함

◆ 재난에 더 취약한 계층은 재난의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그 결과 재난에 대한 취약성은 더 커지게 됨

◆ 취약성의 악순환은 다음번 재난으로 인해 취약한 지역 또는 계층의 취약성이 더욱 커지면서 점점 심화되게 됨



16

포용적 회복정책1: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장애인들은 디지털 역량교육에 대한 동기가 강한 반면 교육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음

◆ 시설 부족, 교육강사의 불안정한 고용상태, 융합역량에 대한 평가 절하로 우수인력 확보 어려움

◆ 장애인들은 디지털 역량강화의 동기가 높아 기회와 환경개선 필요

◆ 많은 이들이 은퇴 이후 급속한 디지털 기술 발전속도를 따라갈 동기가 약해지고 활용기회 축소

◆ 디지털 역량 교육 사업, 디지털포용추진계획, 디지털뉴딜 등 노력

◆ 질적 접근의 미비는 정부 교육사업에 참여하는 한정된 이들이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문제

◆ 고령층은 동기 제시가 중요(코로나19는 비대면 사회참여라는 뚜렷한 동기 제공)

17

포용적 회복정책2: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보편적 디자인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유럽연합의 접근성 법안(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요구 사항)

◆ 사회기본서비스가 디지털 긱로 제공될 때, 개인의 신체적, 사회환경적 조건 때문에 차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의무

- 인식가능성: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터페이스 제공
- 작동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및 요소 탐색이 작동 가능해야 함
- 이해가능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정보 및 작동이 이해 가능해야 함
- 견고성: 다양한 사용자 대행수단이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8

포용적 회복정책3: 디지털포용법 제정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디지털포용법은 향후 다시 직면할 수 있는 감염병 시기에 차별없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코로나19 발생 이전 '디지털 ' 은 여러 선택수단 중 하나, 그러나 코로나 19는 디지털 수단만이 유일한 수단이 될 때의 사회를 경험하게 함

◆ 디지털 수단이 유일한 선택수단일 사회가 도래하였을 때 모든 국민이 개인의 역량이나 조건 때문에 위험에 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

19

포용적 회복정책4: 디지털 교육환경 개선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교육부 2022 업무계획에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을 위해 대면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모색

◆ 그러나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장기 과제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 필요

◆ 첫째, 메타버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의 활용을 고려하여 학교 내 디지털 인프라의 우수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

◆ 둘째, 코로나19 이전에는 디지털 기기는 수업 방해와 사용 중독의 원인으로 취급, 수업 방식의 디지털 기기 활용 비중을 높이고 올바른 디지털 기기 사용 경험과 기준을 습득하도록 교육

◆ 셋째,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촉진

20

포용적 회복정책5: 허위정보 관리체계 마련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허위정보 유포, 디지털 문해력과 보건 문해력이 취약한 계층 중심 피해 발생
- 허위정보 식별 역량 교육, 올바른 정보공유의 목적과 방법 교육, 다양성 존중에 대한 교육 등
- 허위정보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언론, 온라인 플랫폼 등 매체의 자율적 관리기능 강화
- 인공지능 큐레이션 기능에 대한 규제

21

포용적 회복정책6: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코로나19는 가정에서의 아동 돌봄을 가중시켜, 아동 돌봄이 어려운 부모들에게 돌봄 공백을 야기
- 설문조사 결과 아동 돌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전체의 76.8%
- 재택근무, 육아휴직 적용 대상 확대 및 이행실태 점검
- 양육자 교육지원 및 정서적 지원 제공
- 분절적 정부 부처 간 돌봄 서비스 연계성 강화(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정비 필요)
- 저소득, 한부모, 장애아동, 이주민 가정 등 취약계층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22

포용적 회복정책7: 공동체 회복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지역 내 공동체는 재난 상황에 대한 긴급대응의 최전선, 중앙 집권적 재난관리체계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 우리나라는 주민자치회와 같은 전통적인 지역공동체가 사실상 해체되어 있어 재난 대응을 개인의 역량에 맡기거나 공공에 의존하는 상황

◆ 지역공동체 및 지역사회 구성원을 재난관리의 주체로 인정, 비상시 공공기관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민간조직 발굴 및 역량강화, 지역 공동체간 일상적인 교류 증진 방안 마련 필요

◆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시점. 일정 규모 이상의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자발적 공동체를 지원하고 일정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 등.

23

THANK YOU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MEMO

MEMO

MEMO

MEMO